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차 례

I. 연구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7
4. 연구의 흐름도	8
5. 연구의 기대효과	9
II. 국내·외 ODA 여건 및 정책변화	11
1. ODA의 역사적 흐름	11
2. 국제 ODA 주요 이슈	21
3. 국내 ODA 주요 이슈	34
4. 정책적 시사점	40
III.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43
1.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형태	43
2.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53
IV.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73
1. 주요 ODA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 체계	73
2.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2
3. 시사점	96
V.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99
1. 기본방향	99
2. 추진전략	103
3. 추진체계	109

■ 참고문헌	115
■ 부록 1: 국토해양분야 분류표	119
■ 부록 2: KOICA 초청연수사업	121
■ 부록 3: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현황	123
■ 부록 4: 산하기관 자체연수사업 현황	125
■ 부록 5: 국토해양분야 ODA 활용사례	126
■ 부록 6: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AD 현황	132

표 목 차

<표 I-1> 국제협력 추진 체계 구도	5
<표 I-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7
<표 II-1> 세계대전 후 ~ 195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1
<표 II-2> 196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2
<표 II-3> 197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4
<표 II-4> 198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4
<표 II-5> 199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7
<표 II-6> 200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19
<표 II-7> ODA의 역사적 흐름	20
<표 II-8>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의 주요 내용	22
<표 II-9>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의 역사	25
<표 II-10> G20 서울 정상회의 부속서 인프라 관련 주요내용	30
<표 II-11> 지역개발은행 현황	31
<표 II-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36
<표 II-13>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 (SWOT)	38
<표 III-1>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43
<표 III-2>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조직 현황	44
<표 III-3> 유·무상 원조 체계 비교	45
<표 III-4> 부처(기관별) ODA 집행 실적(2009)	46
<표 III-5> KOICA 주요 수행사업	48
<표 III-6> KOICA 산업에너지분야 기본방향	49
<표 III-7> 우선 추진 사업	51
<표 III-8> 국토해양분야 무상 ODA 초청연수사업 현황	54
<표 III-9> 국토해양분야 무상 ODA 전문가 파견 현황	56
<표 III-10> 국토해양분야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ODA 현황	58
<표 III-11> 국토해양분야 EDCF 현황	60
<표 III-12> 유·무상 연계사업 현황	63
<표 III-13> 라오스 메콩강변 사업 평가	64
<표 III-14>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 사업	65
<표 III-15> 한국의 '10 ODA 신탁기금 예산 현황	69

<표 III-16> 우리나라 신탁기금 유형	69
<표 III-17> 신탁기금 규모	69
<표 IV-1>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	81
<표 IV-2>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2
<표 IV-3>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83
<표 IV-4>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4
<표 IV-5>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84
<표 IV-6>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5
<표 IV-7>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86
<표 IV-8>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7
<표 IV-9>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87
<표 IV-10>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8
<표 IV-11>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88
<표 IV-12>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89
<표 IV-13>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90
<표 IV-14>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91
<표 IV-15>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91
<표 IV-16>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92
<표 IV-17>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93
<표 IV-18> 원조통합그룹	94
<표 IV-19> 원조분절그룹	95
<표 IV-20> 한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98
<표 V-1> 중기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104
<표 V-2> 사례 1: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국별지원전략의 구조	105
<표 V-3> 사례 2: 영국 DFID의 베트남 국별지원전략의 구조	105
<표 1> 연수형태 중요성 대륙별 분석	121
<표 2> Scholarship Program 코스 커리큘럼	129
<표 3> 필리핀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131
<표 4>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2
<표 5>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3
<표 6>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4
<표 7>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5
<표 8>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6

<표 9>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7
<표 10>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8
<표 11>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39
<표 12> 한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140

그 립 목 차

<그림 II-1> ODA의 역사	11
<그림 II-2> 파리선언의 추진과제와 주요 지표	24
<그림 II-3> 부산총회의 구성 및 주요 주제	25
<그림 II-4> 우리나라 ODA 공여역사 흐름도	35
<그림 II-5> 국제협력 추진 체계 구도	37
<그림 II-6>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39
<그림 III-1> KOICA 중점지원분야 개편	49
<그림 III-2>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	50
<그림 V-1> 국토해양분야 개발협력 인력파견 개념도	108
<그림 V-2> 팩키지형 연계사업 추진	110
<그림 V-3> 가칭 “인프라개발협력 실무협의회” 개념도	114
<그림 1> 연수형태 중요성 분석	121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까지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선진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의존했던 후진 개발도상국(“개도국”)이었다.

그 후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발전의 결과 1990년 초에는 ODA를 개도국에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정식회원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선진원조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러한 지위변화에 따르는 중요한 의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2000년 국제연합(UN)의 개도국원조의 기준으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뒤를 이은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HLF)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함을 의미한다. 2003년 로마선언, 2005년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제안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2008년 아크라실천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2011년 부산선언(New Global Compact, Busan Declaration) 등 국제선진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ODA의 제공 기준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미 ODA의 제공규모를 2008년 총국민소득(GNI) 대비 약 0.09%에서 2015년까지는 현재 DAC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0.25%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원조효과성 향상 등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OECD/DAC 가입에 따른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제적 공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더욱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3대 선진화 전략¹⁾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질적 해법인 글로벌개발협력의 주도자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서울개발컨센서스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통합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1992년 UN에서 시작된 유엔기후

1) 3대 선진화 전략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유·무상연계 강화 등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

변화에 대한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그 이후에 전개된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에 우리의 ODA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ODA 역할 강화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ODA의 기본방향은 인프라 개발협력 또는 개발협력에 우리 ODA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른 ODA 선진화 방안에 국토해양부가 적절히 조응할 것을 주문하며 동시에 국토해양부의 ODA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ODA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분절화 된 ODA 집행체계를 네트워크화 하는데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 국토해양분야의 양자 및 다자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주요국의 ODA 거버넌스와 국토해양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국토해양분야 ODA의 추진 체계와 전략을 도출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공동이익실현에 기여하는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분야 ODA의 실행체계(Governance)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의 유상, 무상, 유·무상연계사업, 다자간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실행체계와 분야별 전략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제2장에서는 국내외 ODA 여건 및 정책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ODA 역사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시적으로 살펴본 후 ODA 관련 국내·외 여건 및 정책변화를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체계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EDCF(유상원조)와 KOICA(무상원조)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ODA 공여국들의 거버넌스 체계와 국가별 대외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각 국가별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ODA 정책 적극 대처, ODA 사업의 발굴 및 확대, 초청연수 및 인력파견 강화 등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2. 연구의 방법

1) 국토해양분야 통계조사

OECD DAC가 “Guidelines For Reporting In CRS++ Format”에서 제시한 ODA통계분류는 6개의 대분류, 21개의 중분류, 197개의 소분류로 구분되는데, 현재 공개된 OECD 통계는 중분류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KOICA통계나 EDCF통계는 소분류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토해양분야 ODA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분류로 통계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불가피하였다. 이를 위해 197개의 소분류 항목 중 국토해양분야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려 이들을 포괄하는 중분류 항목들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국토해양분야 ODA 통계의 중분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결과는 “<부록 1> 국토해양분류표”를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ICA와 EDCF로 이원화되어 있는 ODA사업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분야 범위를 구분한다.

<표 I -1> 국제협력 추진 체계 구도

구분	상세구분
주택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주택개발 등
교통 및 물류	운송정책, 도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로운송,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등
건설 및 수자원	건설정책, 수력 발전소, 수자원정책,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상·하수 시스템, 하천개발, 폐기물관리 및 처리, 홍수방지 및 대책 등
도시개발	도시개발 및 관리 등
지역개발	농촌개발, 재난방지 및 대비 등
해양	어업정책 및 관리, 수산물 유통지원 등

주. 상세구분 분류코드 및 항목정식명칭은 첨부자료 참고

국토해양분야는 다음과 같이 주택,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도시개발, 지역개발, 해양으로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부문은 주택정책, 주택개발 관련 ODA, 교통 및 물류부문은 운송정책과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을 이용한 운송, 그리고 창고관련 ODA, 건설 및 수자원부문은 건설정책, 수자원정책, 하천개발 등과 관련한 ODA, 도시개발부문은 해외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및 관리 관련 ODA, 지역개발부문은 도시개발 외의 농촌개발, 또는 방재 관련 ODA, 해양부문은 어업정책, 수산물 유통 관련 ODA이다.

2) 문헌 및 자료조사

선행 연구보고서, 정부정책자료, 관련 기관의 DB 자료 등 조사 및 분석을 하고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KOTRA, OECD, World Bank 등의 자료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3)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원고위탁을 통한 KOICA, 해외건설협회 및 MDB 전문가를 활용하고 우리의 국토해양분야 ODA의 국제비교를 통해 DAC 주요 회원국의 ODA 정책과 국토해양분야 지원 실적을 분석한다. ODA 역사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선진국 및 MDB의 ODA 활용 사례를 분석한다.

4) 「연구자문회의」 구성을 통해 정책 활용 및 현장성 강화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과,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수출입은행(EDCF), KOICA,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국토해양분야 정부 및 공기업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토목 분야 해외실적이 높은 업체(삼성, 현대엔지니어링 등) 및 국토해양분야 해외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의 전문가 자문을 구해 정책 활용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3.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선행연구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 다변화 전략, MDB 활용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ODA 자체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국내 ODA에서 국토해양부가 점해야 할 역할과 위상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기존의 국토해양부가 ODA에 있어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ODA에 추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을 자가 성찰하는 연구로서 ODA 전략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연구이다.

<표 I-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범위 및 내용
주요 선행 연구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	-1차년도에 제시하지 못했던 시장다변화 전략 및 시장 ODA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해외도시개발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의 지역적 다변화와 건설 위주의 해외도시개발로부터 계획수립 및 개발 시장으로 분야 확대, ODA를 활용한 해외도시 개발시장 전략을 모색	-문헌 및 통계조사 -인터뷰 조사 -사례조사 -국제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조사 -초청연수 연수생과 워크숍을 통한 개도국 needs 파악 -Country Report 발간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II)	-기초문헌조사 -MDB 제공 공식문서 정리 -MDB 관련 국내외 연구 문헌 분석 -현지 MDB 기관 방문조사	-해외도시개발의 여건 변화 및 해외도시개발 시장 현황 -ODA의 현황 및 활용 전망 -해외도시개발 시장 및 ODA 활용사례 -해외도시개발 시장 확대 및 ODA 활용 전략 수립
본 연구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해양분야를 주택,수자원,주택,도시개발,지역개발,해양 등 세부화하여 통계 분석 -ODA 주요국의 ODA 거버넌스 체계 분석 -각종 문헌 및 자료 조사 -연구자문위원회 등	-MDB의 조달시장과 사업절차(MDB주도형) -민간사업자의 개발 프로젝트에 MDB 투자 유치방안(사업자 주도형) -개도국 PPP사업에 MDB 활용방안 -MDB 활용 증대를 위한 제언 -국토해양분야 ODA 여건변화 분석 -국토해양분야 ODA의 유·무상 및 유·무상 연계, 다자간 사업 현황 파악 -타국의 ODA 거버넌스 및 국토해양분야 사례조사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전략 및 추진체계

4. 연구의 흐름도

Stage 1_ 연구의 개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역사에서 수원국에서 동여국으로서의 원조 이행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ODA 선진화 방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분야ODA 활성화 방안 마련 -실행체계 구축방안 제시 -국토해양분야ODA 현황 및 전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연구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분야 통계조사 -단편 및 자료조사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연구자문회의 구성을 통해 정책 활용 및 현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개념 재정립 -국토해양분야에서의 ODA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실시체계 정비 	

Stage 2_ 국내·외 ODA 여건 및 정책 변천		
ODA 역사	국내 ODA 주요 이슈	국외 ODA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대 이전부터 2000년 최근까지의 ODA의 역사적 흐름 및 원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행 -ODA 선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조규범의 발생과 변화 -G20 서울개발컨센서스 지역 통합 인프라 개발협력추진 -부산세계원조개발총회의 -지역개발은행의 역할 증대 -새천년개발목표 -파리선언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원조정책의 성과중시형 ODA 강조, 지원기초 및 체계화 -원조실시체계 통폐합을 통한 원조실시체계 개선 		

Stage 3_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체계의 개요 및 실적 -ODA 사업 수행기관별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KOICA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부문, 공공부문, 민간협력 부문의 국토해양분야 ODA 유무상 현황 및 연계사업 -각부문의 각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우리나라의 다자간 개발협력기구 지원 현황 -국토해양분야 신탁기금 현황 	

Stage 4_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주요 ODA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선진 공여국들의 다양한 개발원조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 정리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한국의 대외원조의 현황과 특징 -국가별 및 그룹별 ODA 국토해양분야 세부영역 비중 비교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분야 ODA 사업의 중요성 -유무상 ODA 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성과 협력성 -국토해양 ODA 세부분야별 균형 발전 	

Stage 5_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 -유무상 ODA 사업의 연계 -국토해양 세부 분야별 사업 강화 -중앙컨트롤타워 형성을 통한 국토해양 ODA 네트워크 구축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ODA 전략 수립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 -국제개발협력 인력 파견 -ODA 사업의 발굴 및 확대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인 ODA 인프라개발협력센터 설립 -중앙정부의 ODA 정책 추진 대응 구조 형성 	

5. 연구의 기대효과

국토해양분야 ODA 추진방안 마련 및 실행체계(Governance) 구축을 통하여 ODA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동반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체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결국 ODA 선진화 방안 하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강화를 통한 국격제고라는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특히 국토해양부의 ODA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외교부, 기재부가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ODA지원 사업 중 국토해양분야의 경우,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원조정책의 기획 및 입안 능력 배가에 기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산발적인 국토해양분야 ODA 사업을 네트워크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선진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의존했던 후진 개발도상국(“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발전의 결과 1990년 초에는 ODA를 개도국에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11월 25일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한국의 정식회원가입을 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원조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러한 지위변화에 따르는 중요한 의의는 향후 우리나라가 ODA사업이 2000년 국제연합(UN)의 주도로 개도국원조의 기준으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제안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아크라실천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등 국제선진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ODA의 제공 기준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미 ODA의 제공규모를 2008년 총국민소득(GNI) 대비 약 0.09%에서 2015년까지는 현재 DAC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0.25%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원조효과성 향상 등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는 OECD/DAC가입에 따른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제적 공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더욱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3대 선진화 전략²⁾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서울개발컨센서스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통합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에

2) 3대 선진화 전략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의 공식적 발단은 1992년 UN에서 시작된 유엔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며, 특히 UN 고위급 회의 (07.9.24), 워싱턴 회의(07.9.27), 엘고어 노벨평화상 수상(07.10.12)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ODA 선진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국토인프라 제공 등의 ODA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국제개발협력, 국제협력 등의 단어와 혼용되고 있어 사용에 따른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 ODA 관련 연구들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자원의 유효 배분 및 적시 사용을 위해 국토해양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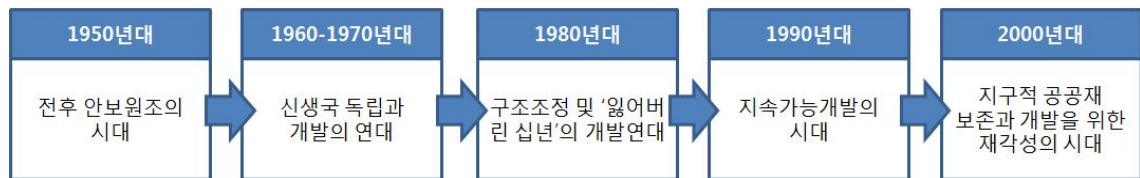
따라서 ODA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항만, 해운, 국토정책 등 국토해양분야에서의 ODA의 계획, 집행, 평가에 대한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유·무상, 양자 및 다자간 원조에 대한 체계적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조달시장 등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I. 국내 · 외 ODA 여건 및 정책 변화

1. ODA의 역사적 흐름

전쟁 피해국의 재건과 신생독립국의 빈곤과 기아가 국제관계의 주요한 의제로 떠오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된다.

이후 지구공동체, 지구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아와 빈곤 등의 저발전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지구적 관점의 원조관으로 발전한다.



<그림 II-1> ODA의 역사

1 1950년대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발원조는 전쟁 중 적국의 점령으로 경제가 파탄된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로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나타난 동서 냉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권과 국가사회주의권의 원조경쟁이 시작되었고 각 진영의 세력 확대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한 원조를 활발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종전 후,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 정세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신생독립국의 등장이었는데 식민지 시기의 영향으로 인해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국가들이 하루속히 이전 지배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원조의 필요성 절실했다.

<표 II-1> 세계대전 후 ~ 195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 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943	UN 구제부흥사업국	일본 비롯 아시아, 남유럽, 독일 등 원조제공
1944	브레턴우즈 협정	국제협력 통한 통화안정과 무역진흥, 개발도상국의 개발 통한 환율시장 안정도모
1945	국제통화기금 설립	
1945	국제부흥개발은행 설립	
1945	국제식량농업기구 발족	
1947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설립	

1947	트루먼 선언, 마셜 플랜	공산주의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는 나라 지원목적 대외원조 실시
1948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설립	원조자금의 국가별 할당과 가맹국의 상호무역자유화 추진
1948	UN 세계인권선언	
1949	포인트 포 계획	신생 독립국의 빈곤,기아가 자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 속하는 모든 나라에 위협되므로 국제원조 필요성 제창
1949	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1951	콜롬보 계획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동적 경제개발 지원협약
1956	파리 클럽 결성	
1958	인도 채무국회의	
1959	남북문제라는 단어 등장	
1959	미주개발은행 설립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2 1960년대

1960년대는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의 증가와 함께 많은 개발도상국이 UN에 가입한 시기이자 ‘남북문제’의 해결이 국제적인 주요과제로 대두된 시기이며 이전의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을 기반으로 한 원조 경쟁체제가 동서 간의 평화 공존기조를 기반으로 한 원조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한 남북문제가 더 중요한 원조의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정치적인 안전보장보다 경제개발 달성과 남북 간 경제격차의 해소가 원조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또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여국 간 원조의 규모, 수단, 부담 등 원조공여 정책을 공여국 사이에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일컫는 다자간 원조 및 협력이 활발해진 시기였으며 양국간, 다자간 등 많은 원조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원조의 국제적인 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표 II-2> 196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 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960	개발원조그룹 설립	
1961	UN 총회 ‘제1차 UN 개발 10년’ 발표	
1961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개발협회 설립	
1961	OEEC → OECD 변경	
1961	DAG → DAC 변경	원조규모의 증가, 수원국의 필요와 실정에 맞는 원조실시, 원조효과개선, 지속적인 원조제공
1962	카이로 선언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개발 촉진 제창
1964	G77 결성	

1964	제1회 UN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입에 관한 특혜대우 제공 등
1964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	
1966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1966	UNDP 설립	
1967	EC 설립	
1967	유럽개발기금 설립	
1968	테헤란 세계인권회의	
1969	피어슨 보고서 발표	자립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조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③ 1970년대

‘제1차 UN 개발 10년’이라는 거시적 계획 아래 진행되었던 전 지구적 규모의 개발 노력은 당초 목표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남북문제의 해결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체계적 원조의 필요성, 개발에서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의 중요성, 원조규모의 증액 등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선진국의 원조피로와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되기에 이른다.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며 개발도상국의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은 다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식량위기마저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전된 한 지역의 경제력이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변지역에 성장과 복지를 전파한다는 이전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이에 따라 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한 전체 지역의 경제력 부양이라는 점진적 방법보다는 전 지역 거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개발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전략이 국제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인간을 중요시한 개발에 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70년대에는 196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양적 원조전략으로부터 의식주, 교육, 위생 등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 개발전략 및 원조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제기된 것은 농촌지역의 가뭄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표 II-3> 197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 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970	틴버겐 보고서	사회경제구조를 변혁하는 것이 개발에 필요하다
1970	제2차 UN 개발 10년 계획 발표	
1970	OECD/DAC의 비구속성 원조계획 발표	
1972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환경오염의 심각성 경고
1972	스톡홀름 '단 하나뿐인 지구' UN 인간환경회의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협의
1974	제6회 UN 특별 총회 '신국제경제질서(NIEO) 채택	개발도상국의 이익 중시
1974	UN 경제권리의무헌장 채택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강화
1975	국제경제협력회의(CIEC) 개최	
1975	OECD/DAC의 개발에 여성문제 포함 이니셔티브	
1975	멕시코시티 세계 제1차 여성회의	
1975	UN 여성을 위한 10년(1975~1985)	
1975	세계식량회의	
1976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77	DAC 고위급 회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 채택	인프라의 제공과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야말로 개발협력의 필수요소
1977	DAC '지역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DAC 가이드라인' 채택	
1979	UN 총회에서 남북교섭 라운드 제안	
1979	OECD/DAC '원조집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융통성 있는 제원조달 지침 제시
1979	OECD/DAC '지역과 주기적인 자금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	
1979	세계아동의 해 10주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4 1980년대

1970년대에 활발히 논의된 남북문제는 1980년 2월 브란트 보고서³⁾를 기초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세계개발기금의 창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을 주장하여 선진국의 발상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브란트 보고서는 1980년 2월 UN사무총장에게 [남과 북-생존을 위한 계획]이란 표제로 제출된 보고서임.

<표 II-4> 198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 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980	브란트 보고서 제출	세계개발기금의 창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1980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실시	
1980	코펜하겐 세계 2차 여성회의	
1981	제3차 UN 개발 10년 계획	
1981	멕시코 칸쿤 남북정상회담	
1981	파리 최빈개도국회의,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채택	
1982	DAC,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 결성	
1984	DA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에 관한 목록 발표	원조기관 간의 조정과 협조 강조
1984	DAC, 원조 조정 및 조정 능력 강화 주력	
1985	DAC, 개발협력의 25년사 발표	많은 나라들이원조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적·사회적 발전 이룩
1985	나이로비 세계 3차 여성회의	
1986	DAC 고위급회담, 원조조정을 위한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 향상에 대한 원칙 채택 및 발표	원조조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각 수원국에 있다
1987	제42차 UN 총회, 1990년대를 국제재해 감소 10년으로 선포	
1987	UN 환경 및 개발위원회 브룬트란트 보고서 :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 정립	
1987	OECD/DAC, 조달에 따른 구속성, 비구속성 및 부분적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1988	리우 클럽 결성	중남미 13개국 구성,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문제 쿠바문제 등
1988	토론토 정상회의, 최빈개도국 특별조치	
1988	UN환경계획, 세계기상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설립	
1989	브래디 플랜 수립	개발도상국의 민간은행 채무 감감 및 용자 실시
1989	DAC 고위급 회담,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성명 발표	생산적인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함께 참여적 개발의 중요성 강조
1989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그러나 1980년대는 지속적인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문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문제의 대두로 남북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은 여전히 미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개발도상국가의 채무 증가로 이어졌고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 1987년에는 브라질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채무누적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은행과 IMF의 주도하에 누적 채무가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조조정 차관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2차에 걸친 오일 파동 및 1차 생산품 가격의 하락 이후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외채 위기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이 도입한 IMF 차관에 대한 상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정책은 각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와 전통적인 사회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적인 가치관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고 빈곤퇴치에 대한 효과는 저조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원조정책 변화는 NGO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인 남남협력이다.

이로써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간 기술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해 개발의 효과를 높이자는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메커니즘이 시작된다.

5 1990년대

1990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되었고 원조도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기존의 개발도상국 지원 전략으로부터 시장경제화 지원, 민주화 지원, 인권 옹호 등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1990년대에는 범지구적 문제들이 더욱 공개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채무 문제 및 통상 개방·보호 등의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었고 HIV/AIDS, 인구, 국제이주, 지구환경, 여성문제, 빈곤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장 위주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환경문제와 자본주의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빈곤층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열대림 파괴는 국경을 초월하여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과 개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냉전 종식과 동구권의 개혁 움직임 등 세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 국가발전전략의 개념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주도권과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발과정에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배제한 국가 주도의 성장 위주 개발전략은 권위적 독재정부를 등장시켰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일반 대중이 자신들의 생계 및 생활과 직결된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는 곧 참여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의 방법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 여성, 인구 등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개발이 중시되었다. 인간의 자유 확대, 복리의 증진이 개발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사회개발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표 II-5> 199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990	세계은행, 빈곤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	
1990	OECD, 유럽시장경제 이행협력센터 설립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 및 자문제공
1990	세계아동정상회담	
1990	세계은행, UNESCO,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	
1990	UN에, [인간개발보고서] 발행 시작	
1990	제4차 UN 개발 10년 계획 발표	
1990	제2차 UN 최빈개도국회의	
1991	UN ECOSOC : 사회개발문제 공식 제기	
1991	환경개발장관회의	
1992	리우 UN 환경과 개발 회의, 리우 선언문과 의제 21 채택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1992	기후변화협약 체결	
1992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1993	OECD/DAC, 참여적 개발을 위한 방향 발표	민주화, 선정 및 인권과 더불어 참여적 개발이 개발의 주요과제 분야로 정립
1993	비엔나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채택	
1994	OECD/DAC, '참여적 개발과 선정'에 관한 특별작업반 구성	
1994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 개념 제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분야로 식료·건강·환경·개안·지역사회·정치·경제 등 7가지로 들고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
1994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4	FAO,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 시행	
1995	방콕 ESCAP 제 55차 회의, 재해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와 개발문제 회의	
1995	OECD/DAC, 참여적 개발과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1995	코펜 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 20/20 이니셔티브 제안	사회개발, 인권, 빈곤퇴치, 노동, 외채문제, 공 적개발원조의 확대, 구조조정정책 이행, 여성지위향상, 환경 지원 등
1995	북경세계여성회의	
1995	OECD/DAC, 새로운 세계상황에 대응한 개발 파트너십 채택	광범위한 지속가능개발은 양심적인통치, 빈곤감소 및 환경보전을 통해 실현가능,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 제시
1996	주빌레 2000	
1996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	
1996	세계은행, 빈곤감소전략 보고서 발표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의 빈곤대응책 강화
1996	OECD/DAC, 21세기를 위한 개발전략 발표	
1996	OECD/DAC, Workshop on Capacity Development in Environment	
1996	세계식량정상회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
1997	Earth Summit+5 발표	
1997	교토 의정서 채택	기후변화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제도
1997	OECD/DAC,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보고서 발간	
1998	세계은행, [원조평가Assessing Aid: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보고서 발표	원조에서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수원국 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제공이 중요
1998	OECD/DAC 남녀평등 가이드라인 제시	
1998	UN 개발원조계획 도입	
1999	세계은행, 포괄적 개발계획 지침 발표	
1999	헤이그 세계평화관련 시민운동단체 국제회의	
1999	몬트리올 세계시민사회회의	
1999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설립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6 최근의 흐름(2000년대)

세계경제체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저
개발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
회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어왔고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은 다각화 되어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발전 등 다분야적인
이슈로서 사회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격차는 개발협력의 중점 과제로 대두되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는 그 사회에 엄청난 사회·정치·경제
적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 자연재해와 인위재해에 대한 대응방법과 체계를 개선하
는 것이 재해복구를 하는 지역사회 개발에 핵심요소임이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 확대와 지원메커니즘의 신속성 제고 및 체계화는 절대빈곤해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달성이라는 원조의 순수목적 강조와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수원국의 변제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 확대와 증여율 제고가 인도적 차원의 빈곤감소와 개발원조의 질적 개선에 더욱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유상원조는 특히 차관관리 및 변제능력, 책임설명 능력이 다른 수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최빈국에게 과도한 대외채무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조는 그 본래의 이념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표 II-6> 2000년대 주요 개발협력기구 및 이니셔티브

연도	주요 기구 설립 및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2000	UN 천년선언 및 천년개발목표 발표	각 공여국과 국제기관,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등의 개발주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
	세네갈 다카 세계교육포럼	
	UN 사회개발특별총회 개최	
	UN 글로벌 콤팩트 출범	
2001	OECD/DAC,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비구속화 권고	
	세계은행, '위기에 처한 저소득국가'라는 개념 하에 실무작업반 발족	
2002	몬테레이 UN 개발금융 국제회의 개최, 몬테레이합의 도출	
	UN 개발재원회의 개최	
	세계식량회의 : 5년 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03	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	
	제네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주요 역할 규정
	OECD세계지식포럼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OECD/DAC, '테러리즘 방지에 대한 개발협력' 선포	
2004	OECD/DAC·세계은행, 각 지역개발은행의 마라케시 선언	
2005	OECD/DAC,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천년개발목표 이행평가를 위한 UN 정상회의	
	홍콩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선언문	
	튀니지 2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정보격차 해소
2006	고베 재해감소를 위한 세계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결성	
2007	UN 재해감소 국제전략 주최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발표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개발의 이해

<표 II-7> ODA의 역사적 흐름

	이전-1950	1960	1970	1980	1990	2000-현재
역사적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시작된 동서냉전 ·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신생독립국 등장	· 많은 개발도상국 UN 가입 · 남북문제 대두	· 세계경제의 침체와 개발원조의 후퇴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격차 심화	· 지속적인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문제 가속화 ·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원조피로' 현상 증가	· 소련의 붕괴로 냉전 종식되고 세계화 도래 · 환경문제의 대두 · 환경, 여성, 인구, 인간개발 등 관심 고조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혁명 초래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격차 심화
주요기구 및 계획	· 브레턴우즈 협정 · 마셜플랜, 포인트 포 계획	· 제1차UN개발10년 계획 발표 · OEEC->OECD변경 · DAG->DAC변경 · 카이로 선언	· 제2차UN개발10년 계획 발표 · 피어슨보고서, 틴버겐보고서 발표 · OECD/DAC 주기적인 가이드라인 채택	· 브란트보고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 제3차UN개발10년 계획 발표 · DAC 고위급 회담	· 제4차 UN개발10주년 계획 발표 · 리우선언문과 의제21, 교토의정서 채택	· UN천년선언 및 천년개발 목표 발표 · UN글로벌 콤팩트 출범 · OECD/DAC,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이론적 전제	· 마셜플랜을 통한 유럽 재건 지원 ·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적 차원	·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	· 빈곤해소 등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강조(인간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등장) · 농촌개발프로젝트 대두	· 신자유주의에 따라 선진국 모델에 따른 구조조정과 개혁에 중점 · NGO역할 강조	·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개발 정립 및 참여적 개발 수립	· MDGs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주요역할 규정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 확대 및 지원메커니즘의 신속성 제고 및 체계화 · ODA의 규모 확대와 혁신적 개발자원 논의
한국의 ODA 역사적 상황	· 미군정시대 원조수원 · 유엔 구호기구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	· USAID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원조공여 시작 · 경제개발계획 추진자금의 상당규모를 무상원조 및 개발차관의 도입으로 충당		·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창설	·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	· OECD/DAC 가입(2010) · G20 정상회의(2011) ·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 HLF-4 서울 유치(2011)

2. 국제 ODA 주요 이슈

① 원조규범의 발생과 변화

국제개발원조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원조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이다. 많은 연구는 마셜플랜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지원된 대부분의 개발원조가 개도국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 DAC는 그러한 논의를 원조규범 형성으로 구체화한 주체였다.

OECD/DAC의 전신은 1960년 출범한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이고 1961년 OECD가 공식 출범하면서 DAG는 그 산하기관이 됨과 동시에 이름을 DAC로 개명했다. DAC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구였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조건부(구속성) 원조를 고수하면서 비판을 받게 된다. 1970년 도쿄에서 열린 DAC 연례회의에서 일본이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조 조건을 완화하는데 찬성하면서 원조효과성을 추구하는 원조규범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2000년 국제연합(UN)의 주도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제안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아크라실천의제(Accra Agenda for Action)등이 국제사회 원조규범형성 및 발전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0년 9월 191개 UN 회원국이 참가한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 등 세계 빈곤퇴치를 최우선과제로 확인하고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¹⁾

그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실천하기 위해 2003년 제1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1)이 로마에서 개최되어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강조한 로마 선언을 발표하였고, 2005년 제2차 고위급포럼(HLF-2)에서는 기존 국제원조사회의 합의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조 효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파리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포럼(HLF-3)에서는 파리선언에서 합의된 이행 사항 점검과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 원조 효과성 합의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하였다.

1) ①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권의 향상, ④아동사망을 감소, ⑤모성 보건 향상,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보호, ⑧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2011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4차 고위급포럼(HLF-4 Busan)을 개최하였는데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성과 중심, △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 투명성과 상호책임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 부산선언(New Global Compact)을 채택하였다. 세계각국은 부산총회를 끝으로 원조고위급 포럼을 종료하고 개발효과성에 초점을 둔 포스트 부산체제로 이행하기로 하면서 국제개발원조의 규범은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②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빈곤퇴치

1995년 UN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래 개발협력력을 관장하고 있는 OECD/DAC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채택한 바 있고, 이를 통해 DAC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하에 국제개발목표(IDGs)를 제시했다.

특히 2000년 개최된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는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과 함께 MDG가 채택되었다.

최근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국제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론 최빈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낙오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II-8>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의 주요 내용

-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②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③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 ④ Reduce child mortality : 아동사망률 감소
- ⑤ Improve maternal health : 모성보건 증진
- ⑥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⑦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 ⑧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UN 보고서들은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본적인 교육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MDG의 기한 내 달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모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불균형이 국가간·국가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동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한 내 MDG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0차 UN 정상회의는 향후 MDG 등 국제개발목표의 기한 내 실행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면서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세부의제가 제기되었고 성과는 개발재원 마련(Financing for Development)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그동안 ODA의 양적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집중되어 왔지만, DA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밀레니엄 선언 이후 빈곤 퇴치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DAC는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조절차의 단순화와 합리적 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인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한 원조관행 조화’를 발표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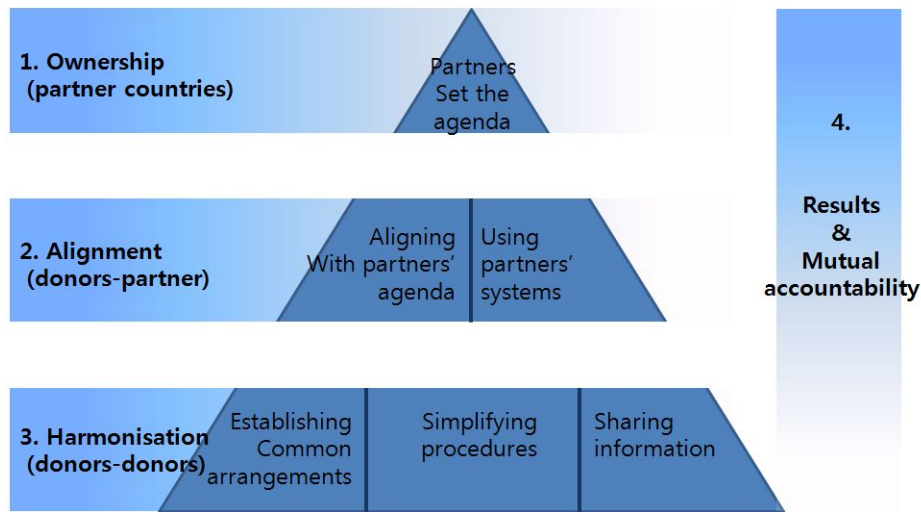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크게 6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조국간 협력체제, △수원국에 대한 분석과 사업 및 프로그램 준비, △공적 재무관리차원에서 성과 측정, △보고 및 감독, △재무 보고 및 회계감사, △위임된 원조체제 등에 기본 원칙 및 모범원조관행을 분석하고 있다.

DAC는 이 보고서를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원조관행관련 고위급 포럼 ‘로마회의’에서 합의하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식문서로 ‘로마선언’을 채택하였으며, DAC 고위급회담(HLM)회의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고위급포럼에서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됨으로써 ODA의 효과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파리선언에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ownership),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harmonization),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응(alignment), 개발성장에 중점을 둔 원조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개발성장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책임(mutual accountability) 등과 같은 5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2) OECD/DAC, 2003,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그림 II-2> 파리선언의 추진과제와 주요 지표

파리선언이 의미하는 주요 정책점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빈곤퇴치전략보고서(PRSP)와 같이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원조 공여국 간 조정 등에서도 수원국이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수원국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공여국은 그들의 원조를 수원국이 작성한 개발전략에 따라 제공하고, 수원국의 제도 및 절차에 기초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시스템에 부응한 원조공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공여국간에는 중복된 원조공여절차로 인해 수원국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원조 조화에 역점을 두고, 투입과 산출이 아닌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개발성장에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④ 원조효과성에 대한 부산 선언(New Global Compact)

OECD DAC는 원조개발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포럼을 2011년 11월 29일~12월 1일에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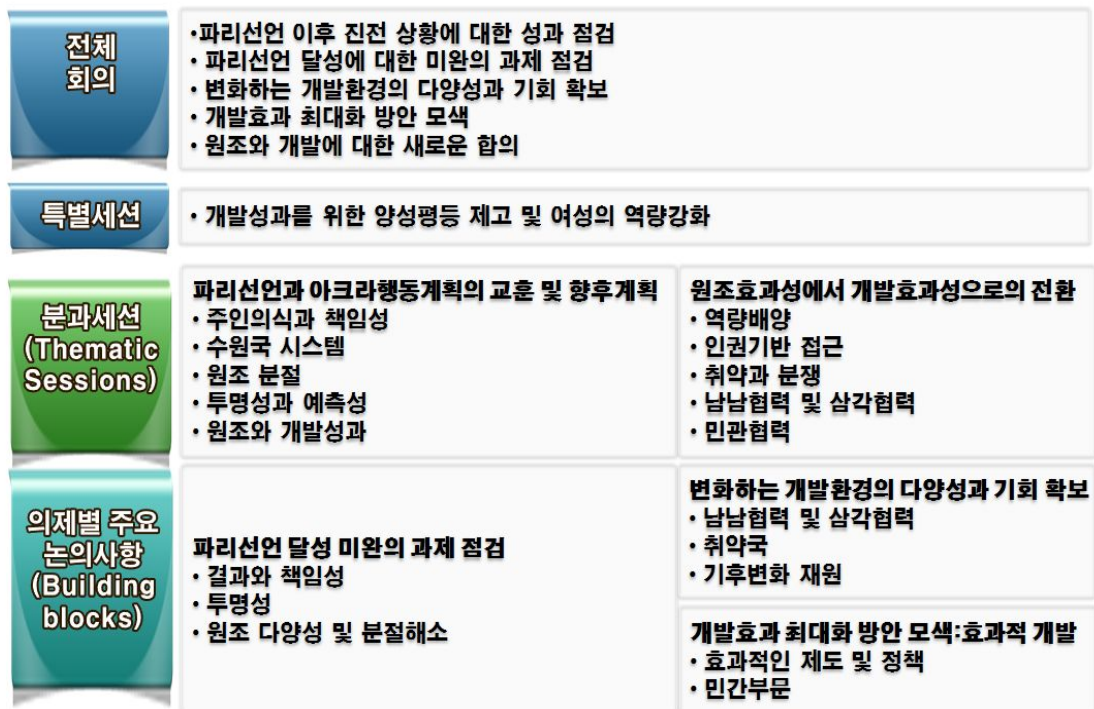
제4차 고위급포럼은 3차에 걸쳐 논의된 제반 원칙과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이 행사항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원조환경에 대응하는 국제개발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회의였으며, 부산선언(New Global Compact)을 채택하였다.

<표 II-9>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의 역사

	HLF-1	HLF-2	HLF-3	HLF-4
개최 결과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	아크라 행동계획(2008)	부산선언(2011)
주요 의제	원조의 거래비용 줄이고 공여국의 원조정책 및 집행절차를 수원국 개발전략의 우선순위와 시스템에 조화시키기로 합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2010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원칙 및 세부 이행 공약에 합의	2005년 파리선언 이행을 중간 점검하고,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	기존의 효과성 논의, 포괄적 개발맥락에서의 원조 논의,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부산총회의 의제는 크게 △파리선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원조효과성 논의와 핵심원칙의 심화,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으로의 원조와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의 반영,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부산총회는 파리선언의 실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10개의 분과세션(thematic sessions), 8개의 의제별 논의사항(building blocks)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3> 부산총회의 구성 및 주요 주제

부산총회는 결과문서로서 ‘새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선언문은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성과 중심, △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 투명성과 상호책임성을 주요 원칙으로 정했다.

부산총회는 그동안의 선진국·개도국 중심 원조체제와 담론을 뛰어넘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부산선언은 각국이 구속성 원조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2년 중 비구속화 달성계획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총회는 세 차례에 걸쳐 구체화되어 온 원조효과성의 개념과 이행방안, 성과 이행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각국 대표들은 부산총회를 끝으로 원조고위급 포럼을 종료하고 개발효과성에 초점을 둔 ‘포스트 부산’ 체제를 출범하기 위하여 내년 6월 중 급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부산선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목표와 지표가 설정 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향후 포스트 부산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흥공여국 및 민간부문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DAC, UN,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5 원조효과성과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21세기 국제개발원조의 반성적 전환에서 가장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은 여러 선진원조공여국의 경제위기였다. 1970~8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위기에서 1990년대 일본과 북구 유럽의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선진국은 흔히 ‘포드주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후 황금기 경제모델의 한계를 경험했으며, 그와 함께 공공재원인 세금사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도 강화되었다. 국제개발원조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ODA의 효과성도 그와 같은 변화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다른 공공분야와 마찬가지로 ① 한정된 물적·인적 원조자원의 전략적 사용을 위해 논리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② 성과의 기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측정하고 평가를 환류(feedback)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③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도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제원조사회는 효과적 개발원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교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내에서의 종합적 개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 추진된 개별적 프로젝트들은 한정된 원조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공여기관의 수많은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희소한 우수인력을 원조프로젝트 지원에 낭비하게 하였고, 조율되지 않은 공여국의 원조는 중복되는 사례도 많았다. 둘째, 1980~90년대 많은 개도국에서 긴축재정 및 민영화, 경제 자유화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SAPs) 형태의 유상원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부문의 약화와 함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고, 개도국 정부의 부채상황을 악화시켰다(Chang, 2007)³⁾.

반면, 이 기간에 그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수출중심의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인적 역량 강화와 함께 규제된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한 한국 등의 개도국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Martinussen, 1997)⁴⁾. 셋째, 개도국 스스로 정치적 선택과 개발 노력을 공여국의 개발원조가 대체할 수 없으며, 성과평가 없는 지속적 원조는 원조의존성만을 심화시켰다.

그간의 개발원조에 대한 성찰은 일련의 새로운 접근법들로 이어졌다. 우선 개발원조의 접근단위가 미시적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거시적 경제·사회 개발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거시적 개발전략은 외형적 규모(GDP)의 성장만이 아니라 성장의 질(quality)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성장(equatable growth)’ 혹은 ‘빈곤층을 포괄하는 성장(pro-poor growth)’을 목표로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POVNET, OECD/DAC).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전략을 수립하되, 제도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국제원조사회가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다.⁵⁾

일단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된 개도국에 대해, 각 원조기관은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중기 실

3) Chang, Ha-Joon, 2007, Bad samaritans : rich nations, poor policies and the threat to the developing world, London : Random House Business.

4) Martinussen, John, 1997, Society, State and Market : A Guide to Competing Theories of Development, London : Zed Books.

5) 개도국 정부가 원조기관 컨설팅 결과만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개도국 정부는 국민보다는 원조기관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정치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원조사회는 ‘국가개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개도국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tokke(1995) 참조.

천지침을 포함하는 ‘국가지원전략(CAS)’을 만든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부문(sector)별 프로그램 단위⁶⁾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략단위별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국가지원전략(CAS)’에 명시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도국 내 여러 원조공여 주체들은 중복적 활동을 줄이고, 비교우위 부문에 더욱 집중하도록 서로의 활동을 ‘조정(harmonization)’하는 노력을 하며, 그 결과를 ‘국가지원전략(CAS)’에 반영함으로써 원조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원조접근이 개도국의 발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편적 방식으로 소모되던 원조재원을 종합적 발전 방식에 대한 개도국의 학습과정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경우 내부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서 세계은행이 지원해온 개발지원프로젝트의 효과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내부평가와 더불어 프로젝트 지원이 내부 방침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국제NGO 중심의 외부비판에 부딪히면서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원제도와 절차의 전면적인 쇄신을 감행하였다.⁷⁾

변화의 핵심은 지원전략의 준비과정과 평가체계에 대한 혁신이었고, 1995년 이래로 세계은행은 종전의 프로젝트 중심의 발전지원전략에서 국가 수준의 발전지원전략인 국별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CAS를 국가지원프로그램의 수행, 관리, 평가의 기본적인 준거틀로 채택하고, 지원의 방향이 지원대상국의 발전전략과 목표에 일치하도록 하였다.⁸⁾ 세계은행은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원조규범의 발전에 따라 지원개념의 국가지원전략 (CAS)에서 개발협력동반자개념의 국별동반자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으로 전환하였다.

6) ‘체제전환’,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와 같은 주제별 국가과제(thematic poles)를 설정하고, 산업, 교육, 보건, 환경 등의 각 부문(sector)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면 더 바람직하다. 이때 국가과제 실행을 위한 개도국 재정계획 중 부족분을 ‘프로그램 예산지원’방식으로 원조하기도 하며, ‘Education for All Credit’이나 ‘General Budget Support’가 이에 해당한다. <http://www.oecd.org/dac/hlfsurvey/>의 Glossary 참조.

7) The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s Department, The Logic of Renewal: Evaluation at the world bank (1992-2002), pp.4-5.

8) The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s Department,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Retrospective : An OED Self-Evaluation, p.1.

6 G20 개발의제 채택에 따른 인프라개발협력 추진

2010년 11월 12일 폐막된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들의 합의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총 20조항으로 구성된 서울선언문 중 주목할 사안은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선언문 중 제5조에서는 저소득국가의 성장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에 합의, 제15조에서는 2011년 터키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UN Less Developed Countries' Summit, LDC Summit)와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 효과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을 환영, 제17조는 개발협력의제가 G20 서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세계경제의 강화, 고용 창출 가속화, 금융시장의 안정 등과 함께 중요한 합의 사항임을 명시했다.

서울개발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에 역점을 두며,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고 명시했다. 요약하면, G20 서울선언문은 개발협력에 있어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신흥 경제강국을 포함한 G20의 개발협력에 대한 원조 참여를 통해 과거 수혜적 빈곤 퇴치에서 점차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가시적 개발협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개발컨센서스 부속서에는 지역통합을 위한 인프라개발협력에 G20 참여를 확인하고 2011년 11월 제4차 부산 고위급포럼(HLF)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G20 서울개발의제의 채택으로 개도국 원조방식의 전환이 발생하는데, G20 지역통합형 인프라 개발협력 혹은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창출 등 양자간 글로벌 협력을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한다.

이는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개도국의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선진국(원국)의 역할 변화와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의장국인 한국은 주요한 개발의제인 '인프라 개발협력'을 G20의 주요한 임무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는데 문제는 인프라 개발협력을 단순히 인프라의 범주로만 본다면 MDB가 경험한 오류를 되풀이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개발 컨센서스 부속서에는 지역통합형 인프라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지역통합형 인프라 개발협력은 국가와 국가간에 인프라 개발협력에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지역통합형 Corridor를 완성하는데 인프라 개발협력의 중심을 두는 것이다.

또한, G20 지역통합형 인프라 개발협력은 우리가 국제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자본 또는 개발원조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 경제국 및 선진국의 개발원조 자금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우리가 국제개발금융의 주도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은행 등의 주요 공여국인 유럽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 ODA에 대한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표 II-10> G20 서울 정상회의 부속서 인프라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세계적·지역적 제도 문제	지역 통합 등과 같은 세계적·지역적 제도 문제를 다루는 행동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G20이 이러한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자개발은행(MDBs) 등 국제기구의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행동 촉진에 기여한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 조율된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는 제도적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인프라 투자 문제	MDB 행동계획의 최종 결과는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보고되며, 고위급패널(HLP)의 승인과 의견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고서 초안: '11.06, 최종보고서: '11.11) 행동계획 2: 인프라 투자를 위한 G20 고위급 패널 설립 우리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고위급 패널 (HLP)을 설립하였다. HLP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1년간 운용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참여	개발 관련 지식, 기술 및 일자리 창출의 풍부한 원천인 민간 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여, 민간 부문의 개입과 혁신을 촉진한다. 위험 감소, 투자환경의 개선 및 시장 규모의 확대 등 민간 자본의 흐름이 개발로 유입 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장려한다.

결과적으로 G20 신흥경제국의 ODA 참여와 국제개발은행들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 ODA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므로 적극적인 개발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ODA 지원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7 지역개발은행의 역할 증대

WB, ADB, AfDB, IDB, EBRD와 같이 많이 알려진 5대 메이저 개발은행 외에 조금 더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개발은행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메이저 개발은행(WB, ADB, IDB, EBRD, AfDB 등 5개 다자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KSP 공동컨설팅이 실시⁹⁾한다.

9) 기획재정부(2011) 보도자료

* '11년에 MDB와 KSP 공동컨설팅 실시를 위한 MOU 체결을 완료하고, MDB와 공동으로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고 AfDB와는 '10. 09월에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시 「KSP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11. 03월 IDB, '11.05월 ADB, '11.05월 EBRD와 각각 체결했다.

이를 Sub-regional Development Bank라 명명할 수 있는데 남미은행, 동아프리카개발은행, 서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대표적이며, Sub-region별로 주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일극체제가 약화되어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실정¹⁰⁾이다.

일본동경재단을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DB) 설립도 1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II-11> 지역개발은행 현황

구 분	개 요	현 황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 및 경제개발 촉진	설립연도 : 1966년 가입국가 : 67개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본부소재지 : 필리핀 마닐라
유라시아개발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회원국 간 시장경제 개발촉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무역과 경제접촉을 강화	설립연도 : 2006년 가입국가 : 6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본부소재지 :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협력 관계의 강화, 융자, 개발계획의 작성	설립연도 : 1964년 가입국가 : 77개국 나이지리아, 미국, 일본, 이집트,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콩고, 케냐 등 본부소재지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서아프리카개발은행 (WADB,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역내 회원국의 빈곤감소, 경제협력과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활동	설립연도 : 1973년 가입국가 : 8개국(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회원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 본부 소재지 : 토코 로메
동아프리카개발은행 (EADB, 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역내 회원국에 재정지원과 사회경제개발과 지역통합 추진	설립연도 : 1967년 가입국가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본부소재지 : 우간다, 캄팔라

10) 조진철 외(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남미은행 (Bank of the South)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설립연도 : 2009년 가입국가 : 7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본부소재지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이슬람개발은행 (IDB, 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회의기구(OIC) 산하의 개발은행	설립연도 : 1975년 가입국가 : 5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이집트, 터키, UAE, 요르단, 수단, 카메룬,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본부소재지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미주개발은행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설립연도 : 1959년 가입국가 : 48개국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과테말라 등 본부소재지 : 미국 워싱턴
카리브개발은행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목적으로 함	설립연도 : 1969년 가입국가 : 26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아이티, 자메이카, 도미니카, 트리니다 토바고, 가이아나 등 본부소재지 : 바베이도스 세인트마이클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중남아메리카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은행	설립연도 : 1960년 가입국가 : 12개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본부소재지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구 소련 및 동유럽권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관	설립연도 : 1991년 가입국가 : 61개국 + 2개기관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프랑스, 한국, 스페인 등의 공여국과 헝가리, 몽골, 카자흐스탄, 폴란드,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의 수여국 본부소재지 : 영국 런던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역내 저개발지역의 개발 및 발전 원조, 회원국의 국·공기업 및 사기업에 대부	설립연도 : 1958년 가입국가 : 27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본부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출처: 각 은행별 홈페이지 참조(2011년 기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는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을 위해 북부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남부의 자본, 기술, 개발경험과 연계시킬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해 국제적 재원조달이 긴요하고, 이로 인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논의 중¹¹⁾이다.

8 정책적 시사점

그동안 원조 혹은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원조를 연구하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와 상호의존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의 원조체제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 또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원조정책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목되는 점은 원조공여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비중 있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긴밀히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공여국 정부의 다양한 국내·대외정책이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적 일관성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정책적 일관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조공여국 정부는 자국이 추구하는 개별 정책이 개도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문건을 통해 개발 목표 추구 및 정책일관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거나, 정부 각 부처에 아우르는 조정기구를 마련하여 각 영역의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 및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이형근 외(2004), 동북아 경제협력: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3. 국내 ODA 주요 이슈

① OECD/DAC 가입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핵심위원회로서, 개발원조그룹 DAG를 포함하여 노르웨이(1962), 덴마크(1963), 오스트리아와 스웨덴(1965), 호주(1966), 스위스(1968),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아일랜드(1985), 포르투갈(1991), 룩셈부르크(1992), 그리스(1999)등 22개국과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한국이 가입¹²⁾했다.

DAC는 MDGs¹³⁾ 밀레니엄 선언 이후, 2002년 4월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 가이드 라인인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한 원조관행 조화(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¹⁴⁾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03년 로마선언’과 ‘2004년 마라케시 각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3월에 이들을 토대로 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된다.

파리선언에는 5대 과제가 제시되는데 공여국과 수원국이 서로의 리더십을 존중,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은 개발성장에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DAC에서는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권고안(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채택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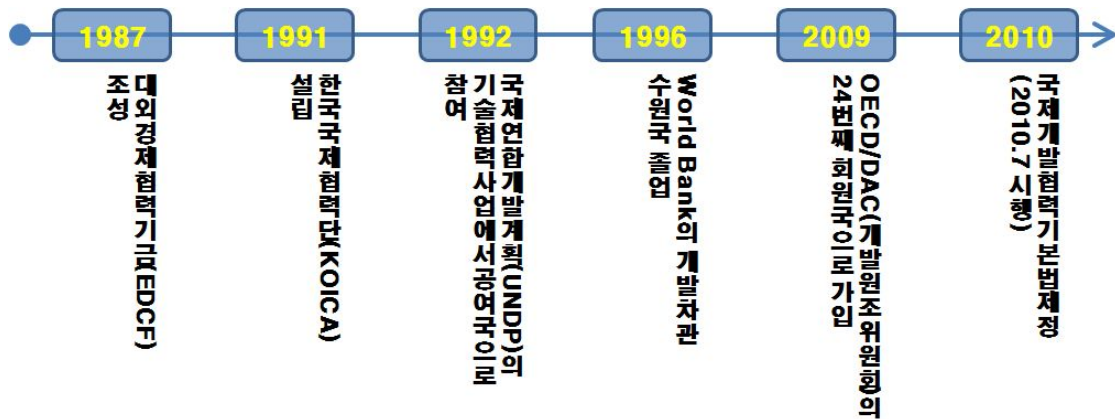
파리선언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5대 추진과제와 12개 측정지표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수원국과 공여국 간 원조전략의 일치를 위해 현지조달시스템 활용과 양자간 원조 언타이드 비율을 확대할 것을 주요 지표로 설정¹⁵⁾했다.

12) 권율(2009),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13) 극단적 빈곤과 기아 해결, 전반적 기초교육의 실현,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신장, 영아사망을 축소, 출산보건 수준 증진, AIDS 등 전염병과의 전쟁, 생활환경보호 강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목표임

14) 원조국간 협력체제, 수원국에 대한 분석과 사업 및 프로그램 준비, 공적 재무관리차원에서 성과 측정, 보고 및 감독, 재무 보고 및 회계감사, 위임된 원조체제 등에 대해 기본 원조관행을 분석한 것

15) 권율(2009),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그림 II-4> 우리나라 ODA 공여역사 흐름도

한국은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ODA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UN MDGs,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아크라실천의제, 부산선언 등 국제선진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ODA의 제공 기준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하게 되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시행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현재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외원조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¹⁶⁾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한다.

동 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¹⁷⁾하고 있다.

1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7)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표 II-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양자 ODA는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하고 다자 ODA는 무상과 유상의 구분 없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과 출자금 및 양허성 차관으로 규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3조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위원회의 운영 업무 총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시,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 준수	각 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수당,여비,경비 지급
제7조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및 평가 수행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에 거쳐 위원장이 결정
제8조 (기본계획 수립)	ODA 기본계획(매5년) 작성 및 수정을 통해 ODA의 정책방향 제시	ODA 기본계획안(매5년) 작성 및 수정
제9조 (주관기관)	외교부는 무상 ODA, 기획재정부는 유상 ODA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ODA 시행계획안(매년2월말) 작성 및 공지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중점 협력대상국가 선정으로 협력효과 제고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소위원회 구성
제13조 (평가)	ODA에 대한 통합평가 실시로 국민의 이해, 투명성 제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 공개
제15조 (국민참여)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주요실적 및 평가 결과 공개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
제16조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강화, ODA 통계 제출	-
제19조 (재외공관)	ODA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 명시	-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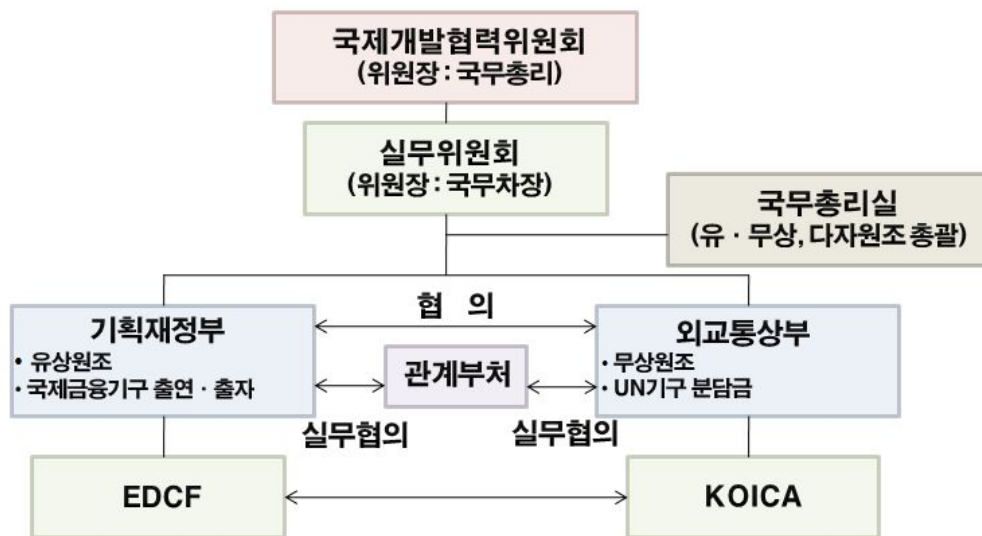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수원국이 선진공여국 모임인 OECD/DAC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이자 원조를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한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국내적으로는 ODA 사업이 유상(재정부)과 무상(외교부 등 30여개 기관)으로 나뉘어 분산된 체계 하에 추진됨에 따라 원조사업의 중복과 분절화 우려와 함께, 국가차원의 ODA 전략수립과 사업수행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제사회가 MDGs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원조규모 확대(More Aid), 원조효과성 제고(Better Aid), 글로벌 원조체계 개선(Aid Architecture)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G20 의장국이자, DAC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수준에 맞게 ODA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09년 OECD/DAC¹⁸⁾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초 총리실에 ODA 총괄·조정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선진화 방안이 마련 제시된다.

우리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총괄조정 하에 각 부처의 ODA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였다.



<그림 II-5> 국제협력 추진 체계 구도

출처 : 개발도상국기술협력연구소, 2011,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방안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가, 홍보 등을 총괄하고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콘텐츠의 개발·활용하는데 3대 분야(개발경험, 사업 기술, 감성 분야)로 나누어 구축한다.

18)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협력(ODA)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로서 ODA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공여국 모임

‘전략-사업-평가’ 등 원조시스템을 효과적 개편하는데 첫째 유·무상통합 중점 협력국 선정(26개) 및 국별 지원전략 수립하고 둘째, 유·무상 연계사업, 정부 NGO/ 민간연계사업,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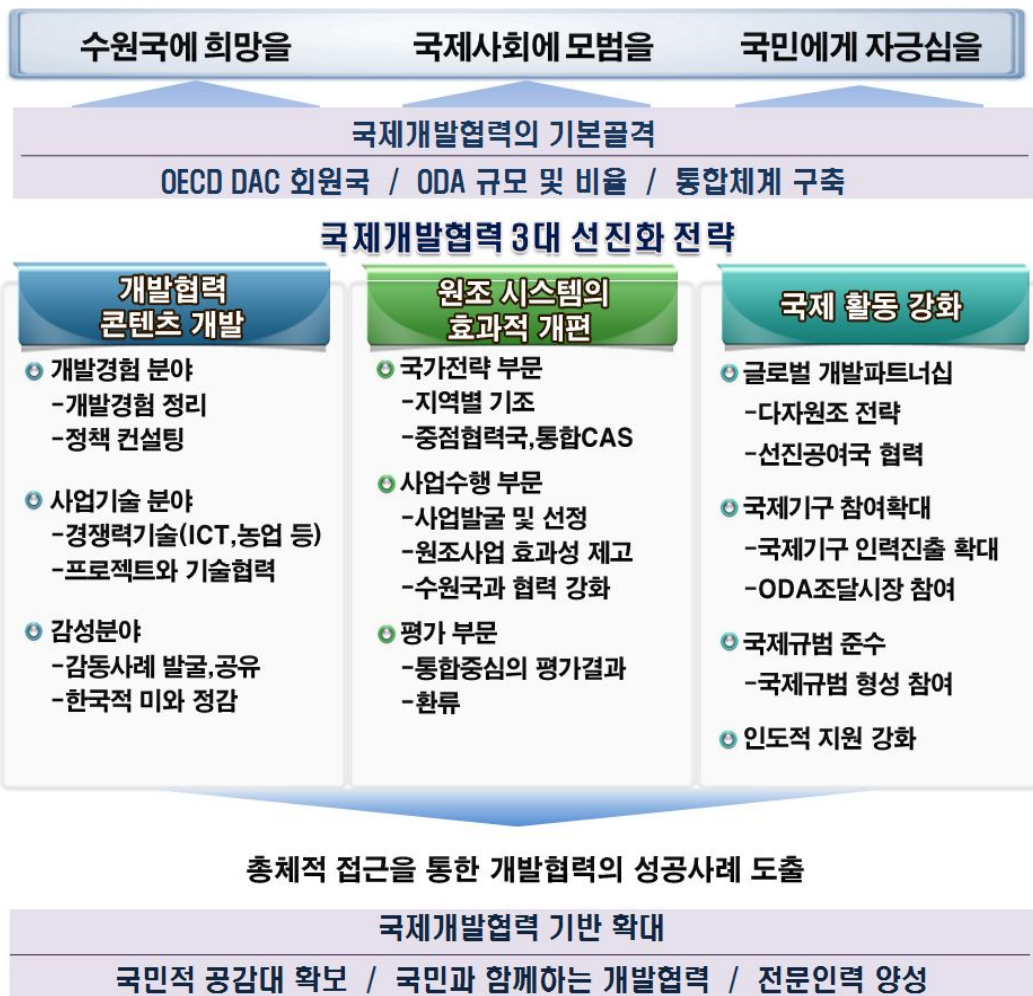
G20 의장, DAC 회원국으로서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활동과 국민적 지지 기반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 확대계획을 재확인한다.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유지하고 비구속성 비율을 75% 제고한다.

<표 II-13>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 (SW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발전경험 ●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식민지, 전쟁 경험 등)을 극복 ●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인적자원·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원조역사,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 규모 ● 분산화된 추진체계, 전문인력 등 추진기반 미비 ●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 정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HLF-4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역할 증대 ● 우리의 발전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관심 ●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정책 ● 세계경제 블록화로 인한 국제협력 경쟁환경 치열 ● 각 국가의 개발협력에 대한 시각과 철학의 차이

출처 : 국무총리실,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그림 Ⅱ-6>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출처 : 국무총리실, 201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추진현황

4. 정책적 시사점

①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그동안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ODA를 공여하면서 시기별로 당면한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와 협력분야를 설정해왔다.

전후 남북협력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던 개도국의 경제성장 촉진 문제가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970년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의 국제적 목표로서 GNP 대비 0.7%라는 기본 목표를 채택하고, 최빈개도국(LLDC)에 역점을 둔 원조정책 강화를 결의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기본욕구충족(Basic Human Need : BHN)이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거시지향적, 성장목표적인 원조방식에서 미시지향적, 후생목표적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BHN접근법을 통해 보건, 위생, 상하수도, 영양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계경제 침체와 개도국 외채누증문제로 경제불안정이 심화되자 IMF를 주도로 개도국의 국제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권을 둔 시장지향형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DAC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개발과 여성 등 범세계적 과제에 치중하면서 ‘인간 중심의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와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 이후 국제협력의 빈곤퇴치 노력이 확대되면서 ODA에 대한 정책은 ODA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그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② 정책적 시사점

그동안 원조 혹은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원조를 연구하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와 상호의존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의 원조체제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 또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원조정책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목되는 점은 원조공여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비중 있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긴밀히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공여국 정부의 다양한 국내·대외정책이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적 일관성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정책적 일관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조공여국 정부는 자국이 추구하는 개별 정책이 개도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문건을 통해 개발 목표 추구 및 정책일관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거나, 정부 각 부처에 아우르는 조정기구를 마련하여 각 영역의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 및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가 그동안의 국제협력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을 큰 폭으로 개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원조정책에서 성과중시형 ODA를 강조하면서 지원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셋째, 원조실시체제 통폐합을 통해 원조실시체제를 개선하고, 중점지원대상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1.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체계

① ODA 거버넌스 체계

우리나라 ODA는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를 포함하는 양자간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출연·출자금 등의 다자간 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상당히 다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 중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표 Ⅲ-1>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구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소관부처
양자원조	유상원조 (경협차관)	한국수출입은행 (EDCF)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물자지원, 재난구조,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기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조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무상원조 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의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에서 유상원조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유·무상 원조의 총괄·조정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별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조정 기능을 별도로 두는 등 복잡한 ODA 운영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통합 지원 전략 및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한국의 ODA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유관 부처 간 협의 및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개발협력국),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KOICA, 한국수출입은행(경제협력본부),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 등에서 ODA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인원은 약 340여명이며,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무상원조 형태로 ODA 담당자를 두어 개별적인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⁹⁾

<표 III-2>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조직 현황

구분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총리실
부서	1국 (개발협력국), 3과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1과 (개발협력과)	7부, 5실, 21팀, 29해외사무소	1본부 (경제협력본부), 2실(경협기획실, 경협지원실), 1부(경협사업부,6팀, 1반	1관 (개발협력정책관), 3과(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
인원(정원)	32명	10명	251명	62명	13명
업무	무상원조정책 수립	유상원조 정책수립 (EDCF 운용관리주체)	무상원조 집행	유상원조집행(EDCF 수탁운용)	총괄·조정
신설 시기	2007년 8월	1999년 5월	1991년 4월	1987년 6월	2010년 1월

주 :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는 주로 다자간 원조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담당자를 두어 무상 원조 위주의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 각 조직별 홈페이지 참조(2011년 기준)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경우, '07~'09년에 총 79건, 2,589백만달러의 차관을 25개 국가에 지원했는데, '00년 209백만달러에서 '09년 1,067백만달러로 연평균 약 19.8%가 증가했다. 개발차관의 비중이 88.5%로 높으며, 기자재차관은 11.5%로 최근 감소 추세이다. 또한 도로, 상하수도 등 경제 인프라의 지원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인프라의 경우 '07년도 291건에서 '09년도 473건으로 증가했고 사회인프라는 '07년 184건에서 '09년 337건으로 증가했다.

19)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2010, 국회예산정책처,

개발차관은 도로(29.6%), 상하수도(14.7%), 전력(12.9%), 전자정부 등 IT(7.6%), 병원(7.4%), 교량(7.2%) 등에 주로 지원했고 기자재차관은 병원 기자재(49.3%), 운송수단(19.5%), 방재(12.1%), IT(8.4%) 등에 주로 지원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경우는 '07-'09년에 10,819건, 1,337백만달러의 무상원조를 149개 국가에 지원했는데 00년 37.3백만달러에서 09년 380.9백만달러로 연평균 25.9%가 증가했다.

기술협력의 사업당 평균 지원규모는 6만달러이며 비중이 44.2%로써 증가하고 있고, 프로젝트의 사업당 평균 지원규모는 1.2백만달러이며 비중은 29.9%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원분야로 교육(17.6%), 보건(13.6%), 통신(10.2%) 등의 지원비중이 다소 높으나, 최근 지원비중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III-3> 유·무상 원조 체계 비교

	유상원조	무상원조
담당기관	기획재정부(EDCF)	외교부(KOICA), 30개 기관
목적	개도국의 산업발전, 경제안정, 대외경제협력 촉진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상호교류, 경제/사회 발전 증진
근거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지원규모('07 ~ '09)	2,589 백만달러	1,337 백만달러
사업추진절차	중기 국가별 내에서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중기전략, 국별지원전략 내에서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여부 결정
주요지원유형 (07-09)	·개발차관(88.5%) ·기자재차관(11.5%)	·프로젝트(29.9%) ·기술협력(44.2%)
주요 지원분야	도로, 상하수도 등 대형 경제인프라 및 기자재 등	교육, 보건, 통신 등 다양한 분야 소규모 사업
평균적인 사업규모 ('07 ~ '09년)	·개발차관(39.5백만달러) ·기자재차관(14.1백만달러)	·프로젝트(1.2백만달러) ·기술협력(0.06백만달러)
상호보완 필요사항	사업타당성 조사, 사후유지 보수 관리 · 기술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출처 : 이원희,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방안", ODA 사업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 2011.11, p.8.

2009년도 우리나라 ODA 집행규모(순지출 기준)은 816백만달러로, 양자간 원조는 581.09백만달러, 다자간 원조는 234.93백만달러를 기록했다.

<표 Ⅲ-4> 부처(기관별) ODA 집행 실적(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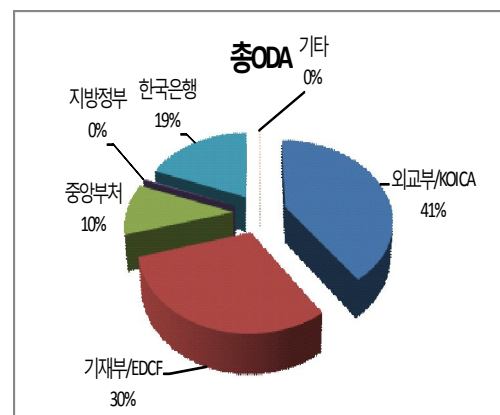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양자간		다자간		총ODA	
외교부 및 KOICA	290.38	50.0	38.71	16.5	329.09	40.3
기재부 및 EDCF	236.30	40.7	10.23	4.4	246.53	30.2
중양부처	51.16	8.8	32.34	13.8	83.50	10.2
지방정부	2.25	0.4	-	-	2.25	0.3
한국은행	-	-	153.65	65.4	153.65	18.8
기타	1.0	0.2	-	-	1.0	0.1
합계	581.09	100.0	234.93	100.0	816.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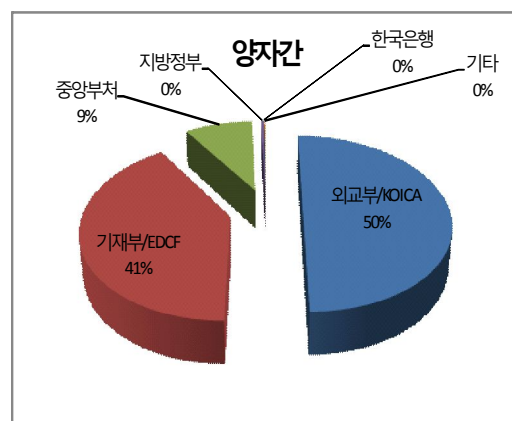
주 : 순지출 기준이며 확정치임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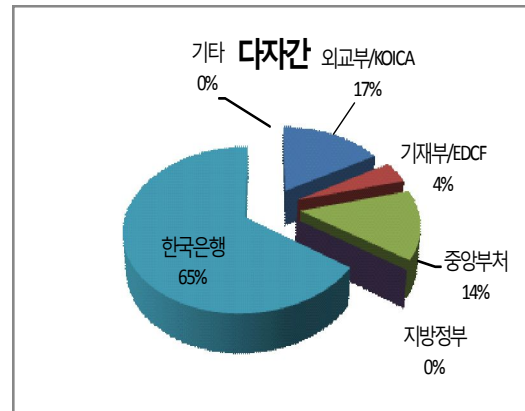
외교통상부와 KOICA의 지원 실적이 329.09백만달러(40.3%), 기재부 및 EDCF가 246.43백만달러(30.2%), 중양부처가 83.50백만달러(10.2%), 지방정부 2.25백만달러(0.3%), 한국은행 153.65백만달러(18.8%) 순이다.



양자간 원조의 경우, 외교부 및 KOICA가 290.38백만달러(50.0%)로 가장 집행실적이 높았으며, 기재부 및 EDCF가 236.30백만달러(40.7%), 중양부처가 51.16백만달러(8.8%) 순이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한국은행이 153.65백만달러(65.4%)로 가장 집행 실적이 높았으며, 외교부 및 KOICA가 38.71백만달러(16.5%), 중앙부처(13.8%)의 순이다.



기재부와 외교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및 기관 등 24개 기관만을 가지고 살펴 보았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26.74백만달러로 가장 ODA 집행이 높았으며 보건복지가족부 15.62백만달러, 행정안전부 9.35백만달러, 농림수산식품부 7.82백만달러 순으로 기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총 ODA 집행액은 0.66백만달러(0.1%)로 전체 ODA 집행액 중 그 비중이 미비한 상황인데 유상 05.6백만달러(0.1%), 0.1백만달러(0.0%)로 총 ODA 집행실적은 24개 부처(기관) 중 11위로 중간정도 위치이다.

② ODA 사업 수행기관별 현황

1) KOICA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는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이후로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데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 복구 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대응의 8개 분야를 집중 추진 중인데 특히 국토해양분야 지원은 행정제도, 농촌 개발,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KOICA는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개도국의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 정책 경험과 그 전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부족과 개도국의 자원 요청수요와의 연계성 결여 등의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다.

<표 Ⅲ-5> KOICA 주요 수행사업

구분	내용
프로젝트 사업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부정책, 제도수립,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필요 물자공여 등 지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및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해외봉사단파견	우리나라의 청장년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현지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술이전,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와 파견국 국민들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해외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등 긴급재난에 대해 현지 인력 파견, 긴급구호물자제공, 현금 지원 등
민관협력 사업	민간단체의 비교우위분야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개도국 서민층 지원 강화 및 정부차원 사업 보완
평화구축지원 사업	반테러 최전선에 있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지원 확대 및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원지속, 국제사회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 및 개발 파트너십 구축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정진규 외(2009)²⁰⁾의 분석결과 교육강화, 법제도 개선 등에 치중하여 다양한 지원 희망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 민간참여 활성화, 재정정책개선, 연구기관설립 등에 대한 지원희망수요는 존재하나 지원사례는 전무하다.

소규모 ODA 예산으로 5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국별 전략 수립에 어려움 등이 있어 2010년 10월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무상 및 유상 ODA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6개의 중점협력국을 지정했다.

KOICA는 ODA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별 상임연구원을 육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세부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글로벌 ODA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2010년)을 수립했고 중점분야를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25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선정, 각 프로그램별 모델화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성과를 실제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20) 정진규 외 3인, 2009,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그림 III-1> KOICA 중점지원분야 개편

국토해양분야와 관련 분야가 산업에너지 분야인데 이는 개도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수자원·국토관리 등 경제기반시설 구축과 전력 등 에너지의 개발·공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

2006년부터는 컨설팅, 개발조사 등 기술협력 형식의 사업추진에 집중하여, 건설 사업 건수는 2007년 11건에서 2009년 5건으로 감소된 반면 개발조사사업은 11건으로 증가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건설 사업은 도로, 다리, 댐, 발전소, 공항 등 대규모로 추진되어, KOICA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산업에너지 분야를 수원국별 경제발전 단계·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6> KOICA 산업에너지분야 기본방향

구분	국가군 분류	중점전략
국가발전 단계별	국토기초자료 미비국가 (캄보디아, 우즈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 기초정보 자료 확충지원 - 측량기준점 설치, 지도제작 -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초기산업화 국가 (베트남, 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구축 및 재원 확보 지원 - 도로, 철도 등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지원
국가특성별	도서/해안국가 (필리핀, 몬테니그로,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항만 개선 및 건설지원
	내륙국가 국경지역 (아제르바이잔, 태국·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인접국 교통연계망 구축지원을 통한 국경지역 연결
	수자원 보유 국가 (캄보디아 등 CLMA 국가, 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수자원 관리체계 및 기술지원 - 댐 건설 지원 등을 통한 수자원 확보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그림 III-2>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

출처 : KOICA, 2011, 한국국제협력단 20년

산업에너지 분야의 중점추진전략은 ① 국가 교통인프라 개선(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등 기반시설), ②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③ 에너지 인프라 개선이며, 12개의 하위 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²¹⁾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EDCF는 1987년 설치된 이후 2009년 말까지 세계 47개 개발도상국의 231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5조 9,260억원의 원조자금을 지원(승인)했다.

EDCF 자금은 '87년부터 '09년간 지역별로 아시아 68.8%, 아프리카 14.8%, 중남미 5.9% 등의 순으로 지원해 왔으며, 분야별 지원실적은 교통 35.4%, 수자원·위생 15.1%, 보건 10.9%, 에너지 10.3%, 통신 9.8%, 교육 8.1%, 공공행정 4.0% 등이다.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6,900달러 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험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과 또한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토록 하고 있다.

<표 Ⅲ-7> 우선 추진 사업

구분	내용
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점국가 추진 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협조융자사업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조 융자하는 사업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21)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식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EDCF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09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풍력·바이오 등의 신성장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 F/S)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ADB의 미래탄소펀드(Future Carbon Fund)에 '10년~'14년간 EDCF를 통해 2천만불의 출자를 결정하였다. ADB의 미래탄소펀드는 ADB 역내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13년 이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할 예정이며, 동 펀드에는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의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① 무상

1) 초청연수

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 경제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자, 연구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연수시키는 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연수분야를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재난구호복구, 환경여성 등 크게 8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DA 통계의 중분류로(구체적인 분류결과는 <부록 1> 국토해양분류표 참조) 국토해양분야를 추출하였다.

국토해양분야 초청연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와 같다. 최근 4년간 무상 ODA 중 초청연수의 비중은 평균 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청연수 중 국토해양분야 초청연수의 비중은 2007년 22.0%, 2008년 23.9%, 2009년 15.5%, 2010년 20%로 국토해양분야의 초청연수는 평균 20%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초청연수 중 국토해양분야 각 분야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교통·물류 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개발 24%, 건설·수자원 23%, 해양 13%, 도시개발 10%, 주택 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세가 지역개발이 줄어드는 대신에 교통·물류와 도시개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청연수사업 중 국토해양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 2008년 3%, 2009년 3%, 2010년 4%로 낮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교통·물류 분야는 2007년 15%, 2008년 18%, 2009년 31%, 2010년 27%로 최근 들어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건설·수자원 분야의 경우는 2007년 21%, 2008년 22%, 2009년 24%, 2010년 23%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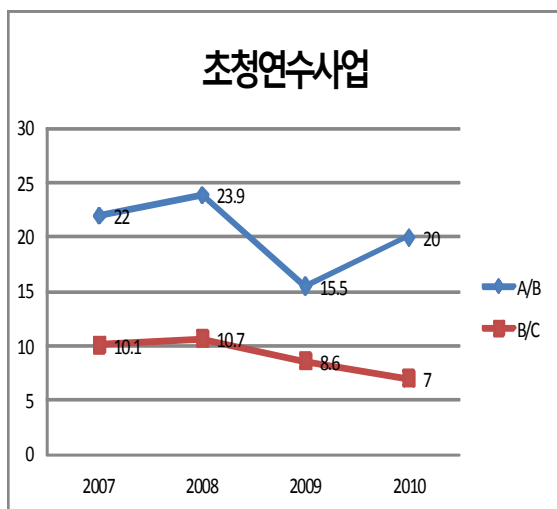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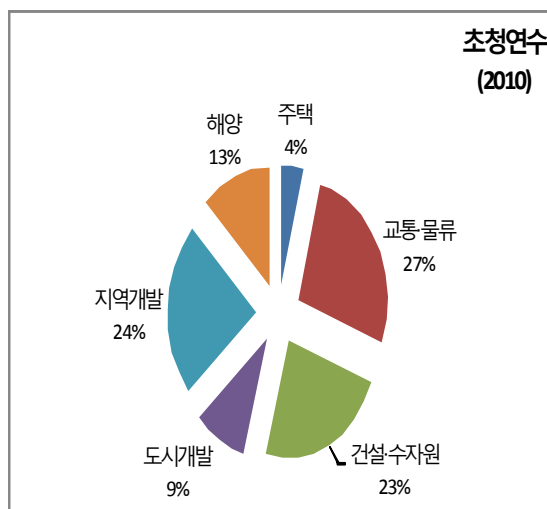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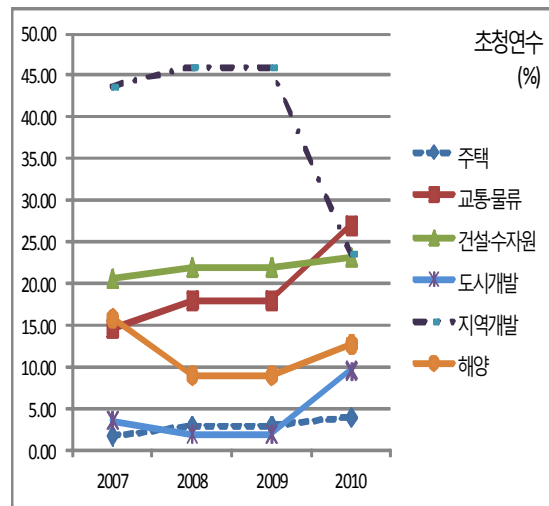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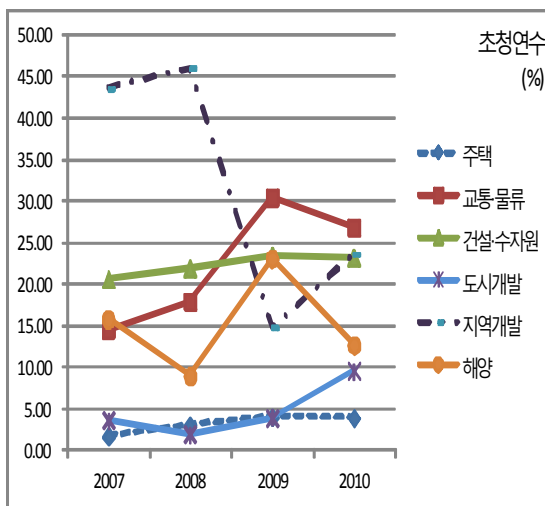
도시개발 분야는 2007년 4%, 2008년 2%, 2009년 4%, 2010년 10%로 2010년 들어 전년대비 2배 이상 비중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지역개발 분야는 2007년 44%, 2008년 46%, 2009년 15%, 2010년 24%로 최근 들어 초청연수사업 중 지역개발의 비중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표 Ⅲ-8> 국토해양분야 무상 ODA 초청연수사업 현황

(단위 : 달러, %)

	2007		2008		2009		2010	
주택	104,950	2	226,017	3	148,506	4	250,662	4
교통·물류	871,620	15	1,223,789	18	1,126,003	31	1,716,366	27
건설·수자원	1,228,658	21	1,542,748	22	867,712	24	1,479,699	23
도시개발	219,116	4	159,038	2	146,740	4	610,789	10
지역개발	2,599,195	44	3,183,456	46	546,615	15	1,507,388	24
해양	943,955	16	653,757	9	852,060	23	810,658	13
국토해양분야 초청연수 합계 (A)	5,967,494		6,988,805		3,687,636		6,375,562	
초청연수 합계(B)	27,126,191		29,257,628		23,807,985		31,695,226	
무상 ODA 합계(C)	269,012,246		272,938,925		275,928,278		454,142,208	
A/B	22.0		23.9		15.5		20	
B/C	10.1		10.7		8.6		7.0	

출처: KOICA ODA 통계(Annual Report)



2)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은 개발도상국이 희망하는 분야에 일정기간동안 파견되어 기술 지도, 연구, 강의,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외에 KOICA가 지원하는 대개도국 원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 및 자문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KOICA에서는 분야를 원조이슈, 국가,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및 환경, 인도적지원, 다분야, 기타 등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해양분야의 경우,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및 환경, 다분야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초청연수와 마찬가지로 ODA 통계의 중분류에 의해 국토해양분야를 주택, 교통·물류, 건설·수자원, 도시개발, 지역개발, 해양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무상 ODA 중 전문가 파견사업의 규모는 2007년 0.3%, 2008년 0.3%, 2009년 0.1%, 2010년 0.3%로 극히 미비한 수준이지만, 전문가 파견 중 국토해양분야 파견 비율은 2007년 31.8%, 2008년 57.1%, 2009년 52%, 2010년 30% 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분야 분야별 전문가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07년부터 '10년까지 전문가 파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수자원 분야의 경우, '07년, '08년, '09년 전문가 파견 실적이 없었으나, '10년에는 27만달러가 지원되었다.

도시개발분야의 경우, 2007년 3.8만달러, 2008년 7.4만달러, 2009년 6.7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전문가 파견 지원액이 상승했다.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2007년 20만달러, 2009년 28만달러이었으나, 2009년 전문가 파견이 없었으며 2010년 13만달러가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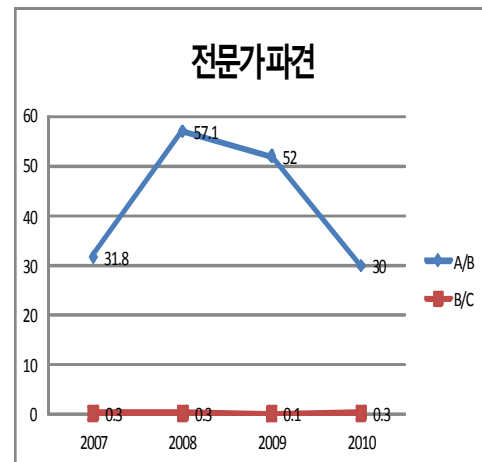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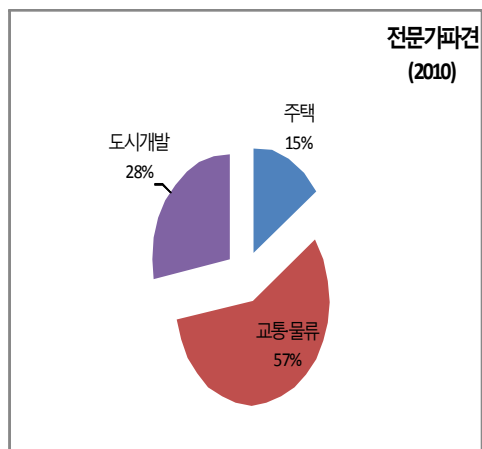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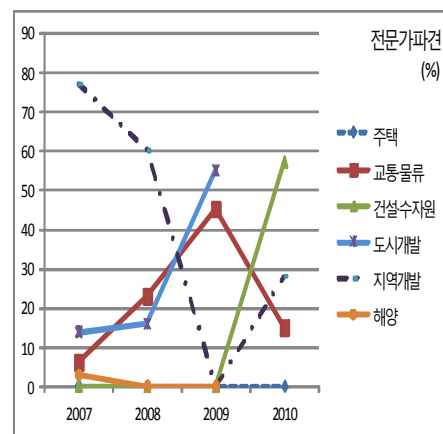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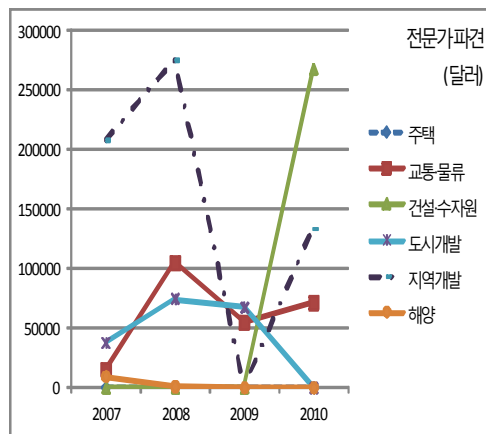
2010년 국토해양분야 전문가 파견 비중을 보면 건설·수자원이 57%, 지역개발 28%, 교통·물류가 15% 순으로 건설·수자원 분야에 전문가 파견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9> 국토해양분야 무상 ODA 전문가 파견 현황

(단위 : 달러, %)

	2007		2008		2009		2010	
주택	-	-	-	-	-	-	-	-
교통·물류	14,982	6	105,144	23	55,053	45	71,183	15
건설·수자원	-	-	-	-	-	-	267,662	57
도시개발	37,773	14	74,208	16	67,230	55	-	
지역개발	207,954	77	275,510	60	-	-	133,505	28
해양	9,313	3	1,034	-	-	-	-	
국토해양분야 합계(A)	270,022		455,896		122,283		472,350	
전문가파견 사업(B)	849,508		797,854		235,164		1,572,738	
무상 ODA(C)	269,012,246		272,938,925		275,928,278		454,142,208	
A/B	31.8		57.1		52		30	
B/C	0.3		0.3		0.1		0.3	

출처: KOICA ODA 통계(Annual Report)



3)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프로젝트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년~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물적·인적자원을 수원국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측은 부지, 현지비용, 현지인력 등을 부담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물적·기술적·인적 협력수단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 ODA 중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의 비율은 '07년 45.8%, '08년 47.1%, '09년 53.3%, '10년 66.6%로 매년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의 비율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중 국토해양분야의 비중은 '07년 25.5%, '08년 26.7%, '09년 18.6%, '10년 15%로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분야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프로젝트는 건설·수자원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개발이 15%, 교통물류가 11% 순이다. 2010년 개발조사의 경우에는 건설수자원 35%, 도시개발 33%, 교통물류 33% 등 3개 분야가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와 개발조사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젝트에서 교통물류는 2007년 139만달러(5%), 2008년 411만달러(15%), 2009년 159만달러(7%), 2010년 426만달러(11%)로 수준이었다. 건설수자원은 2007년 2,056만달러(78%), 2008년 1,143만달러(42%), 2009년 1,229만달러(56%), 2010년 2,315만달러(62%)로 국토해양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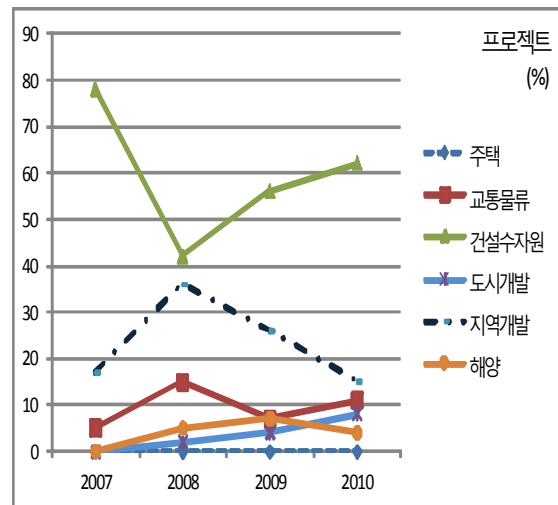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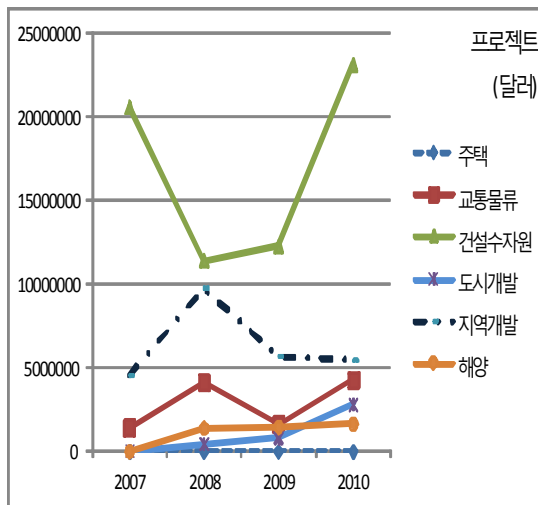
개발조사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는 교통물류, 건설수자원, 도시개발이 30%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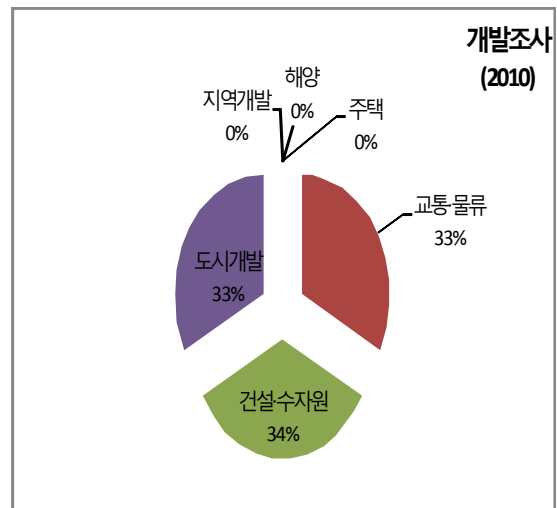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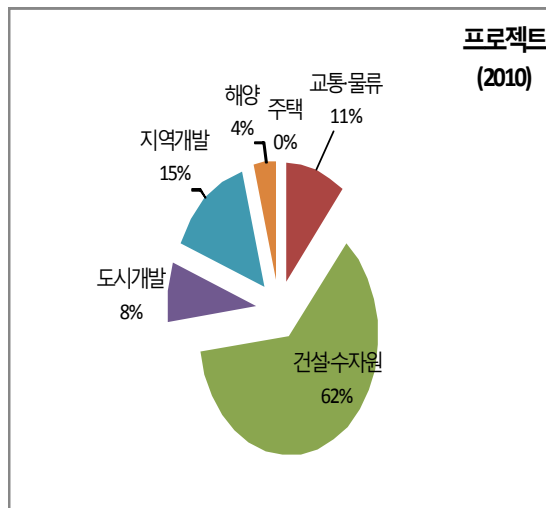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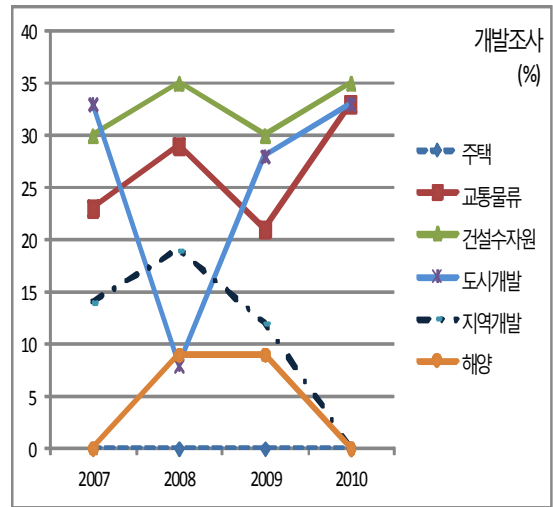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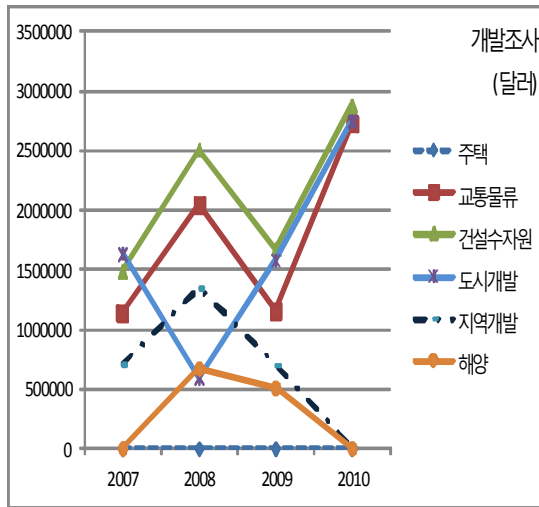
<표 III-10> 국토해양분야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ODA 현황

(단위 : 달러, %)

	2007		2008		2009		2010	
	프로젝트	개발조사	프로젝트	개발조사	프로젝트	개발조사	프로젝트	개발조사
주택	-	-	-	-	-	-	-	-
	-	-	-	-	-	-	-	-
교통물류	1,388,843	1,139,825	4,111,957	2,041,608	1,594,242	1,150,030	4,256,261	2,719,274
	5	23	15	29	7	21	11	33
건설수자원	20,556,392	1,483,842	11,416,299	2,498,708	12,289,259	1,667,395	23,154,722	2,877,403
	78	30	42	35	56	30	62	35
도시개발	23,006	1,631,896	422,044	591,794	792,744	1,579,635	2,802,673	2,739,382
	-	33	2	8	4	28	8	33
지역개발	4,535,914	702,605	9,749,853	1,344,256	5,678,600	695,274	5,462,568	-
	17	14	36	19	26	12	15	-
해양	-	-	1,380,134	670,700	1,474,463	506,942	1,643,667	-
	-	-	5	9	7	9	4	-
소계	26,504,155	4,958,168	27,080,287	7,147,066	21,829,308	5,599,276	37,319,891	8,336,059
	100.0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토해양분야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A)	31,462,323		34,227,353		27,428,584		45,655,950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B)	123,249,452		128,424,782		147,191,609		302,544,337	
무상 ODA (C)	269,012,246		272,938,925		275,928,278		454,142,208	
A/B	25.5		26.7		18.6		15	
B/C	45.8		47.1		53.3		66.6	

출처: KOICA ODA 통계(Annual Report)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시장에서 원조효과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목을 요하는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수자원분야에 비해 과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프로젝트에서는 지역개발은 15%, 도시개발은 8%에 불과하며 개발조사사업분야에서는 도시개발은 33%이지만 지역개발은 전무하다. 향후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 ODA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조사에서 프로젝트화를 이루는 연결구조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2 유상

EDCF 자금의 분야별 지원을 살펴보면 교통, 수자원·위생, 보건, 에너지, 통신, 교육, 공공행정, 환경보호, 농수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국토해양분야로 재조정 한 것이 <표 III-11>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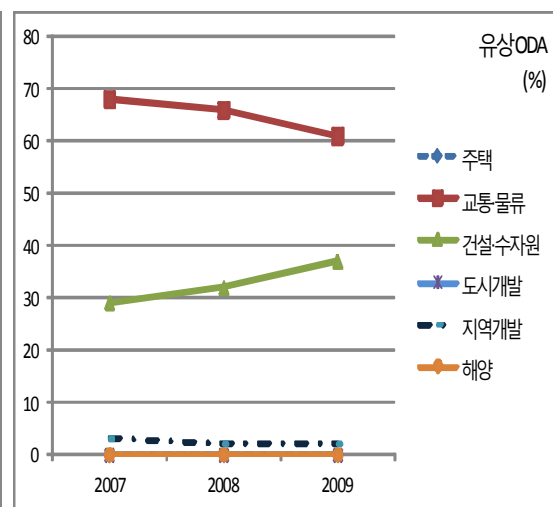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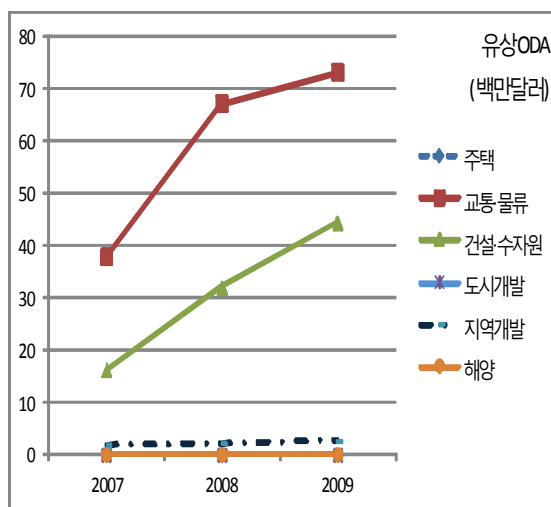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유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통·물류부문과 건설·수자원부문 등 2개 분야가 전체 지원의 9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의 비율은 3%대로 그 비중이 미비했으며 주택분야와 해양분야는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국토해양분야 EDCF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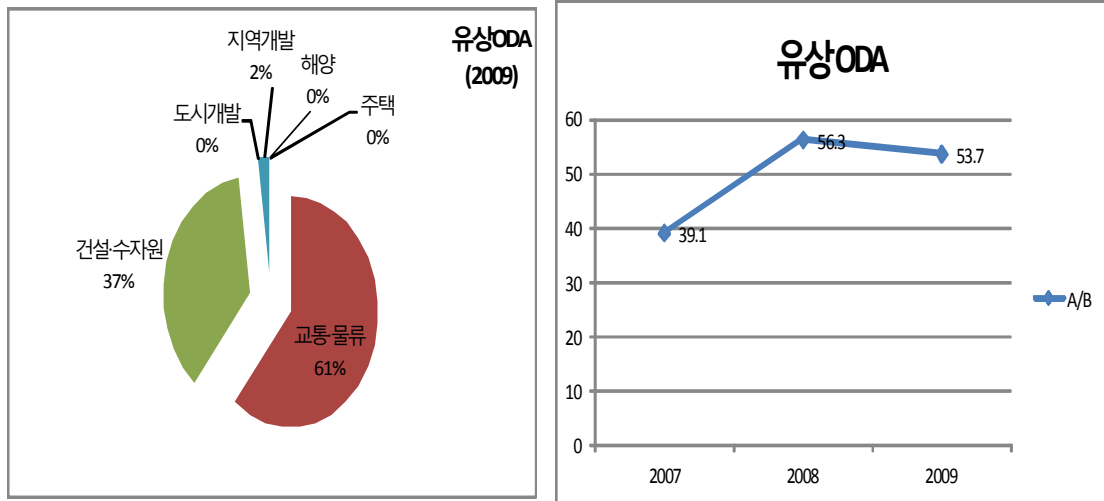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

	2007		2008		2009	
주택	-	-	-	-	-	-
교통·물류	37.86	68	67.24	66	73.16	61
건설·수자원	16.13	29	31.94	32	44.27	37
도시개발	-	-	-	-	-	-
지역개발	1.67	3	2.13	2	2.61	2
해양	-	-	-	-	-	-
국토해양분야 합계(A)	55.66		101.31		120.04	
유상 ODA 합계(B)	142.53		180.00		223.71	
(A/B)대비 비중	39.1		56.3		53.7	

출처: KOICA ODA 통계(Annual Report)



유상 ODA 중 국토해양분야의 비중은 2007년 39%, 2008년 56%, 2009년 54%로 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③ 유·무상 연계사업²²⁾

1) 현황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간 연계사업의 EDCF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기금 업무 개시 이후 2010년 10월말까지 총 23개의 유·무상 연계사업에 7억 7,270만달러가 승인되었으며, 2010년 10월말까지 총 승인금액(58억 2,137만달러)의 1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유·무상 연계사업은 모두 개발조사사업(무상, KOICA)이 유상사업으로 연계된 형태로 유·무상 연계를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니며, 수원국의 요청 등에 의한 개발조사사업을 시행한 이후 이를 유상사업에 활용하였다.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유·무상 연계사업은 2008년 이후 국토해양부 등 개별부처가 타당성 조사, 기술협력 등 ODA 사업을 확대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연계사업 건수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9건으로 한 해당 0.75건에 불과하였지만, 2008년 부처의 ODA가 확대되면서 2008년 한 해에만 4건, 2009년에는 8건 등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처의 유·무상 연계사업 참여로 인해 분야 전문성이 증가하고 부처의 네트워크가 ODA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유·무상 연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국토부의 캄보디아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사업, 환경부의 스리랑카 Ruhunupura 상수도 개발사업 등 2건으로 전체사업(4건) 중 50%를 차지했고 2009년에는 국토부 2건 (베트남의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볼리비아의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 특허청의 인도네시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건, 교과부 3건 (콜롬비아의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 방글라데시의 ICT 교육훈련 센터 건립사업, 콜롬비아의 ICT R&D 센터 건립사업), 환경부의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장사업 1건 등으로 부처의 유·무상 연계사업 참여가 전체사업(8건) 중 무려 88%에 이르게 된다.

기관별 연계유형도 기본의 ODA 전담기관인 KOICA와 EDCF의 연계사업이 11건이지만, 부처와 연계사업은 부처와 EDCF간 11건, KOICA+부처+EDCF 1건 등으로 1개가 더 많다.

사업유형별로는 2007년까지 ‘무상개발조사 + 유상 프로젝트’연계로서 KOICA와 EDCF 연계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8년 이후 부처의 유·무상

22) 유·무상 연계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원조 분절화 방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원국의 부담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계사업 참여로 인해 ‘무상 기술협력 + 유상 프로젝트’, ‘유상 프로젝트 + 무상 기술협력’ 등으로 다양화 하는 추세이다.

특이한 사항은 부처의 무상참여와 EDCF간의 연계사업으로서 부처의 무상 참여가 유·무상 연계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 사업 이후 유지·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표 Ⅲ-12> 유·무상 연계사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사 업 명	EDCF 승인년도	연계기관	EDCF 승인금액	연계유형
베트남, 18번 도로 개량사업	1995	KOICA	24.0	A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사업	1996	KOICA	9.0	A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996	KOICA	15.0	A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사업	2002	KOICA	17.1	A
예멘, 통신망 현대화 사업	2003	KOICA	30.0	A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사업	2005	KOICA	26.7	A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사업(2차)	2006	KOICA	16.0	A
우즈베크, 교육정보화 사업	2006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30.0	A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	2007	KOICA	37.2	A,B
캄보디아,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사업	2008	국토해양부	30.0	A
스리랑카, Ruhunupura 상수도 개발사업	2008	환경부	76.0	B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	2008	KOICA	45.0	A
스리랑카, 도로 개보수 사업	2008	KOICA	55.0	A
스리랑카, 하톤~누와라엘리아 도로 개선사업	2009	KOICA	40.0	A
베트남, 호치만~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009	국토해양부	30.0	C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	2009	국토해양부	41.0	B
인니,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9	특허청	33.0	C
콜롬비아, ICT교육역량 강화사업	2009	교과부	30.0	A
콜롬비아, ICT R&D 센터 건립사업	2009	KOICA, 교과부	10.0	A, B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장사업	2009	환경부	50.0	A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2009	교과부	39.0	A, B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2010	교과부	70.0	C
캄보디아, 몽골보레이댐 건설사업	2010	KOICA	18.7	
합계 (22개)			772.7	

주 : 연계유형은 A: 개발조사(무상)+프로젝트(유상) B: 교류협력(무상)+프로젝트(유상)C: 교류협력(유상)+프로젝트(무상)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 주요 사례

① 라오스 메콩강변 사업

라오스 메콩강변 사업은 KOICA의 초청연수, KOICA의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 및 EDCF 자금지원이 연계된 사례이다. 2004년 KOICA 초청연수로 라오스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고 2005년에는 한강유역 개발사례 견학으로부터 메콩강변 제방사업을 계획하고,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무상지원을 요청, 2007년 KOICA가 지원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 기획투자부가 우리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

<표 III-13> 라오스 메콩강변 사업 평가

구분	내 용
지원연도	04 : 초청연수 06 : 개발조사(타당성조사) 완료 08 : 차관계약 체결
지원분야	수자원 관리
유·무상 연계유형	초청연수(무상) + 개발조사(무상) + 프로젝트(유상)
사업목표	비엔티안시메콩강 제방정비와 강변도로 건설을 통해 홍수해를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예산(본사업)	총 49백만달러(한국 37.2백만달러, 라오스 11.8백만달러) 투입

출처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최근 태국이 기술협력 등 무상원조와 인프라 중심의 유상원조를 연계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원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합작회사를 세워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이다.

KOICA의 초청연수 및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과 EDCF 유상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유·무상 연계의 모범사례이나 유·무상 연계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수원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성사된 점은 한계가 있다.

사업규모상 무상 단독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무상간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이러한 유·무상 연계사업은 적절하다.

또한 라오스 “중장기 국가개발 및 빈곤퇴치 전략”상 최우선 과제²³⁾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

일본 등 타국사례와 비교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유·무상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메콩강 제방축조를 통한 홍수예방 및 국토관리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차관지원까지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타 공여국과 비교할 때 차관지원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다는 수원국의 평가를 받았다.

타당성조사 실시협의시 본 사업의 EDCF 연계를 라오스측에 제안하여, 타당성 조사에서 본 사업까지 비교적 신속히 추진되었으나, 수원국과의 정례협의 등 사업 발굴 절차에서 유·무상 연계를 사전에 계획하고 수원국에 제시하지는 못했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제방건설로 홍수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선진제방 건축 기술을 전수하고, 강변공원 조성 및 도로 확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지원이 수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라오스는 자국의 재원·인력을 활용하여 메콩강변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아직 사후지원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개도국의 사례처럼 교통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정부와 협력하여 교통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 사업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 사업은 KOICA의 사업타당성검토 무상지원과 EDCF 차관이 연계된 사업이다.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94년 KOICA가 수력발전소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무상지원했고 네팔은 본사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성사하지 못하여 한국정부에 차관지원을 요청하였고, '97년 한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게 되었다.

<표 III-14>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연도	94 : 개발조사(타당성조사) 완료 97 : 차관계약 체결 00 : 사업 완공
지원분야	전력(수력발전)
유·무상 연계유형	개발조사(무상) + 프로젝트(유상)
사업목표	네팔의 전력 생산량 제고를 통해 생활수준 향상 및 산업발전에 기여
예산(본사업)	총 27.2백만달러(한국 15백만달러, 네팔12.2백만달러)투입

출처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무상지원을 선호하는 네팔의 ODA 수원정책 등으로 아직까지 유·무상이 연계된 타 공여국의 지원사례는 없다. 네팔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2002년 이후 유상원조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나, 최근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유상원조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수력발전소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유·무상 연계 형태의 사업추진은 바람직했으나 네팔에 대한 지원전략으로부터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기획 단계부터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

네팔은 최빈국으로 발전소 운영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재원도 부족한 점을 고려, 유·무상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이 필요하다. 네팔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유·무상 연계지원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했고 심각한 전력난 해결은 네팔 개발전략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유·무상 연계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동 발전소는 네팔 발전실적의 3.82%를 차지하여 네팔의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및 네팔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했다. 네팔과의 유상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KOICA의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을 통해 유·무상 연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이 사업은 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유·무상 연계가 검토되지 않아 사업계획-이행-평가단계 전반에 걸쳐 유·무상간 협의가 부족했는데 당초 네팔이 차관지원을 검토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시 EDCF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타당성조사 완료 후 차관계약까지 약 3년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네팔 원조총괄기간인 재무부가 KOICA와는 정례적으로 협의하나, EDCF와는 별도의 정례협의를 하지 않아서 완공 후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불충분했다. 건설기간 중 자연환경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사업 준공 1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었다. 하지만 하류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및 어류의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발전소 전력 생산 및 송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정적 어려움, 운영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넷째, 관리소홀로 시설물 인계 시 제공한 각종 매뉴얼이 유실되어 사전예방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고 충분한 필수부품의 예비자재가 확보되지 않아 발전량이 발전용량의 50~60%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훈련인력 교육 및 전문가 파견 등 무상 기술협력이 절실하고 유·무상 연계 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후운영 및 관리를 위한 무상지원 예산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종합 평가

본 연구에서의 파악된 국토해양분야 유·무상원조 사업의 실적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초청연수의 경우, 국토해양관련 기관의 연수실적은 약 10%에 불과하나, 본 연구에서는 약 20%로 파악된다. 이는 국토부의 국토해양분야 유·무상원조 사업의 관리범위가 2배 이상 증가해야 함을 의미하며, 국토해양분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KOICA와 EDCF의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KOICA사업 중 국토해양 분야가 포함된 산업에너지분야는 국토해양과 산업에너지분야로 이원화 될 필요가 있다. 유·무상 연계사업에서도 국토부가 참여함으로써 연계사업 실적이 대폭 상승한 것은 전문 부처가 ODA사업체계에 참여할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다자간개발협력기구 지원 현황

1) 우리나라의 다자간 개발협력기구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다자간개발협력기구 지원 사업의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와 한국은행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국제기구과는 MDB지원, 한국은행은 UN 및 OECD 등을 지원하고 있다.

MDB지원의 경우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형태로 지원하는 Grant 자금이 주류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는 한국신탁기금에 대한 관리를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신탁기금은 과거 sector별 접근에서 최근에는 통합적인 모델로 전환 중이다.

일례로 과거에는 ICT Trust Fund를 중심으로 한 농업 장려 신탁 기금 등 sector별 다자간 기금이 주축이었으나, 현재는 Green Growth Trust Fund 등을 통해 교통, 도시 개발, 지역 개발, 환경 등 통합적인 패키지 모델로 한국신탁기금을 조성 중이다.

※ Green Growth Trust Fund : 2012년부터 연간 1000만달러씩 2015년까지 4000만달러를 World Bank에 지원

2) 개별 부처의 다자간개발협력기구 지원 현황

2010년까지 우리의 ODA는 비교적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개발금융과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최근 MDB활용과 연계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에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사업에서 다자간ODA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례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양자간 원조형태로 시행해온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2011년부터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와 연계한 삼각협력형태의 KSP다자간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위탁 운영 중이다.

※ 한국수출입은행의 KSP 다자간 사업 : 2011년 20억 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당 3억의 Grant 자금 한도가 있는 사업. 이 다자 지원 사업은 ADB, IDB, WB 등 국제개발은행의 요청에 따라 국내 연구 기관과 협력, 지식의 공유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유상 프로젝트화를 도모 중이고 국제개발은행과 co-financing²⁴⁾ 또는 parallel-financing²⁵⁾을 모색

이 사업은 부처의 무상 ODA가 국제개발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 사업으로 연계되는 유·무상 연계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 협력, 도시 개발 협력 등 국토해양 분야에 다자간 사업으로 발전 중이다.

3) MDB의 신탁기금 활용 현황

MDB신탁기금은 공여국 정부 등이 해당 국제기구의 사업 범위 내 특정분야, 국가·지역 또는 특정 이슈들에 대한 개발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국제기구에 위탁하는 기금을 말한다.

공여국 다자 및 양자 ODA의 장점을 모두 활용 가능하고 순수 다자원조와 달리 특정 분야·국가 등을 지정하여 기여가 가능하며, 국제기구 지원의 가시성이 높은 편이다. 위험·분쟁지역, 정치적 부담 등 양자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인적자원·역량을 활용하며, 국제기구의 원조기법에 대한 학습 기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기구 신탁기금으로 약 777억원을 기여했는데 각각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ADB등) 기금에 약 619억원(80%)을, 유엔/기타기구(UNDP, ILO등) 기금에 약 158억원(20%)을 각각 기여했다.

24) CO-FINANCING :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에 여러 투자 주체들이 모여 공동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모색. 다만 주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체의 조건에 따라 다른 파이낸서들이 주 파이낸서의 조건을 준수하는 파이낸싱

25) PARALLEL-FINANCING : 전체 지역 및 프로젝트를 개별 지역 및 프로젝트로 분할하고 각각의 파이낸서들이 독립적으로 파이낸싱하는 기법

<표 Ⅲ-15> 한국의 '10 ODA 신탁기금 예산 현황

총액	다자개발은행	유엔및기타기구
777억원(29건)	619억원(13건)	158억원(16건) ²⁶⁾

우리나라는 총 39개 신탁기금 중 단독 출연기금(Single-Donor)은 31개(79%)이며, 다자 출연기금(Multi-Donor)은 8개(21%)이다.

- 단독 출연기금 : 국제금융기구(12개), 유엔 및 기타 기구(19개)
- 다자 출연기금 : 국제금융기구(8개)

<표 Ⅲ-16> 우리나라 신탁기금 유형

수혜국 공여국	단일 수혜국 (Single-Recipient)	다수 수혜국 (Multi-Recipient)
○ 한국 단독(Single-Donor)	-	31개
- 국제금융기구	-	12개
- 유엔 및 기타기구	-	19개
○ 다국가(Multi-Donor)	-	8개
- 국제금융기구	-	8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신탁기금 중 1천만불 이상은 16개, 5백만~1천만불은 3개, 5백만불 이하는 20개를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은 조성규모가 크고 UN 및 기타기구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표 Ⅲ-17> 신탁기금 규모

구분*	1천만불 이상	5백만~1천만불 이하	5백만불 이하
○ 기금수	16	3	20
- 국제금융기구	13	1	6
- 유엔 및 기타기구	3	2	14

* 출연 약정액 또는 기여실적 수준

*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당 평균 조성액은 1천만불('10년 기준)

1천만불 이상은 16개 기금 중 13개 기금이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IDB 가입(2005) 계기에 설치된 빈곤감축기금·지식협력기금(이상 각 5천만불)과 IBRD내에 설치된 농업식량안보기금(2010, 5천만불), 녹색성장신탁기금(설치예정, 4천만불) 등이 규모가 가장 크다.

유엔 및 기타기구는 한-ASEAN 협력기금('90~'10간 누적총액 47백만불)과 한-ESCAP 협력기금('87부터 누적총액 1천만불)이 장기간 지속 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 저개발국 한-유네스코 신탁기금은 1천만불 규모로 조성이 예정되어있다.

26) 외교부 : 9건(12,156백만원), 교과부·고용부 등 6개 기관 : 7건(3,672백만원)

5백만불~1천만불 규모의 기금은 유엔 및 기타기구에 2개(한-UNDP MDGs 신탁기금, 한-ILO 특별협력사업기금), 국제금융기구(재생에너지 개발사업기술 지원기금)에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5백만불 이하의 기금은 총 20개 기금 중 14개가 유엔 및 기타기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적은 규모의 신탁기금은 한-ECA 협력기금(10만불/년), 한-ESCAP 신탁기금(16만불/’10~’13)이 있다.

우리나라 신탁기금이 모두 다수 수혜국 유형인 상황에서 기금의 약 50%가 규모마저 영세하여 원조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여 규모가 연 10~30만불인 일부 단독기금은 신탁 기금의 이점과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출장비용 등을 감안시 내실 있는 사업시행이 곤란하다. 게다가 유엔 및 기타기구의 신탁기금은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에 소관부처까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탁기금은 현재 설치와 운용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가 없이 사실상 소관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간 중복·분절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도 내부적으로 단위조직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관제부처는 국제기구와 협력 구축 방안의 하나로 신탁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해당기구와의 관계변화에 따른 신규 신탁기금 설치의 필요성 대두도 그 원인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신탁기금이 △개도국의 개발지원이라는 주요 목적 이외에 △우리인력 진출 △국제협력 강화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등의 부수적 목적도 있다. 하지만 사업분야에서 특정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규모는 유엔 및 기타기구는 건당 20만불 미만, 국제금융기구도 건당 50만불 미만이 대부분인 소액 사업들에 기금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부분 기술협력, 컨설팅 사업으로서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워크숍이나 회의 지원, 초청연수 등이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신탁기금²⁷⁾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신탁기금 사업과 우리 양자 ODA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신탁기금은 통상 소관부처가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목적, 운용방법 등을 명기한 양해각서(MOU) 및 행정협정(Administrative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해 설치 운용된다. 그러나 신설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의가 없고 국가차원의 ODA 큰 틀에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기존기금과의 중복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27)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신탁기금(KOAFEC Fund), 한-태평양도서국(PIF) 협력기금 등

세부사업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우리 양자 사업들과의 연계를 검토할 수 없고,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세계은행의 일부 신탁기금에 농식품부(농업식량안보기금), 고용부(고용과 성장기금), 교과부(빈곤감축기금)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UNDP MDGs 신탁기금에도 유관기관인 KOICA가 참여중이다.

5 국토해양분야 신탁기금 현황

2011년 9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녹색성장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 MOU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자금을 활용하여 WB 개도국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WB에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Trust Fund)」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4년간 총 4,000만불을 출연할 계획이다.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Trust Fund)」은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의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연구·투자 및 한국-개도국 간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국가와 사업계획은 향후 WB와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그 사례로 통합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규제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WB측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이는 WB가 한국을 녹색성장에 있어 첫번째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과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한 이래, 그간 GGGI 설립 등 녹색성장을 국제 자산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금년 6월 서울에서 세계유명 석학, 국제기구 고위인사, 주요국 각료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서밋(GGGS)을 개최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WB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은 국제기구와의 협력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행 등 일반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져 왔지만²⁸⁾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거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분야에 중점 출연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색깔과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28) WB 신탁기금 출연규모: 2010년 기준 8개 기금, 32백만불

6 소결

본 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국토해양분야 ODA분석 결과는 무상부문은 과소하고 유상 부문은 과대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무상분야에서 국토해양분야가 대폭증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분야 ODA지원은 KOICA 초청연수사업 5% 미만, 전문가파견사업 1% 미만, 프로젝트사업이 약 10%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주요 MDB의 국토해양분야 지원 실적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 ODA지원이 MDB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해양부문 양자간 무상원조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의 실적 중 건설수자원과 도시개발이 약 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문가파견의 실적 중 도시개발이 약 50%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KOICA 초청연수사업 실적 중 도시개발은 5%미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유·무상 연계사업 중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참가하는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 등을 반영하여 무상분야에서 국토해양분야사업을 대폭 증대하거나 국토해양분야에서 무상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국토해양 부문 ODA사업 중에서는 초청연수사업 중 도시개발분야의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초청연수사업 중에서 KOICA가 사업평가서에서 사업효과성이 높다고 제시한 장기연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KOICA에서 연수생들의 1년 이상 장기연수 참여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²⁹⁾ 새로운 형태의 연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탁기금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타 부처는 설치한 자체적인 신탁기금을 국토해양부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토해양관련 사업들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탁기금을 우리나라의 유·무상 사업에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신탁기금뿐만 아니라 국토해양 관련 타국의 신탁기금, 다국가 국토해양 신탁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우리의 유·무상 사업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WB, Cities Alliance등)

29) KOICA 사업평가서에서 인터뷰대상자들의 응답 인용

IV.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및 전망

1. 주요 ODA 공여국들의 ODA 거버넌스 체계

선진 ODA 공여국들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전략적 맥락에 따라 고유의 개발 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이 보유한 ODA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은 정책결정부문과 집행체계가 모두 통합된 유형, 정책결정 부문은 통합되었으나 집행부문이 분절된 유형, 정책결정과 집행부문 모두 분절된 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중점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① 미국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미국 ODA의 주무부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이지만 ODA시행기관은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이다. 국무부는 원조 정책 수립 및 조율을 총괄하는데 2006년 국무부 내 설립된 해외 원조이사실(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DFA)이 원조사업의 계획, 예산 편성, 감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USAID가 원조 집행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기관만 ODA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정부부처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ODA 사업을 집행한다.

이들 26개 정부 기관 중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6개 기관, 즉 USAID,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새천년도전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등이 관여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원조담당기관별 집행규모는 USAID (23.3%), 국무부(7.3%), 국방부(59.7%), 재무부(3.9%) 등의 조직이 미국 전체 공적개발원조기금의 90%이상을 관리 및 집행하였다. USAID의 경우 1998년 64.3%의 ODA 규모를 2007년 23.3%로 줄인 반면, 국방부는 1998년 3.5%에서 59.7%로 확대하여 대 테러 전쟁관리를 위한 개발원조를 강화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및 구호사업, 9.11 이후 안보 분야에 대한 강조 등으로 인해 국방부의 ODA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은 해외정세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ODA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에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하여 ODA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2006년 국무부 내에 DFA 설립을 통해 주요 개발원조 시행

기관 간 조정기재를 체계화·전략화 하였으나 전략 부재, 개발협력 위상 약화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개발정책 방향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Development, PDD)을 발표하게 된다. PDD에서 언급한 USAID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 지원 분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MDG 달성지원, 수원국 주도의 포괄적 성장지원, 기술개발 및 혁신 지원,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 PDD와 함께 미국의 ODA정책방향을 언급한 중요한 문서로는 외교개발 검토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가 있다. 2010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스마트 외교전략에 따라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외교 및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추진하였고,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협력을 활용한 외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QDDR을 발표하였다.

QDDR에서 언급한 주요 지원분야는 식량안보, 보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안보, 인도적 지원의 6대 분야이며, 이 중 보건, 식량, 기후변화 분야에 집중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QDDR에서 제시한 미국 개발협력의 또 다른 목표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수원국, 타 공여국, 미국 내 원조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원칙을 제시하였고 기술 및 혁신을 통하여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 QDDR에서 제시한 미국 개발협력 정책 방향 중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것은 USAID에 대한 개혁조치이다. QDDR은 USAID가 인력강화 차원에서 평가, 기획, 자원관리 및 연구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내부 역량을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획, 예산, 운영에 이르는 조직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국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② 영국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국제사회에서 국제원조를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보던 담론이 빈곤퇴치 등 인도주의적 담론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또한 국제관계에서의 인도주의적 개입주의를 주창하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자율성을 갖는 개발협력 전담부처로 국제개발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을 설립한다.

DFID는 일원화된 운영체제로 내각에서 모든 면의 개발원조를 담당하여 중앙과 해외사무소간의 연계가 매우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며 원조의 분화정도가 낮다.

국제원조 정책수립과 집행까지 한 부처가 전담하는 사례는 사실상 영국이 유일한데 OECD DAC회원국 중 개발협력업무 책임자가 내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영국, 캐나다, 독일 뿐이고 캐나다는 부처(ministry)수준이 아닌 청(agency) 수준에서 담당하며 독일에서 개발협력부는 정책수립만 담당하고 집행은 다수의 기관이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DFID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원조 프로그램의 86%를 국제개발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을 단일창구로 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집행부처로는 수출신용보증부 (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 ECGD), 외교부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 영연방개발공사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CDC),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MOD) 등이 있다.

영국의 ODA총액은 115억달러 (USD, 2008년 기준)로 순 ODA규모로 볼 때 OECD DAC 회원국 중 3대 공여국이며, GNI대비 ODA는 0.43%로 열번째 최대 공여국이다. 영국의 양자간 원조는 2008년을 기준으로 63%가 국가차원에서 할당되었는데 이는 DAC평균치인 58%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0년의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부처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2013년까지 GNI대비 0.7% ODA규모 달성을 위해 ODA 예산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이 ODA를 어느 정도로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영국정부는 2006년과 2009년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백서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2009.7)를 통해 원조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발 협력 분야로 원조개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채택한 개발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에서는 외교, 무역, 기후변화, 국가안보 분야와 같이 잠재적으로 개발원조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들 간의 상호조율을 의무화하여 잠재적으로 상충 가능한 모든 국내외 정책들이 수혜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PCD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되는데 국제개발부 장관이 내각과 내각의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을 통해 여러 관련 부처들이 전략적, 범정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결정한다.

또한 2006년 제정된 ‘International Development Reporting and Transparency Act 2006’에 따라 DFID는 매년 영국개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동안에는 의료 및 교육 분야에 집중해왔으나 최근에는 역량개발,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특히 원조효과, 분쟁다발 취약국 원조, 인도적 지원, 국제원조체제 개혁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③ 일본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일본의 ODA 거버넌스는 2006년 이전까지 기술협력분야는 일본국제협력단(JICA), 유상자금협력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구(舊) 해외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 무상 자금협력은 외무성 등의 체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일본의 ODA는 국내외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노력을 펼쳐왔다. 1997년의 '21세기를 위한 ODA개혁 간담회의 발족'을 계기로 일본은 꾸준히 ODA 거버넌스 개혁조치를 취해왔는데 개혁의 목표로는 "전략의 강화," "투명성 확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그리고 "국민참가"를 설정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내각에 해외경제협력회의를 설치하였고, 동년 8월에 양자 및 다자간 원조업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국제협력국을 발족시켰으며, 2008년에는 유상, 무상, 기술협력 실시를 신JICA로 일원화 하였다.

현재 일본 ODA 정책은 2003년에 개정된 ODA대강 ("신 ODA대강"이라고도 한다)을 기본 틀로 삼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자조능력지원구축, "인권의 안전보장"의 시점, 공평성의 확보,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다시 빈곤악감, 지속적인 성장, 지구적 교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평화의 구축 등 네 가지 사항을 중점과제로 ODA를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ODA집행에 있어서는 환경과 개발의 양립, 군사적 용도의 회피, 군사지출 대량과괴무기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 민주화 인권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ODA 대강은 이를 바탕으로 ODA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ODA의 특징으로는 경제발전과 경제안전보장을 위해 ODA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온 점이다. 일본의 ODA는 전후 배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원조 비율이 높으며,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이 일본 기업의 최대 시장인 동시에, 정치·외교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아시아 중시는 1992년의 “구 ODA대강”이나 2003년의 “신 ODA대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철되어왔다. 그러나 과거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이 원조대상국에서 졸업하고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신흥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향후 지원대상 지역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과 같은 원조 필요성이 절박한 국가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형태적으로 일본의 ODA는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원조 대상국의 자조노력과 주체적인 개발 시행을 유도하기 때문에 유상원조인 엔 차관의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유상원조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ODA는 원조 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나 실제로 대부분의 ODA 사업은 일본 기업이 발굴한 사업을 원조 대상국 정부로 하여금 요청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적 특징으로는 개혁이전에는 거시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개발프로젝트(댐건설, 도로철도건설, 철강이나 중화학공업 추진)를 중시해왔으나 ODA대강의 개혁에 따라 점차 상하수도, 관개정비, 교육위생 등의 수원국 시민 생활에 밀착된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빈곤퇴치, 인권민주주의의 촉진, 환경보전, 기아·난민·재해·전염병에 대한 대응, 테러방지나 법정비 지원과 같은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한 ODA로의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

④ 프랑스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프랑스의 ODA 거버넌스는 외교부가 원조 정책 수립 및 조율을 총괄하고 외교부가 무상원조 관리, 재무부는 유상원조 담당 관리,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DF)이 유·무상 원조를 모두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근래 들어서는 ODA업무조정과 전략적 운영체계가 강화되었다. ODA업무의 총 지휘는 협력담당 국무수석비서관(Secretary of State for Cooperation and Francophony)가 담당하게 되었고, 부처 간 업무조정과 ODA예산도 강화되었다.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Le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CICI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부처 간 원조 업무의 조율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외교 및 유럽연합부(The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Ministry), 경제재정고용부(The Economy, Finance, and Employment Ministry), 이민통합국가정체성상호의존개발부(The Immigration,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Interdependent Development Ministry)가 공동으로 상설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³⁰⁾

프랑스의 ODA정책 중 주요 사항은 2006년에 제정된 “Politique française en faveur du développement” 중 ‘Loi de Finances’ (Institutional Act on Finance Legislation, LOLF) 와 부속문서인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DPT)’ 에 드러나 있는데 핵심은 프랑스 정부의 해외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한 점이다.

5 스웨덴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스웨덴의 ODA는 외교부가 원조 정책 수립과 조율을 총괄하고 외교부 산하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이 원조 집행을 담당한다. 2006년에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ODA사업들의 원조효과성 평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연구소 (SADEV (Institute for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외교부 개발정책과 내에 민주주의 대사실(the office of an Ambassador for Democracy)을 설치한바 있다. 스웨덴 ODA의 특징은 보편가치를 위한 지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2008년 기준 SIDA총예산의 21%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 가치를 ODA사업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³¹⁾

30)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2011년,
http://www.diplomatie.gouv.fr/en/france-priorities/development-and-humanitarian/institutions-and-issues-of/official-development-assistance/#so_4

31) Democracy Assistance Fact Sheet-Sweden, FRIDE-European Think Tank for Global Action.
<http://www.fride.org/>

□6 독일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독일의 ODA거버넌스는 초기에는 15개 내외의 정부부처가 개발원조정책을 수행하였으나 공적개발 원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1961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하여 개발원조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었다. BMZ는 원조정책 수립 및 조율을 총괄하고 BMZ산하의 GIZ는 무상원조, KfW는 유상원조 집행을 담당한다.

BMZ는 외부무나 재정부 외에 별도의 부처로 구성되어, 공적개발원조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 부처 및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기능, 정책목표를 위한 조정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BMZ는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부처에서 독립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산하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독일개발서비스, 독일투자개발공사, 독일기술협력공사, KfW개발은행, 국제인력개발, 국제이주개발센터. BMZ는 독일 ODA의 양자간 원조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도 직접 관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외교부와 달리 독일의 외무부(AA)는 독일 전체 개발원조규모의 5%만을 관리하며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BMZ가 독일 개발원조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개발원조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이다. 개발원조 부분에만 독일의 NGO가 1,500개 가량 있으며 이 중 500개 정도 기관이 BMZ를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2005년에는 정책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14개 정책일관성 어젠다(Coherence Agenda)를 발표 및 시행하였다. 독일은 개발협력의 목적을 독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정책현장에서 빈곤감축, 평화보호,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계화 실현을 목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7 뉴질랜드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뉴질랜드의 ODA거버넌스는 2002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가 전담하다가 2002년에 외교부 산하에 준독립기관으로서 뉴질랜드국제개발청(The New Zealand Agency, NZAID)을 설치하여 원조 정책 수립과 조율의 총괄은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원조사업의 집행은 NZAID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할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NZAID는 다시 외교통상부에 통합되었으며 뉴질랜드원조계획(the New Zealand Aid Programme)으로 개칭되었다.

8] 오스트리아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현황과 특징

오스트리아의 ODA거버넌스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유럽·국제문제부(외교부)(The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MFA)가 ODA정책기획 및 조율을 총괄하며, 외교부 산하 오스트리아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이 재정부, 내무부, 농림환경수자원부와 같은 기타 부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오스트리아개발은행 (Oesterreichische Entwicklungsbank)등과 함께 원조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적으로는 UN MDGs와 파리선언을 오스트리아 원조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의제로는 빈곤감축, 평화유지 및 자연보호, 에너지 및 수자원, 교육, 민주적 거버넌스, 성평등, 장애인지원 등의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9] 종합

선진 ODA 공여국들은 각 국의 상황에 맞춰 개발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토대상 국가들의 원조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유상과 무상간의 분절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개발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거나 미국처럼 원조 규모가 큰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독일의 경우 개발협력부가 정책총괄 조정 기능을 가지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정책이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되고 집행은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국가로는 일본과 호주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된 개발원조 거버넌스의 주체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본 장에서 검토한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면 <표 IV-1>와 같다.

<표 IV-1>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

구분		국가	원조집행 체계
유·무상 분절	정책수립 및 집행분절	이탈리아	외교부와 재무부가 모두 유·무상 원조 운영
		포르투갈	재무부 : 유상원조/외무부(산하 IPAD) : 무상원조
		스페인	재무부 : 유상원조/외무부(산하 AECID) : 무상원조
		벨기에	유·무상 원조가 외교부와 재무부로 분절되나 유상원조 비중이 0.4%에 불과
	정책수립·통합 정책집행·분절	독일	개발협력부(BMZ) 정책총괄, 집행은 산하기관 GTZ(무상원조), KfW(유상원조)로 분절
	정책수립·분절 정책집행·통합	프랑스	정책수립 : 외교부(무상), 재무부(유상) 집행기구(AFD)가 유·무상원조 통합집행
유·무상 통합		일본	외무성이 정책 수립·총괄, 외무성 산하 New JICA로 집행 통합
		호주	외교부가 정책수립 및 조율 총괄, 외교부 산하 AusAID로 정책집행 통합
무상원조 분절		오스트리아	외교부 산하 ADA(22%), 재무부(58%), 교육부(9%) 등 분산
		미국	USAID(38.8%), 국방부(21.7%), 농림부(13.9%), 국무부(13.4%) 등 분산
		뉴질랜드	외교부 산하 NZAID(90%), 기타 부처(10%) 분산
		그리스	외교부 개발협력국(Hellenic Aid), 재정경제부 등 분산
무상원조 통합		캐나다	외교부 산하 CIDA * 수상 주재로 원조정책 조율과 감독
		룩셈부르크	외교부 산하 Lux-Development
		스웨덴	외교부 산하 SIDA
		스위스	외교부 산하 SDC
		아일랜드	외교부 중심으로 정책수립과 집행 통합(2003)
		핀란드	외교부로 정책수립부와 집행담당부가 통합
		노르웨이	외교부로 정책수립과 집행 통합

출처: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단 내부자료(2011.8) 재정리

2. 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① 미국

미국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17%에서 23%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23%)을 제외하면 17%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분야의 비중이 약 31%에서 45%사이에서 변동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부문은 2006년의 15%에서 2007년의 34%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주택분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은 2008년을 제외하면 11~25%의 비중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 및 수자원 분야의 비중은 2005년의 21%에서 2009년에는 9%로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양분야의 비중은 2005년의 0.07%에서 2009년 2%로 타 부문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다소 증가하였다. 5년간 미국 ODA 국토해양분야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2> 와 같다.

<표 IV-2>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1983.21	41.11	2520.14	44.84	1216.31	31.45	2199.84	39.27	1998.52	39.48
교통 및 물류	991.49	20.55	862.91	15.35	1326.79	34.31	1823.13	32.54	1295.05	25.58
건설 및 수자원	1023.74	21.22	817.79	14.55	432.16	11.18	846.78	15.12	461.91	9.12
도시 및 지역개발	823.07	17.06	1415.49	25.18	883.5	22.85	623.35	11.13	1222.17	24.14
해양	3.23	0.07	4.46	0.08	8.24	0.21	108.93	1.94	84.63	1.67
ODA 총계(A)	27752.1	-	24292.7	-	24724.5	-	31660.7	-	29747.7	-
국토해양분야 총계	4824.74	100.00	5620.79	100.00	3867	100.00	5602.03	100.00	5062.28	100.00
(A)대비 비중	17.4	-	23.1	-	15.6	-	17.7	-	17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주택분야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25%), 도시 및 지역개발(20%)의 순으로 국토해양분야 ODA사업을 집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1983.60	39.71
	교통 및 물류	1259.87	25.22
	건설 및 수자원	716.48	14.34
	도시 및 지역개발	993.52	19.89
	해양	41.90	0.84
	국토해양분야 총계	4995.37	100.00

2 영국

영국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3.7%에서 10.9%사이를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의 비중이 약 30%에서 55%사이에서 변동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부문은 2005년의 19%에서 2009년의 38%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14%에서 2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 및 물류 부문은 9%에서 17%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양분야의 비중은 2005년의 3%에서 2009년에는 0.01%로 사실상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 영국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4> 와 같다.

<표 IV-4>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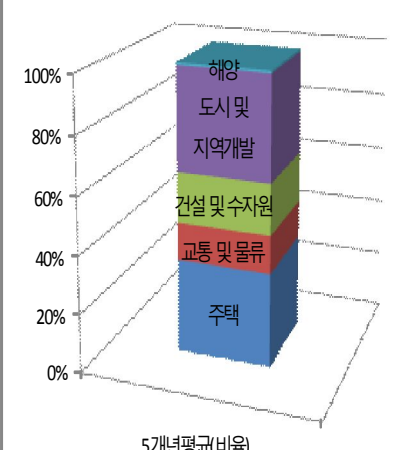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95.73	19.45	113.8	33.30	221.7	31.10	256.96	35.52	318.06	38.25
교통 및 물류	42.43	8.62	48.55	14.20	88.9	12.47	83.77	11.58	140.98	16.96
건설 및 수자원	68	13.82	61.13	17.89	139.06	19.51	160.89	22.24	114.88	13.82
도시 및 지역개발	270.93	55.05	116.58	34.11	258.14	36.21	219.15	30.29	257.47	30.97
해양	15.03	3.05	1.73	0.51	5.01	0.70	2.65	0.37	0.09	0.01
ODA 총계(A)	8508.55	-	9291.51	-	7379.28	-	7799.93	-	7599.1	-
국토해양분 야 총계	492.12	100.00	341.79	100.00	712.81	100.00	723.42	100.00	831.48	100.00
(A)대비 비중	5.8	-	3.7	-	9.7	-	9.3	-	10.9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5>와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영국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이 36%로 주택부문(32%)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부문은 대부분 10% 내외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시행했다.

<표 IV-5>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주택	201.25	32.44
	교통 및 물류	80.93	13.05
	건설 및 수자원	108.79	17.54
	도시 및 지역개발	224.45	36.18
	해양	4.90	0.79
	국토해양분야 총계	620.32	100.00

3 일본

일본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8%에서 49%사이를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등락이 있지만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비중이 약 32%에서 67%사이에서 변동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25%에서 46%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교통 및 물류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은 3%에서 1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부문은 1.8%에서 4.9%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분야의 비중은 1.5%에서 3.4%로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일본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6> 와 같다.

<표 IV-6>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173.79	3.20	159.05	4.16	204.92	4.91	121.62	1.80	161.89	2.20
교통 및 물류	2847.85	52.44	2063.19	53.97	1330.98	31.91	4510.5	66.60	3888.71	52.85
건설 및 수자원	2133.05	39.28	1254.81	32.82	1938.38	46.47	1671.49	24.68	2796.01	38.00
도시 및 지역개발	181.91	3.35	287.1	7.51	608.75	14.59	317.49	4.69	261.43	3.55
해양	93.79	1.73	58.58	1.53	88.1	2.11	151.28	2.23	249.98	3.40
ODA 총계(A)	17337.8	-	13561.8	-	12912.3	-	17963.8	-	14887.9	-
국토해양분야 총계	5430.39	100.00	3822.73	100.00	4171.13	100.00	6772.38	100.00	7358.02	100.00
(A)대비 비중	31.3	-	28.2	-	32.3	-	37.7	-	49.4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7>과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일본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부문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집행하고 특히 교통 및 물류부문은 50%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 및 수자원,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36%,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IV-7>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164.25	2.98
	교통 및 물류	2928.25	53.14
	건설 및 수자원	1958.75	35.54
	도시 및 지역개발	331.34	6.01
	해양	128.35	2.33
	국토해양분야 총계	5510.93	100.00

4 프랑스

프랑스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0.2%에서 0.4%사이를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부문의 비중이 약 22%에서 55%사이에서 등락 폭이 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은 16%에서 38%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교통 및 물류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부문은 14%에서 27%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9%에서 3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분야의 비중은 0.01%에서 1.3%로 작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프랑스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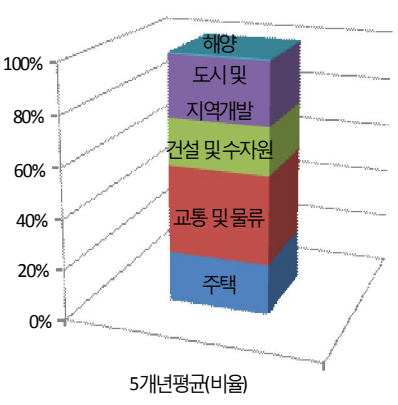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264.48	16.29	492.11	17.60	433.05	16.15	359.62	10.65	469.15	11.82
교통 및 물류	530.26	32.65	415.7	14.87	539.64	20.13	1432.25	42.41	622.79	15.69
건설 및 수자원	114.86	7.07	237.53	8.50	391.54	14.60	361.58	10.71	805.86	20.30
도시 및 지역개발	298.2	18.36	704.81	25.21	462.53	17.25	420.84	12.46	616.16	15.52
해양	3.06	0.19	3.21	0.11	0.26	0.01	20.4	0.60	33.71	0.85
ODA 총계(A)	8862.15	-	9944.17	-	8463.53	-	9537.04	-	9172.12	-
국토해양 분야 총계	1210.86	100.00	1853.36	100.00	1827.02	100.00	2594.69	100.00	2547.67	100.00
(A)대비 비중	0.2	-	0.3	-	0.3	-	0.4	-	0.4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9>와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프랑스의 ODA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부문이 36%를 차지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해양분야를 제외하면 10~20%내외의 비율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표 IV-9>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403.68	20.12
	교통 및 물류	708.13	35.29
	건설 및 수자원	382.27	19.05
	도시 및 지역개발	500.51	24.94
	해양	12.13	0.60
	국토해양분야 총계	2006.72	100.00

5 스웨덴

스웨덴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0.16%에서 0.22%사이를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의 비중이 약 36%에서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분야가 20%에서 30%의 비중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16%에서 2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분야의 비중은 0.7%에서 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간 스웨덴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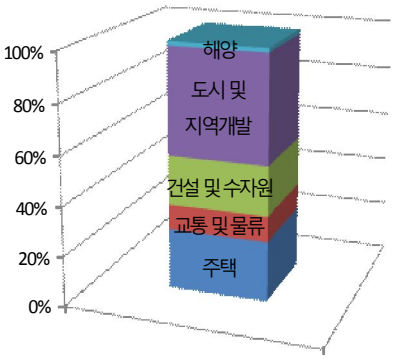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77.05	24.52	90.73	27.59	87.49	29.54	76.01	20.03	75.64	21.19
교통 및 물류	48.15	15.32	34.76	10.57	15.97	5.39	42.03	11.08	32.06	8.98
건설 및 수자원	68.73	21.87	64.84	19.72	47.4	16.00	77.85	20.52	75.57	21.17
도시 및 지역개발	113.76	36.20	131	39.84	137.16	46.31	178.85	47.13	170.92	47.88
해양	6.53	2.08	7.47	2.27	8.18	2.76	4.72	1.24	2.81	0.79
ODA 총계(A)	2255.87	-	2851.89	-	2932.22	-	3145.17	-	3014.28	-
국토해양 분야 총계	314.22	100.00	328.8	100.00	296.2	100.00	379.46	100.00	357	100.00
(A)대비 비중	0.22	-	0.18	-	0.16	-	0.2	-	0.2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스웨덴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가 4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분야가 약 24%, 건설 및 수자원 분야가 20%를 유지하고 있다.

<표 IV-11>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평균(비율)
	주택	81.38	24.28
	교통 및 물류	34.59	10.32
	건설 및 수자원	66.88	19.96
	도시 및 지역개발	146.34	43.67
	해양	5.94	1.77
	국토해양분야 총계	335.14	100.00

6 독일

독일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7%에서 39% 사이를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의 비중이 약 37%에서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은 15%에서 44%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교통 및 물류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13%에서 2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 부문은 4%에서 1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분야의 비중은 0.04%에서 0.16%로 작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독일의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12>과 같다.

<표 IV-12>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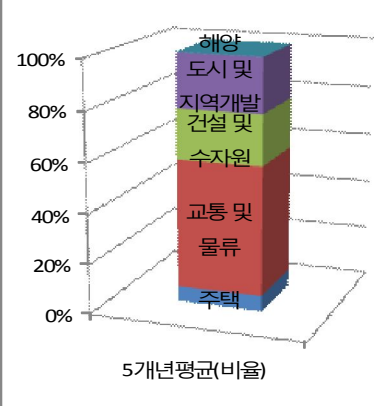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205.29	6.81	245.64	9.64	231.44	8.89	152.19	3.74	153.18	4.14
교통 및 물류	1105.29	36.66	1377.68	54.04	1302.59	50.04	2421.27	59.42	2063.36	55.79
건설 및 수자원	382.6	12.69	497.14	19.50	607.17	23.32	906.8	22.26	820.56	22.19
도시 및 지역개발	1319.1	43.75	426.42	16.73	457.99	17.59	592.77	14.55	658.57	17.81
해양	2.7	0.09	2.57	0.10	4.15	0.16	1.54	0.04	2.83	0.08
ODA 총계(A)	9236.49	-	9477.18	-	9644.36	-	12607	-	9452.6	-
국토해양분 야 총계	3014.98	100.00	2549.45	100.00	2603.34	100.00	4074.57	100.00	3698.5	100.00
(A)대비 비중	32.6	-	26.9	-	27.0	-	32.3	-	39.1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13>와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독일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부문이 52%를 차지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주택(6.2%), 해양분야(0.09%)를 제외하면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과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이 각 22%, 20%의 비율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3>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197.55	6.20
	교통 및 물류	1654.04	51.88
	건설 및 수자원	642.85	20.16
	도시 및 지역개발	690.97	21.67
	해양	2.76	0.09
	국토해양분야 총계	3188.17	100.00

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6%에서 14%사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부분의 비중이 2005년 7%에서 2009년 51%로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약 2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은 15%에서 41%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교통 및 물류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은 2005년 22%에서 2009년 8%로 크게 하락하지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약 15%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택 부문은 8%에서 26%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 부문은 5%에서 17%로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5년간 뉴질랜드의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14>과 같다.

<표 IV-14>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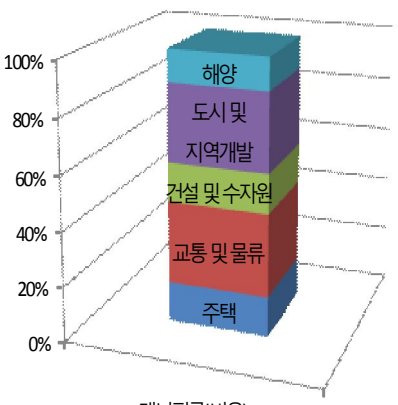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3.43	25.87	3.15	16.62	2.44	10.33	4.22	18.84	2.6	8.43
교통 및 물류	1	7.54	5.67	29.92	5.68	24.06	4.87	21.74	15.8	51.23
건설 및 수자원	2.97	22.40	3.01	15.88	3.61	15.29	3.5	15.63	2.63	8.53
도시 및 지역개발	5.14	38.76	5.07	26.75	9.75	41.30	6.9	30.80	4.65	15.08
해양	0.72	5.43	2.05	10.82	2.13	9.02	2.91	12.99	5.16	16.73
ODA 총계(A)	223.79	-	202.8	-	247.08	-	277.79	-	225.98	-
국토해양분 야 총계	13.26	100.00	18.95	100.00	23.61	100.00	22.4	100.00	30.84	100.00
(A)대비 비중	5.9	-	9.3	-	9.6	-	8.1	-	13.6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15>와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뉴질랜드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부문이 30%를 차지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이 29%, 주택 부문이 15%,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이 14%, 해양 부문이 12%의 순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각 부문별 비중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5>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3.17	14.52
	교통 및 물류	6.60	30.28
	건설 및 수자원	3.14	14.41
	도시 및 지역개발	6.30	28.89
	해양	2.59	11.89
	국토해양분야 총계	21.81	100.00

8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3%에서 1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5년간의 국토해양분야 ODA 추세와 세부 분야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의 비중이 약 32%에서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은 21%에서 37%까지 등락폭이 크지만 건설 및 수자원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부문은 13%에서 21%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부문은 2%에서 1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양 부문으로선 전혀 원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5년간 오스트리아의 ODA 국토해양분야의 세부 분야별 사업규모와 비중은 다음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8.11	21.10	7.82	16.97	11.3	14.94	10.46	12.96	12.39	17.04
교통 및 물류	1.1	2.86	1	2.17	24.18	31.96	3.92	4.86	9.74	13.40
건설 및 수자원	16.77	43.63	20.4	44.26	24.15	31.92	36.58	45.32	23.44	32.24
도시 및 지역개발	12.46	32.41	16.87	36.60	16.03	21.19	29.76	36.87	27.13	37.32
해양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ODA 총계(A)	1252.72	-	1078.69	-	1358.77	-	1265.79	-	537.46	-
국토해양 분야 총계	38.44	100.00	46.09	100.00	75.66	100.00	80.72	100.00	72.7	100.00
(A)대비 비중	3.1	-	4.3	-	5.6	-	6.4	-	13.5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표 IV-17>와 같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오스트리아의 ODA 국가해양분야 5개년 평균값(비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건설 및 수자원 부문이 39%를 차지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이 33%, 주택 부문이 16%, 교통 및 물류 부문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 부문 중 건설 및 수자원 분야와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해양부문에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표 IV-17>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5개년 평균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개년 평균(금액)	5개년 평균(비율)
<p>5개년평균(비율)</p>	주택	10.02	15.97
	교통 및 물류	7.99	12.74
	건설 및 수자원	24.27	38.69
	도시 및 지역개발	20.45	32.60
	해양	0.00	0.00
	국토해양분야 총계	62.72	100.00

9 국가별 및 그룹별 ODA국토해양분야 세부항목 비중 비교

검토 대상 국가들은 각 국가가 가진 ODA거버넌스의 특징에 따라 나름의 특징을 드러냈다. 특히 ODA거버넌스가 통합화 또는 분절화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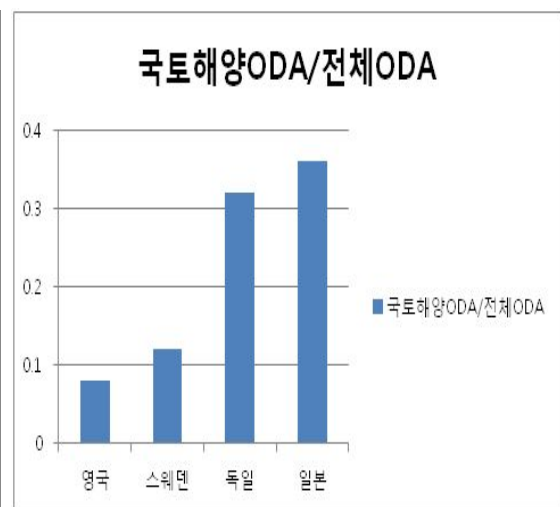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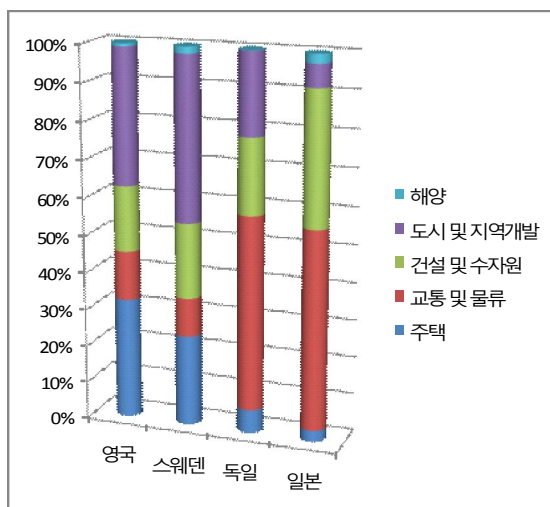
1) 원조통합그룹

통합된 ODA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이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세부 분야 중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분야에서 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V-18> 원조통합그룹

(단위 : %)

구분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
주택	32.44	24.28	6.20	2.98
교통 및 물류	13.05	10.32	51.88	53.14
건설 및 수자원	17.54	19.96	20.16	35.54
도시 및 지역개발	36.18	43.67	21.67	6.01
해양	0.79	1.77	0.09	2.33
국토해양ODA/전체ODA	7.64	11.80	31.62	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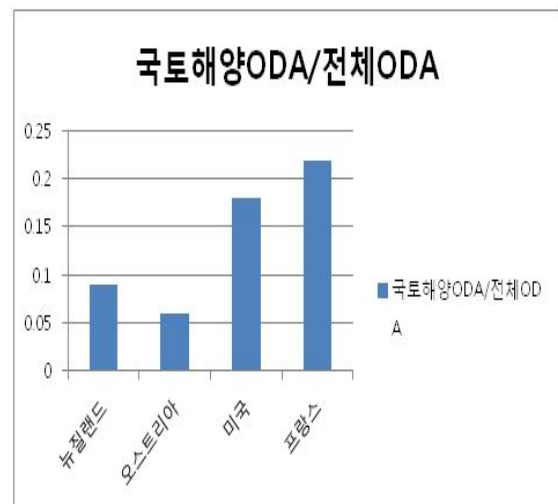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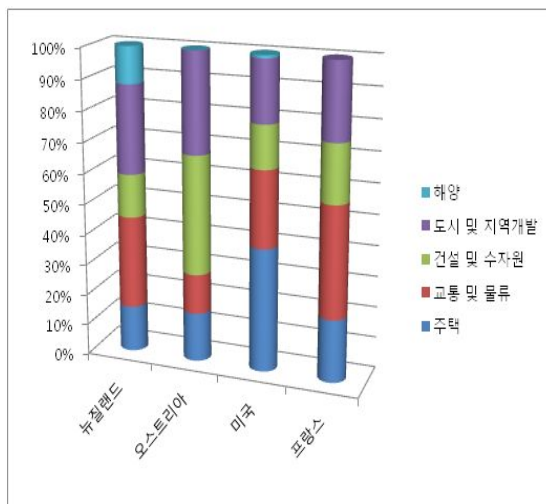
2) 원조분절그룹

분절된 ODA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이며, 통합된 ODA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하면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분절된 ODA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가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전후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세부 분야 중 해양분야를 제외하고 주택,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고르게 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IV-19> 원조분절그룹

(단위 : %)

구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주택	14.52	15.97	39.71	20.12
교통 및 물류	30.28	112.74	25.22	35.29
건설 및 수자원	14.41	38.69	14.34	19.05
도시 및 지역개발	28.89	32.60	19.89	24.94
해양	11.89	0.00	0.84	0.60
국토해양ODA/전체ODA	9.26	5.71	18.08	21.82



3. 시사점

① 국토해양분야 ODA사업의 중요성

검토 대상 국가들 중 경제규모가 크고 개발원조시장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국가들일수록 ODA에서 국토해양분야 사업을 많이 시행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검토대상 국가들 전체를 볼 때에도 미국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분야 ODA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특히 국토해양분야 ODA 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20%전후의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서 인프라부문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강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제공을 함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성장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연관효과가 큰 국토해양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우리나라 국토해양분야 ODA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무상원조사업에서 국토해양분야를 증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KOICA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기능을 국토해양부가 이관 받아 국토해양분야 ODA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특화된 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

또는 이와 같이 통합적 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국토해양분야 ODA의 대 개도국 네트워크센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국토연구원 GDPC와 연계하여 국토해양 ODA정책수립을 위한 중앙컨트롤타워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유·무상 ODA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성과 분절성

ODA거버넌스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ODA의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정책수립기능의 통합을 통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무상원조 연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조체계를 갖춘 공여국은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조 선진국들 중 부처별로 분절된 형태의 원조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도 정책수립구조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유·무상 통제가 가능해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일본같이 원조정책결정기관이 통합되어 있거나,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엔 유·무상 연계구조를 갖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시개발협력사업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무상원조 분절체계를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ODA사업 등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가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등에 대한 정책수립기능도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토해양ODA분야 중 인프라개발협력사업 및 도시개발협력사업 계획수립사업은 특성상 본 사업 실행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해당 분야 사업의 경우 유·무상 연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타 분야에 비해 사업의 완결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최종단계까지 근접하거나 완전히 구현되었을 때 개발효과성이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유·무상 연계는 이를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 ODA 세부분야별 균형 발전

국토해양 부문 사업 분야의 측면에서 ODA의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원조분절그룹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세부 분야 간 비중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G20에서 합의된 사항처럼 지역통합형 인프라개발협력으로 개발사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들이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실적을 기록해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래 <표 IV-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야 간 편차가 크며,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의 사업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표 IV-20> 한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84.25	30.93	6.51	3.29	6.44	1.90	12	1.96	13.15	1.69
교통 및 물류	82.92	30.44	99.54	50.33	235.89	69.54	268.33	43.92	641.19	82.44
건설 및 수자원	102.27	37.55	86.09	43.53	74.52	21.97	270	44.20	70.86	9.11
도시 및 지역개발	2.39	0.88	5.16	2.61	21.28	6.27	53.93	8.83	51.08	6.57
해양	0.55	0.20	0.48	0.24	1.08	0.32	6.65	1.09	1.44	0.19
ODA 총계(A)	657.79	-	675.5	-	1053.26	-	1454.95	-	1450.15	-
국토해양분야총계	272.38	100.00	197.78	100.00	339.21	100.00	610.91	100.00	777.72	100.00
(A)대비 비중	41.4	-	29.3	-	32.2	-	42.0	-	53.6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국토해양 ODA분야 중 인프라개발협력사업 및 도시개발협력사업이 향후 개발원조시장에서 핵심적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양상으로 국토해양 ODA분야 사업을 집행 할 경우 한국은 실적을 축적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국제개발원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지는데, OECD DAC가입으로 원조예산을 증대하고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원조 선진국들의 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만드는 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분야 ODA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에서의 ODA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으로는 무상ODA에서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은 특성상 본 사업 실행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V.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
- ◇ 유·무상 ODA사업의 연계
- ◇ 국토해양 분야별 사업 강화
- ◇ 중앙컨트롤 타워 형성을 통한 국토해양 ODA 네트워크 구축

1-1.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을 통한 단기간 내 빈곤탈출과 농업 중심에서 산업화·정보화 등 다양한 단계의 발전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식민지, 전쟁경험 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 심리적 동질감과 신뢰감 형성이 용이하다. 또한 개도국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기술과 함께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ODA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발굴·정리하고, ODA 콘텐츠를 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마련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우리의 개발 및 원조경험이 풍부하고, 개도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선정,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 분야에서는 국토건설 분야를 선정하였다.

국토건설은 교통, 도시개발, 주택건설, 수자원, 해양, 지역개발 등 다종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그 범위가 넓지만 이들 분야들이 아직 일반적으로 ODA 사업에 통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교통과 수자원은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실제 ODA의 집행과정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도시개발, 주택건설, 해양 등은 극히 미흡하거나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누락되는 분야가 있는 것은 아마도 기존의 다른 국가들에서의 ODA 지원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은 도시개발 등 거점개발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우리의 경험은 여타 선진제국이 경험한 방식과는 다른 공간을 활용한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도시화에 대한 경험은 특히 그러하다. 개발도상국 제반에 형성되고 있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가도시화 현상은 그 정도가 우리와 유사하게 진행되어지지 선진제국의 도시화와 유사하지 않다. 개발도상국이 짧은 시간에 집적경제 달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은 오히려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형 경제성장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한 성장모델을 일구어 낸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러한 거점개발에 대한 모형을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국토해양분야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측량,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 민관협력 도시개발, 신도시를 통한 2백만호 건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협력형 주택건설, 고밀화를 통한 도시개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건설을 통한 대중교통 우선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상업지역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식공유 모듈화를 조직하고 집대성 할 필요가 있다.

1-2. 유·무상 ODA사업의 연계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 담론은 원조효과성 확보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부산선언이나 G20 서울선언문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 ODA가 주목할 사항은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이전의 방식이 원조 그 자체에 충실하다면 새로운 개발효과성은 실제 개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조의 질적 변환과정을 설명한다.

유·무상 ODA 연계사업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우리 ODA 당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상과 유상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상사업이 실제 개발로 연계되지 않거나 개발이 있어도 부분적인 개발에 그치는 관행을 극복하고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개발촉진 방향에서 유상과의 연계를 1995년부터 고민해 왔다. 개발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은 우리나라에는 유·무상 ODA 사업의 연계와 밀접하게 관련한다. 특히 이 분야는 개발의 실질적 수행과 그것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지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다. 실제로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는 유·무상 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상 가장 큰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유·무상 ODA 연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토해양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ODA 선진화 방안이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ODA 역량을 결집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발효과성은 그 구성이 인프라개발협력, 도시개발 등 그 규모가 크다. 특히 G20에서 합의된 사항처럼 지역통합형 인프라개발협력으로 그 개발 구도를 가져갈 경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상원조 자체만으로는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유상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다른 국제금융 기구들도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환경에서는 국제개발은행의 유상협력을 이끌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무상 연계사업은 우리나라의 무상과 유상과의 연계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은행의 유상사업과의 연계성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은행의 무상사업과의 횡적인 연대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신탁기금의 활용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국토해양 세부 분야별 사업 강화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국토해양 ODA사업의 세부 분야 분석 결과는 집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문 양자간 무상원조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의 실적 중 건설수자원과 도시개발이 약 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문가파견의 실적 중 도시개발이 약 50%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KOICA 초청연수사업 실적 중 도시개발은 5%미만으로 나타난다. EDCF의 양자간 유상 ODA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부문과 건설 및 수자원부문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등은 거의 지원 실적이 없다.

특이한 것은 무상사업에서 도시개발 등이 나타나거나 비중이 있게 다루어지는데 반해 유상사업에서는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은 거의 범주화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유상사업이 가지는 섹터 중심적 특징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유상사업은 어느 한 섹터 프로젝트의 타당성 유무에 따라 사업의 집행을 결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이 국제개발은행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개도국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거점개발의 중요한 수단인 도시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은행들조차 어떻게 유상사업으로 현실화시키느냐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도시개발은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무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를 근거로 유상사업에서는 일부 상하수도 건설, BRT와 역세권 개발, 수변개

발 등 섹터별 독립적인 인프라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화된 도시개발로 분절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렇게 세부화 되었을 때 이들 항목이 도시개발로 잡히기보다는 상하수도는 수자원으로, BRT는 교통으로 구분되는 등 아직 국제적으로 도시개발을 정의하는 수단이 마스터 플랜과 주택건설 이외에는 없는 상태이다. 주택건설의 경우에도 사실 공공임대 주택정도가 ODA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에 따른 섹터별 마스터플랜을 따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의 모듈화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형 또는 환경친화적 공공 도시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싱가포르형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중국에 도시를 개발할 때 중요하게 부각한 것은 1990년대 초의 경우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형 도시 구성 방식이었으며, 2008년에는 천진생태도시 등 친환경적 공공도시였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지원도 천진생태도시의 경우 발생할 정도로 도시개발이 ODA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은 좋은 예이다.

1-4. 중앙컨트롤타워 형성을 통한 국토해양 ODA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례검토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ODA의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정책수립기능의 통합을 통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집행기능의 통합이 요원하다면 정책수립기능의 통합만이라도 우선 실시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국토해양분야에서 정책수립을 수행할 수 있는 상위기관임에 틀림없다. 현재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그들의 집행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에서 견인할 수 있는 국토해양분야 ODA 정책수립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사업 등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가 초청연수, 전문가과견,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등에 대한 정책수립기능도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적 정책수립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국토해양분야 ODA의 대 개도국 네트워크센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국토연구원 GDPC와 연계하여 국토해양 ODA정책수립을 위한 중앙컨트롤타워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전략

2-1. 국토해양부 ODA 전략 수립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국내외적인 ODA의 대전환기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11년 부산세계원조개발총회(HLF-4)에서는 원조의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의제로 남북협력이 강조되었는바 한국과 같은 수원국 경험을 가진 신흥원조공여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프라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이 국제개발담론에서 주요한 의제로 부상한 점이다. 지난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개발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에서 인프라분야를 우선순위 의제로 채택하고 “인프라투자를 위한 G20 고위급패널(G20 High-level Panel for Infrastructure)”을 설치하는데 합의가 이뤄졌으며 후속 2011 칸느 G20 회의에서도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을 만큼 인프라부분에서의 개발협력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등장하였다.³²⁾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개발효과성의 측면에서 단일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원조가 지속가능성, 즉 결과적으로는 효과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 이후를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지역통합형 인프라 개발과 같은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발협력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환경과 담론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ODA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9년 OECD/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초 총리실에 ODA 총괄·조정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분야 ODA 사업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프라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국토해양부의 자체적인 대응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자체적인 ODA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타 부처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ODA 전략 수립 이전에 이미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범부처수준의 ODA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더쉽을 보인바 있다. 우리나라 유상원조 창구

32) 청와대 국정자료 참조. http://www.cwd.go.kr/kr/diplomacy/2009/index_2010g20.html

인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2006년(작성은 2005년 12월) 우리나라 ODA 사업 시작 이후 최초로 다자간개발기관 (MDB)과 선진원조기관들이 원조효과성 제고의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해온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는 2007년에 중점 협력 대상국을 대상으로 최초의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두 부처가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한 시기는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원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및 전략 문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별지원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천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간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토대로 개괄적이거나 전략문서를 수립한 결과, 두 기관은 우리나라 ODA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적지도력을 보일 수 있었고, 이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ODA에서 양 기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정³³⁾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수출입은행과 KOICA 양 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토해양부가 향후 우리나라 ODA정책 수립과 사업집행에서 증대하는 인프라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전략 및 세부전략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ODA 중기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비적 수준으로나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중기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구분	세부내용
현황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관련 국내·외 여건 타 부처 동향 분석(총리실, 외교부, 기재부 등) 국토해양부의 ODA 추진현황(유상, 무상, 유·무상 연계) 국토해양부의 ODA관련 연간 계획 또는 실적 평가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국토해양부 내 ODA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직의 역할 및 기능
방향 및 전략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 및 연간 목표 수립 지역 별·분야 별 목표 수립 제도 및 법령 개정
국별지원전략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차원의 국별지원전략 수립과정 및 운영 적극참여 위한 국토해양부 자체 국별지원계획 수립

향후 국토해양부가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할 경우 아래 <표 V-2>와 같이 선진 기관 사례와 한국의 타 부처 사례를 참조하되 국토해양부의 분야 전문성을 참조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33)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에서 주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표 V-2> 사례 1: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국별지원전략의 구조

주제	전 략
국가의 맥락과 개발 과제들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과 도전들 인니의 신 경제정책 패키지: 단기 의제 빈곤감소를 위한 중기 전략의 기본틀 경제전망, 외부환경과 재정수요
최근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실행기간으로부터의 교훈 특별 문제로서의 부패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전략 목표: 양질의 투자를 위한 환경 개선, 서비스 전달을 빈곤층 수요에 대응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 선택의 정밀화 사업의 집행방식: 공동체 주도의 개발 방식, 지역서비스 방식, 공공효용 방식, 국가용자 방식
프로그램의 집행	포트폴리오의 관리와 결과 감독 역량구축과 정책결정의 전문화 용자 시나리오 IFC와 MIGA 프로그램 파트너십
위험관리	

출처: World Bank Indonesia CAS (2003-2007),

<표 V-3> 사례 2: 영국 DFID의 베트남 국별지원전략의 구조

전략목표	전략 / 분야
베트남이 WTO가입조건을 충족시키고 그와 동시에 베트남의 빈곤층이 베트남의 국제경제편입에서 생기는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	빈곤감소지원신용(The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PRSC)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과 은행에 대한 국가의 비투자, 민간부문개발, 인프라개발, 보다 효율적인 토지사용, 법제도 개선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의 폭넓은 정책개혁을 촉진
	"Post-WTO" 프로그램: 베트남 정부가 WTO 가입으로 인한 핵심적인 사회적 환경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WTO 이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장을 기능하게 하기" 프로그램: 빈곤층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발굴하고 극대화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과 보장범위 개선	장애아동을 위한 초등교육사업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HIV 와 AIDS 예방
	MDG목표에서 벗어난 위생문제 해결
	포괄적 사회 및 건강보험제도 개발과정에서의 베트남 정부에 대한 지원
	농촌교통부문개발을 위해 세계은행을 통한 추가적 자금 제공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책임성 촉진	성평등 이슈 해결 노력
	부패방지제도와 공공자금관리 강화
	제도강화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 촉진

출처 : DFID Vietnam Country Assistance Plan 2007-2011

2-2.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 중에 있다.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은 수원국이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정책 및 제도를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모듈화하여 개도국의 정책입안·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기관이 함께하는 범부처적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40개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중 5개 과제³⁴⁾를 수행 중에 있다. 이 5개 과제 이외에도 국토해양분야의 경우, 개도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추진해왔던 대표 프로젝트 중 기획재정부의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정책수요가 높은 수자원, 항만개발, 산업단지,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 모듈화사업을 2011년말부터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유사 국책사업 추진시 참고하고 개도국 등에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사업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식 공유 사업의 상대자는 대개 개발도상국 공무원이지 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지식공유 콘텐츠는 마치 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KSP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경우 영문 100 페이지 이상으로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가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페이지 구성도 분석형으로 일반인이 흥미를 가지고 읽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분야별로 주제를 넓게 잡기보다는 세부화된 아이টে을 개발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인프라개발을 세부화시켜 토지의 측량, 토지 보상,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 민관협력 도시개발, 신도시를 통한 2백만호 건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협력형 주택건설, 고밀화를 통한 도시개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건설을 통한 대중교통 우선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상업지역 조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난 경제개발시대의 각 종 개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

34) ①한국형 서민주택의 건설·공급 정책, ②한국형 신도시개발, ③고속철도 및 기존선 전철화, ④교통 SOC 기반구축(거버넌스와 재원조달방안 중심), ⑤교통 DB 구축을 통한 교통투자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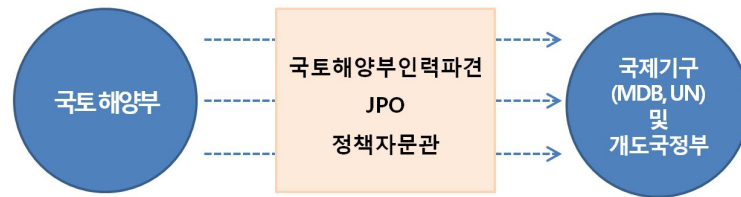
어 진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동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상징화하는 짧은 컨셉 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3. 국제개발협력 인력 파견

국제 ODA 조달시장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내의 네트워크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한국기업의 수주실적은 저조하다. 특히, 컨설팅서비스는 사업 발굴 및 사업수행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본 사업의 성격과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언어 등에 있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개발협력 컨설팅 전문가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국토해양분야 ODA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협력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 중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정부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제도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를 도입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평균 5명씩을 파견, 총 68명의 JPO를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시켰다. 지금까지 파견한 국제기구로는 주로 유엔사무국, UNICEF, UNESCO 등 사회문화 관련 국제기구와 WTO에 진출하였는데, 향후 인프라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매개로 간주되는 국제금융기관 진출 인력은 전무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별개로 2010년부터 세계은행에 매년 2명씩 자체적으로 JPO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섹터 전문성을 근거로 한 국토해양부 내부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시에 국토해양분야의 JPO경력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개도국 정부부처에 국토해양분야 전문가를 파견하는 정책자문관 파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개도국 현지에 자문관을 장기간 상주시키면서 개도국의 현황에 정통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축적된 역량으로 개도국의 정책수립단계까지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기업진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역량은 일본이 ODA분야에서 리더쉽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림 V-1> 국토해양분야 개발협력 인력파견 개념도

2-4. ODA 사업의 발굴 및 확대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분야 유·무상 연계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유·무상 연계사업은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총 22건 7.5억불을 유·무상 연계사업 형태로 지원 중에 있다.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유·무상 연계사업이 2008년 이후 국토해양부 등 개별부처가 타당성 조사, 기술협력 등 ODA 사업을 확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부처의 유·무상 연계사업 참여로 인해 분야 전문성이 증가하고 부처의 네트워크가 ODA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유·무상 연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KOICA는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2010년 대비 약 2배 확대하고, 민간단체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 중 EDCF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솔로몬 군도 어항 개발사업(16백만불) 민자사업 방식으로 시범지원하였다. 이처럼 민관협력 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의 ODA 사업 참여 확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분야 ODA 사업도 PPP 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앞서 언급한 우리정부의 국별 지원전략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현재 파견된 국토해양관 이외에도 앞으로는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에 파견한 정책자문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추진체계

분절화된 ODA 구조에서는 정책수립형 중앙정부의 역할이 효과적인 ODA 집행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국토해양분야는 현재 산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이들을 한데 모아 정책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차례 네트워크화를 도모하였지만 중앙정부의 중심적인 추진체계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국토해양분야에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수립형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3-1. 상징적인 ODA 인프라개발협력센터 설립

1) 인프라개발협력센터 설립의 당위성

3장과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분야 ODA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프라분야 ODA 사업에 적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 분야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분야 ODA 전문기관인 인프라개발협력센터(가칭)의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센터는 인프라분야에 대한 교육연수,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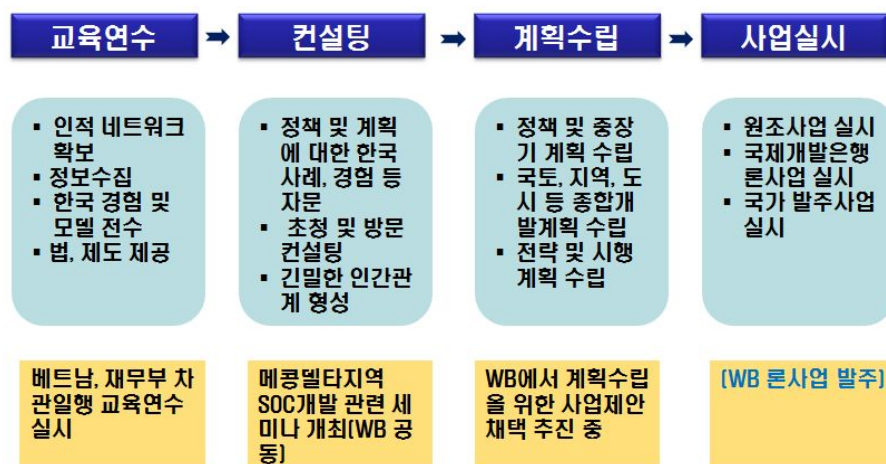
인프라개발협력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센터³⁵)이므로 GDP센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공호상(2011)은 패키지형 연계사업 추진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연수 → 컨설팅 → 계획수립 → 사업실시 순으로 ODA 사업이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단계인 인프라개발협력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교육연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토해양분야의 초청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 10여개 유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은 KOICA, ADB, USAID의 위탁, EDCF 지원사업, 자체예산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35) 2010년 12월 30일에 개소한 GDP센터는 개도국 공무원 교육·연수, 해외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개발협력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분야의 초청연수가 특별한 조정없이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초청국가, 대상자, 교육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정 및 육성이 어렵다. 둘째, 동일대상에게 유사한 교육기관들이 중복 수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개발협력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인프라 개발협력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중점 지원국가, 대상,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간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개발경험 공유계획을 체계화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의 중복수행을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연수 후에도 개도국 공무원·전문가와 협력채널을 유지하면서 실제 진행되는 개도국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문 컨설팅은 본격적인 개발 컨설팅으로 이어지는데, 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그 이후 본 사업 실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V-2> 팩키지형 연계사업 추진

출처: 사공호상(2011), “개발협력의 글로벌화 전략”, 「GDP센터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p.57.

이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한 Public & Private Partnership(PPP)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G20 인프라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수행자이며 민간(Private)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공공(Public) 섹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흥지역 연구 강화를 위해 MDB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기초 연구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G20 인프라 개발협력 방향에 대한 5개 MDB 합동 보고서 초안은 ‘Project Preparation Fund³⁶⁾’ 조성이 G20가 인프라 개발협력에

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MDB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확보된 Loan Initiative를 우리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PPP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2) 인프라개발협력센터 설립 방안

인프라개발협력센터의 설립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해관계 당사자간 조율 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일안 제시보다는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 및 부처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부서로 설치하는 방안,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토연구원 GDP 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으로 제시한다.

(1) 국토해양부에 부서로 설치하는 방안

국토해양부에 부서로 설치할 경우 중앙부서가 직접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관장함으로써 정책수립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을 보충하는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전담인력은 중요한 문제인데, 인프라개발협력센터가 가지는 교육기관의 성격, 개발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원의 인원을 보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책수립 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2012년 예산안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컨설팅은 차츰 인원을 확보하거나 아웃소싱을 원칙으로 한다면 가능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급적 2013년 이후에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먼저 필요한 초청 연수 등 교육 기능에 우선적인 인원을 배치하고, 2012년 후반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초청 연수 사업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인계 받기보다는 상징적인 프로그램 창출을 통해 중심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대부분 연수 프로그램이 KOICA의 2-3주 연수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의심 받고 있다. 특히 다국 연수 과정은 그 실효성이 많이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인수인계 받는 것은 오히려 현재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 및 연구기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36) 사업타당성 조사, 개발조사 등을 위한 자금으로서 실제 Loan을 발생하기 전에 준비되는 자금

따라서, 가급적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KOICA의 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KOICA의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운영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국토해양관을 통한 맞춤형 국별 초청연수, MDB로부터 직접 수주, 지역경제 공동체와 협의를 통한 다국가 초청연수 등은 아직 국내에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식을 동원하여 다른 산하 연수기관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화는 중앙부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 또는 국토부 만이 할 수 있는 독창성을 기반으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집행을 실시하는 정원외 직원의 연봉 및 복지혜택은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들에 대해 연봉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MDB 등에 고용휴직, 지역경제공동체에 파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직 하다. 한편, 이들을 아예 정원외 계약직 주무관(다급), 사무관(나급), 서기관(가급), 고위공무원단(국장급)으로 고용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며, 인프라 개발협력센터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정책집행 기능이 더 강하게 부각되며, 정책 수립 기능이 다소 약화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관의 인원 및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사업관리권 이외에 많은 권한을 부여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된 조직은 상대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산하 공기업의 부서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이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산하 공기업을 새로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산하 공기업의 한 부서로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할 경우 특정한 공기업의 특성에 귀착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므로 네트워크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또한, 건설기술 교육원 및 국토해양 인재개발원의 경우 기술에 특화되어 있거나 내국인 전용 연수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토해양 인재개발원을 확대 개편하여 국내와 국외로 분할하고 인프라 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며, 주요 교육연수를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면 가능한 영역은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할 경우도 정책집행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수립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독립적 조직으로 인해

예산 및 인원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한, 이럴 경우 인원의 신분 보장이 어려워져 좋은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신생기관이 가지는 예산상의 제약도 심하다. 만약 이러한 형태를 가지려 할 경우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숙성된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가 탄탄히 구축되어 인원에 대한 신분 보장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증 접수활동이 자유로운 기관일 경우 오히려 민간 재단법인의 특징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토연구원 GDP 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 센터)는 2011년 12월 설립한 지 1주년이 지난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 조직이다. 국토연구원내 부서로 존립하며, 인원 및 예산을 국토연구원에서 관할한다. 인프라개발협력센터와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기존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미 기 구축된 예산 및 인력이 있으므로 활용여하에 따라 본래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통해 확보하려는 개발컨설팅 등의 기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33년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나라 개발성장시대의 공간계획을 두루 망라한 기관으로서 GDP 센터의 활용은 곧바로 국토연구원의 개발컨설팅 역량을 포괄할 수 있다.

다만, GDP 센터의 확대 개편은 예산 및 인력에서 국토연구원에 그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산하기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산하기관보다는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사실상 더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수립 기능은 횡적인 관계를 통해 성립되므로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할 경우 국제기구 육성 등 다른 형태의 방법을 동원해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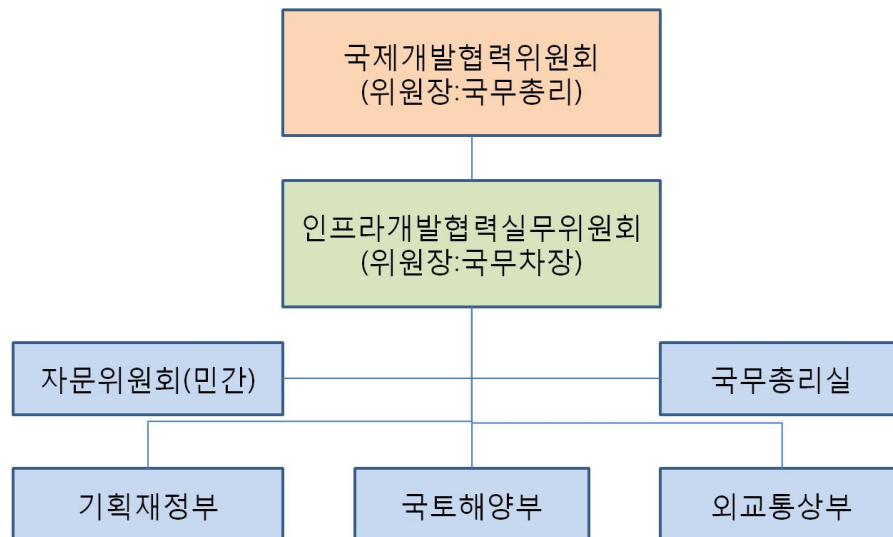
3-2. 중앙정부의 ODA 정책 추진 대응 구조 형성

우리 정부는 2009년 OECD/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ODA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총리실에 개발협력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실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야별 주관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총리실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가차원의 ODA 전략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통해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ODA 기본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 기본법은 각 부처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재정부와 외교부가 수립하여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며,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체계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국토해양분야 ODA 계획을 통합해서 ODA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향후 국토해양부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내부에 ODA업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동시에 G20 인프라개발협력의제와 같은 민간분야와의 협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칭 “인프라개발협력 실무협의회”와 같은, ODA실무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

동 실무위원회의 위상과 운영방향은 아래 <그림 V-3> 과 같이 개괄적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국토해양부 ODA 전략의 실제 수립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V-3> 가칭 “인프라개발협력 실무협의회” 개념도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2007,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09,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2009,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09,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해양부
- 권혁주 외, 2005,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국제개발협력사업」, 글로벌거버넌스와 사회발전연구센터
- 김춘순, 201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체계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김충호, 2012,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구정우 외, 2010,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분석」, 한국사회학회
- 박복영 외, 2008, 「우리나라 대외원조역량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진수 외, 2006, 「유엔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추진전략 및 기여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이형근 외, 2004, 「동북아 경제협력: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경구, 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한국국제협력단
- 이런주,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전승훈 외, 2006,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중장기 정책 및 전략」, 한국국제협력단
- 전승훈 외, 2006,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전승훈 외, 2008, 「개발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정진규 외 3인, 2009,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조진철 외, 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황원규, 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강릉원주대학교
- 국토연구원 GDPC, 2011, 「글로벌개발협력 역량 강화 방안」, 국토연구원GDP센터 개소1주년 세미나 자료집
- 국토해양부, 2011,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단」, 국토해양부 월드뱅크 출장 자료집
- 도충구 외, 2006,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박재영, 2001, 「유엔회의의 이해」, 법문사
박현중, 2007,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도서출판 해남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한국국제협력단, 2009~2010,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연구원·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개발도상국 산업화와 한국의 기여」, KIET·KAID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경대학교·국제개발협력학회, 2011, 「ODA 사업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 체계의 재정립 방안」, 한경대학교·국제개발협력학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해양수산분야 Green ODA(녹색공적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권율 외, 2008,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8-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난주, 2011, 「부산세계원조개발총회의 의의와 효과」, BDI 포커스 제129호, 부산발전연구원
김석호, 1993, 「개발협력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연구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
김진동, 2006,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논의 진전」, 월간 나라경제 06년 4월호, KDI
박수경 외,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논의와 성과」,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미보, 2010, 「OECD/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의 현실」, 한국의 개발협력 2010년 1호, 한국수출입은행
유웅조, 200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함께 원조공여국 역할 강화」, 이슈와 논점 제24호, 국회입법조사처
이계우 외,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주동주, 2008, 「국제원조의 유·무상 효과 논쟁과 한국의 ODA 정책 방향」,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부산발전연구원, <http://www.bdi.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Annual Report”, 2005~20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국외논문

- Arnold, S., 1982, "A Comparative Study of five European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Washington DC:USAID
- Alpert, E., 2005, "Scaling up Aid for Trade : How to Support Poor Countries to Trade Their Way Out of Poverty", Oxfam Briefing Note, Oxford : Oxfam Publishing
- BMZ, 2001, Program of Action 2015, "The German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 Halving Extreme Poverty Worldwide,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BMZ)
- Black, D.L., 1968, "The Strategy of Foreign Aid, Princeton:Van Nostrand
- Blackman, R., 2003, "Project Cycle Management, Teddington:Tearfund
- Brown, A., M. Foster, A Norton and F. Naschold, 2001, "The Status of Sector Wide Approaches, London: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Brown, S., 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New York University Press"
- Brundtland, G.,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urside, C. and 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0, No.4
- Chambers, R., 1983, Rural Development : Putting the Last First, Harlow : Longman
- Chambers, R., 1993, Challenging the Professions : Frontiers for Rural Development, London : ITDG
- Chang, H., A. Fell and M. Laird., 1992,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Assistance Manual :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Paris : OECD/DAC
- Chang, H., A. Fell and M. Laird, 1999,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Paris : OECD
- Chang, H., 2007, Bad samaritans : rich nations, poor policies and the threat to the developing world, London : Random House Business.
- Easterly, W. and E.M. Truman, 2001, "William Easterly Comments on IMF and World Bank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and Poverty. Washington DC : Peterson Institute
- Financial Times, "How to Avoid the Horrors of Stag-deflation", 2008
- Global Insight, "Construction Outlook", 2009
- Growth Commission, "Current Debates on Infrastructure Policy", 2009
- IMF,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2001
- Martinussen, J., 1997, Society, State and Market : A Guide to Competing Theories of Development, London : Zed Books.
- OECD/DAC,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2006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SPECIAL REVIEW OF KOREA", 2008

〈부록 1〉 국토해양분야 분류표

☐ 주택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주택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16030), 저비용 주택개발(1604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 교통·물류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교통 및 물류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21010), 도로운송(21020), 철도운송(21030), 항공운송(21050)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21081)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도로운송, 철도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운송관련 창고,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 건설·수자원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건설 및 수자원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32310), 수력 발전소(23065), 수자원정책/행정관리(1401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14020), 대규모 상수 시스템(14021), 소규모 상수 시스템(14031), 소규모 하수 시스템(14032), 하천개발(1404), 폐기물관리/처리(14050) 농업용수자원(31140) 홍수방지/대책(41050)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수자원보호,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시설(플랜트 시설 등), 하천개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농업용수자원

☐ 도시개발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도시개발	도시개발 및 관리(4303)	

☐ 지역개발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지역개발	농촌개발(43040), 농지개발(31130), 재난방지 및 대비(74010)	농지개발, 재난 방지 및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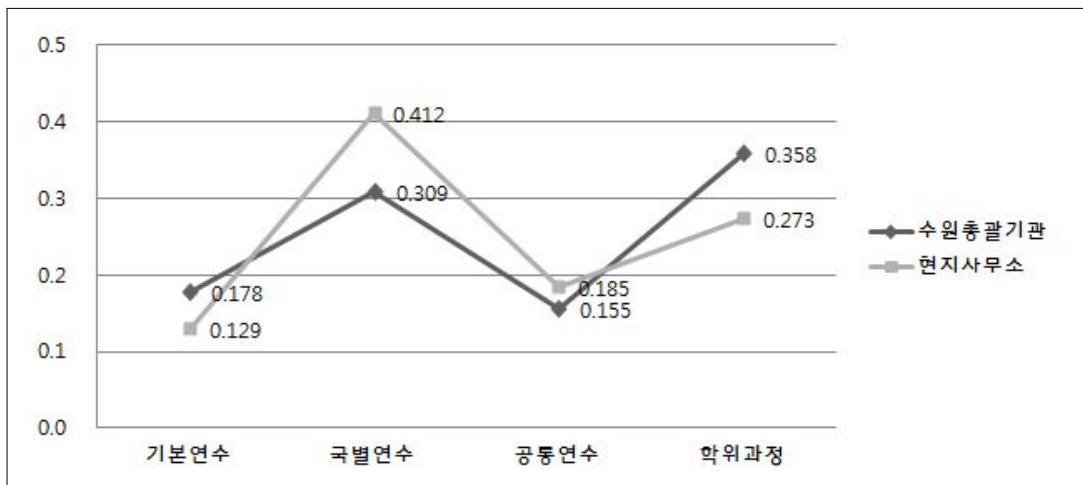
☐ 해양

구분	상세구분	
	KOICA자료(목적코드)	EDCF자료
해양	어업정책/행정/관리(31310), 어업 개발(31320), 어업 교육 및 훈련(31381), 어업 연구(31382)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어업 개발, 어업 교육/훈련, 어업 연구, 수산물 유통지원

〈부록 2〉 KOICA 초청연수사업

□ KOICA의 초청연수 효과 분석

- 연수 사업성 평가보고서(KOICA, 2010)에서는 연수생³⁷⁾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연수형태가 국별연수와 학위과정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요대륙의 현지사무소는 수원총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별연수 형태의 중요도를 크게 보고 있음
- 특히, 아메리카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연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위과정의 확대 원하고 있음



<그림 1> 연수형태 중요성 분석

출처: KOICA 연수생 사업평가서(2010,7)

<표 1> 연수형태 중요성 대륙별 분석

구분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수원총괄기관	기본연수	0.262	0.170	0.147
	국별연수	0.342	0.360	0.256
	공동연수	0.167	0.133	0.144
	학위과정	0.228	0.337	0.453
KOICA 현지사무소	기본연수	0.134	0.100	0.140
	국별연수	0.482	0.398	0.352
	공동연수	0.222	0.149	0.171
	학위과정	0.163	0.353	0.337

주. 본 분석은 AHP분석 결과로서, 값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큼

출처: KOICA 연수생 사업평가서(2010,7)

37) 지역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음. 아시아(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미얀마, 이라크, 요르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몽골, 중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아프리카(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콩고,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아메리카(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유럽(우크라이나), 오세아니아(파푸아뉴기니)

- 상기에서와 같이 KOICA의 사업평가서에서는 장기연수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수생의 대부분이 3주 정도의 단기 연수프로그램의 기간 확대를 요청하는데 반해 1개월 이상의 연수기간은 업무 현실상 참여에 무리가 있음을 밝힘 (대안 제시: 새로운 연수형태 개발, 운용할 필요 있음)

〈부록 3〉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현황

연도	구분	시행기관	국가명	사업명	사업규모 또는 기간
2010년	프로젝트 (2건)	한국수자원공사	케냐	아웬도 상수도 건설사업	2,740달러 / 2년
		한국수자원공사	탄자니아	루피지강유역 다목적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04,987달러 / 30개월
	초청연수 (17건)	건설기술교육원	이라크	이라크 건설 프로젝트 계획	16일
		교통안전공단	필리핀 외 12개국	자동차관리정책 및 자동차검사 시스템 구축	16일
		국립해양조사원	IHO회원국	해양조사 기술	3주
		항만투자협력과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30일
		NH공사	베트남 외 7개국	주택 도시 정책 및 건설기술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공항운영과정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항공보안운영자 과정	15일
		한국공항공사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거리측정시설 보수과정	15일
		한국공항공사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계기착륙시설 보수과정	15일
		한국도로공사	라오스 외 12개국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과정	16일
		한국도로공사	라오스 외 12개국	도로설계 및 교통정책 과정	16일
		한국수자원공사	파키스탄 외 6개국	국제수자원인프라 개발 및 관리 과정	16일
		한국수자원공사	튀니지 외5개국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관리 과정	16일
		한국철도공사	캄보디아 외 18개국	철도정책 및 경영과정	16일
		한국철도공사	베트남	베트남 철도운영 현대화 과정	16일
		NH공사	나이지리아 외 2개국	아프리카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과정	16일
		해외건설협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건설 및 노무관리	30일

〈부록 3〉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현황(계속)

연도	구분	시행기관	국가명	사업명	사업규모 또는 기간
2011년	프로젝트 (2건)	운항정책과	아프리카, 동남아 15개 국	IT기술 기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사업	400천불
		한국도로공사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도 3호선 및 48호선 도로안전시설 개량사업	3,330천불
	중장기 자문단 (1건)	교통안전공단	필리핀	필리핀 대기오염분야 WFA(대기오염)	2명 / 1년
	초청연수 (19건)	건설기술교육원	탄자니아	탄자니아 기간산업 발전	22일
		건설기술교육원	알제리	알제리 공공사업 개발과정	22일
		건설기술교육원	이라크	이라크 중앙 주택개발계획 및 사업관리	22일
		국립해양조사원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해양조사기술	3주
		국토연구원	우간다 등 8개국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6주
		국토지리정보원	베트남 등 13개국	측량 및 지도제작기관 역량강화	3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필리핀	필리핀 공항계획 및 관리	미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라크	이라크 KRG 공항 운영	미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및 아프리카	ICAO 공동연수	미정
		한국공항공사	필리핀, 콩고 등	ICAO 공동연수(10~12)	2주
		한국공항공사	베트남, 페루 등	레이더접근관제 (RAC)	3주
		한국도로공사	페루 등 8개국	도로경영 및 교통기술	16일
		한국도로공사	이집트	이집트 도로운영 역량 강화('10-'12)	16일
		한국도로공사	캄보디아	캄보디아 도로관리 및 유지('10-'12)	16일
		한국철도공사	페루 등 21개국	철도운영 현대화과정 1,2	3주
		한국철도공사	페루 등 21개국	철도정책 및 경영과정	18일
		한국철도공사	튀니지	튀니지 전동차 운영 및 유지보수교육훈련	3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베트남 등 15개국	주택정책과 토지정책	3주
		해외건설협회	이라크	이라크 건설 및 노무 관리	16일

〈부록 4〉 산하기관 자체연수사업 현황

연도	시행기관	국가명	사업명	인원	위탁기관
2009	수자원 공사	ADB 등 국제기구	ADB Twinning Forum	50	ADB
		부탄	부탄 TCC&인도 현지진단 및 교육	-	ADB
		부탄	남아시아 수도역량강화(부탄TCC/기술직)	17	ADB
		부탄	남아시아 수도역량강화(부탄TCC/고위직)	4	ADB
		태국	태국 PWA 현지진단 및 지도	-	USAID
		중국	중국수질오염통제 관리	8	KIST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하천관리	5	UNDP
		태국	태국 PWA Study Visit	6	USAID
		필리핀 등 3개국	아시아통합수자원과정	8	서울대 공동
		태국	태국 PWA수질관리(내한)	4	USAID
	도로공사	베트남 등 10개국	해외사업 핵심역량강화	22	자체예산
	건기교	우즈베키스탄	건설사업고나리 *건기교(30%), 공제조합(50%), 대건협(20%) 분담	34	
2010	수자원공사	라오스	라오스 현지진단	-	ADB
		태국	태국 PWA 수질관리(현지교육)	32	USAID
		라오스	라오스 수도역량강화(기술직)	17	ADB
		라오스	라오스 수도역량강화(고위직)	4	DB
		태국	태국 PWA 시스템자동화개선(내한)	4	USAID
		이집트	이집트 RO(역삼투) 시스템 관리	5	AOI(한기대)
		부탄	부탄 TCC 모니터링 및 현지지도	-	ADB
		태국	태국 PWA 시스템자동화개선 (현지)	15	USAID
		인도	인도 현지진단	-	ADB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SUVSOZ 현지진단(1차_수질분석)	-	ADB
	도로공사	베트남 등 9개국	해외사업 핵심역량강화	18	자체예산
	건기교	세네갈	건설사업관리 *건기교(30%), 공제 조합(50%), 대건협(20%) 분담	20	
		가나	도로건설	16	중흥건설
2011	수자원공사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SUVSOZ 현지진단(2차_NRW, 자동화)	-	ADB
		탄자니아	탄자니아 수도수질분석	4	탄자니아
		필리핀	필리핀 산호세델몬트시수도공사 현지진단(수도수질)	-	USAID
		라오스	라오스 현지모니터링	-	ADB
		필리핀	필리핀 SJDMCWD 수도관리(고위직)	4	USAID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부감사관리	24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 SJDMCWD 수도관리(실무직)	3	USAID
		스리랑카	스리랑카 마을상수도	2	스리랑카
	건기교	베트남	초고층 건축물(1차)	9	한신공영
		케냐	직업훈련교사 양성(1차)	19	EDCF 지원사업
		베트남	초고층 건축물(2차)	10	한신공영
		케냐	직업훈련교사 양성(2차)	34	EDCF 지원사업

〈부록 5〉 국토해양분야 ODA 활용사례

1. 국내 사례

①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1) 개요

-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추진주체 : 기획재정부 주관, KDI에 전담부서 설치 및 위탁운영
- 진행과정: 대상국 선정 → 수요조사 → 연구진 구성 → 세부 실태조사 → 중간 보고회 → 정책자문(고위·실무자 연수) → 현지·국내 전파세미나

2) 지원 현황 및 성과

- 2004년 10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이 2008년 25억 원, 2009년 50억 원으로 급증. 2010년에도 7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2011년에는 150억 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
- 2009년 KDI는 15개국 124개 과제에 대한 개발경험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2010년에도 베트남을 비롯한 7개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
 - 동남아시아 : 베트남 2011~20년 경제·사회발전 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인도네시아: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캄보디아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 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정책자문; 카자흐스탄: 산업혁신개발계획
 - 기타 :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 지원국가, 정책자문 주제, 연구진 선정 체계화와 정책 컨설팅시 활용 가능한 우리의 정책경험을 맞춤형(Customized) 콘텐츠로 구축
- 개도국은 정책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후속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
 - 베트남의 경우 수출금융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자문에 따라 ‘베트

남 개발은행' 설립; 우즈베키스탄은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별경제자유구역 설립 제안을 수용하여 나보이경제특구 지정 등

- 경제발전 경험의 모듈화³⁸⁾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지금까지의 KSP 지원 사례, 수원국 정부의 호응도 및 발전경험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발전경험 중 20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을 선정함

②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1) 개요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17일 기술, 섬유, 기계, 해양, 항공, 방위,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협력 사무국 설치에 합의
- 목표 :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전방위 경제협력을 추진
 -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경험,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잠재력이 상호보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동반 성장 기대
- 민간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 참여 위주의 협력에서 정부간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으로 협력방식을 전환
- 정부간 협력의 틀 안에서 교육훈련사업, ODA 지원사업, 투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추진
 - 교육훈련을 정례화 하여 인니 측 능력배양 및 네트워크 형성
 - 교육훈련 사업과 ODA 사업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 한국의 투자가 수반되는 민자사업을 상호 발굴하여 추진

38) 발전경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① 새마을운동, ② 수출진흥정책, ③ 개발연대 금융, ④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집행, ⑤ 중화학 공업화 정책(1973~79년)에서 나타난 한국의 산업화 경험, ⑥ 경제개발과 금융, ⑦ 산림녹화, ⑧ 한국의 부가가치세 8개 과제에 대해 발전경험을 콘텐츠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직접 정책자문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처럼 평가가 미흡하게 나온 이유는 첫째, 구체적 정책사례 중심이 아니라 시대순으로 각종 제도·정책 개요를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둘째 1960~80년대 발전경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최근 사례들이 부족하며, 셋째 우리의 성공사례만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듈화가 추진됨. 모듈은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① 단기간 내의 고도성장 및 과거와 현재의 여러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② 정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③ 정부의 제도·법·정책적 혁신사례와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대기업의 성장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고려됨(강인수 외, 2010)

2) 분야별 협력

- 협력분야 :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협력분야 산업, 에너지, 인프라, 농수산, ODA 등 개발협력, 발전경험공유(KSP), FTA 등
- 산업 · 에너지 협력
 -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우리기업은 120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
 - 한국 산업단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컨설팅 및 교육·연수기회 제공
 - 포스코 일관제철소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관세 등 인센티브 제공
 - 서마두라 해상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광권 연장 협조, 인도네시아 측 원자력 관련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지원 등 협력
- 건설·인프라 협력
 - 양국 교통협력 MOU 체결 추진 예정, 해운협정 체결도 추진 계획 중
- 농수산 협력
 - 한-인니 농업협력 MOU 체결 추진 예정, 농업중심 복합산업단지 조성 위한 기반시설 조성 요청
- KSP 및 ODA 협력
 - 경제개발 컨설팅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IEDECS)의 실행전략 수립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200만달러 내외의 정책컨설팅지원 검토
 - ODA 협력 : ICT, 수자원, 교통 등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KSP를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인 프로젝트 지원 계획

③ 한국국제협력단 장기연수

1) 개요

- 장기연수는 KOICA가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초청해서 경제, 통상, 농촌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 한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개발 촉진이 목적으로 1년이상 학위과정으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참여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아주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7개 대학

- KOICA 초청연수사업 평가보고서('10. 7)에서 장기연수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 도출(부록1 참고)

2) 지원 현황 및 성과

-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총 35코스를 통해 608명의 석사학생을 배출하였으며, 2009년에는 7개 대학에서 175명의 연수생이 프로그램 참가 중

<표 2> Scholarship Program 코스 커리큘럼

학교	날짜	코스 커리큘럼
고려대학교	2010.2~2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Commerce - International Peace&Security -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operation - Regional Studies etc.
이화여자대학교	2010.1~2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 Korean Economy - ODA Management and Evaluation -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 Special Topics in Development - Advanced Topics in Development - Trade and Development -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서울대학교	2009.8~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Commerce Major - Labor and Social Policy in Globalizing Economy - Understanding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 China's Banking and Finance

2. 국외 사례

①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³⁹⁾

- 최근 수자원공사(K-Water)가 파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해외 PPP사업임
- 국토해양부 주도로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펀드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임

□ 사업개요

- 수로식 민자수력발전설비(147MW) 건설 및 운영(30년)
 - 총사업비 359백만 달러(BOO 방식)
- 국내기업이 사업주 및 사업운영(수자원공사), EPC 등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
-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국가리스크가 큰 개도국 민자사업 진출 성사
-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공동심사 및 공동지원 추진
- 기대효과
 - 아국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최초 해외 수력발전사업으로 관련기업의 해외재생에너지시장 진출 기반 구축
-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수출 외에도 배당(692백만 달러) 및 운영수입(132백만 달러) 등 총 879백만 달러 외화가득 효과 기대
- 수은 탄소펀드 연계지원 및 CDM 등록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기대(연간 29만 톤, 총 10년에 걸쳐 37백만 톤 상당)

② 필리핀 Ilijan 가스복합화력발전소⁴⁰⁾

- 한국전력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외 PPP사업인 필리핀 Ilijan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39) 해외건설 파이낸싱 다각화 세미나 ('10.12.6) 자료중 수출입은행 발표자료 인용

40) 수출입은행 자료 인용

<표 3> 필리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구분	내용
Project Company	KEPCO Ilijan Power Corporation (KEILCO)
사업주	- 한전(51%) - Mitsubishi(21%) - Mirant(20%, 미) - Kyushu(8%, 일)
사업내용	1,200MW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및 양도 (사업기간 20년, BOT방식)
총사업비용	711백만달러 (자본금236백만달러, 차입금475백만달러)
전력구매 및 연료공급자	필리핀 국영전력공사 (NPC)
발전소 운영자	KEILCO(한전이 인력 파견, 경영 및 기술지원)
발전소 건설사	Raytheon(REOL, UEI), Mitsubishi Corp(MC) -REOL(Raytheon Ebasco Overseas Ltd.): 건설 -UEI(United Engineers Int's) : 자재공급 -MC : 가스터빈공급 -대림산업 : REOL과 UEI의하청 (수은수출자금지원대상~ 대림/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등 한국계약분 1.8억달러

<부록 6>주요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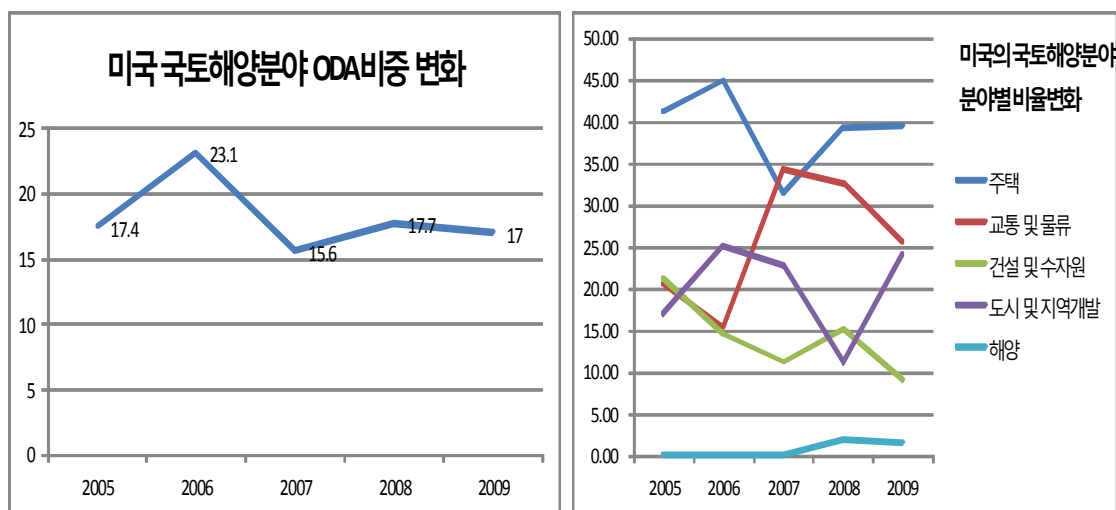
1 미국

<표 4> 미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1983.21	41.11	2520.14	44.84	1216.31	31.45	2199.84	39.27	1998.52	39.48
교통 및 물류	991.49	20.55	862.91	15.35	1326.79	34.31	1823.13	32.54	1295.05	25.58
건설 및 수자원	1023.74	21.22	817.79	14.55	432.16	11.18	846.78	15.12	461.91	9.12
도시 및 지역개발	823.07	17.06	1415.49	25.18	883.5	22.85	623.35	11.13	1222.17	24.14
해양	3.23	0.07	4.46	0.08	8.24	0.21	108.93	1.94	84.63	1.67
ODA 총계(A)	27752.1	-	24292.7	-	24724.5	-	31660.7	-	29747.7	-
국토해양분야 총계	4824.74	100.00	5620.79	100.00	3867	100.00	5602.03	100.00	5062.28	100.00
(A)대비 비중	17.4	-	23.1	-	15.6	-	17.7	-	17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미국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23.1%)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17% 전후를 유지한다.

특히 주택, 교통 및 물류,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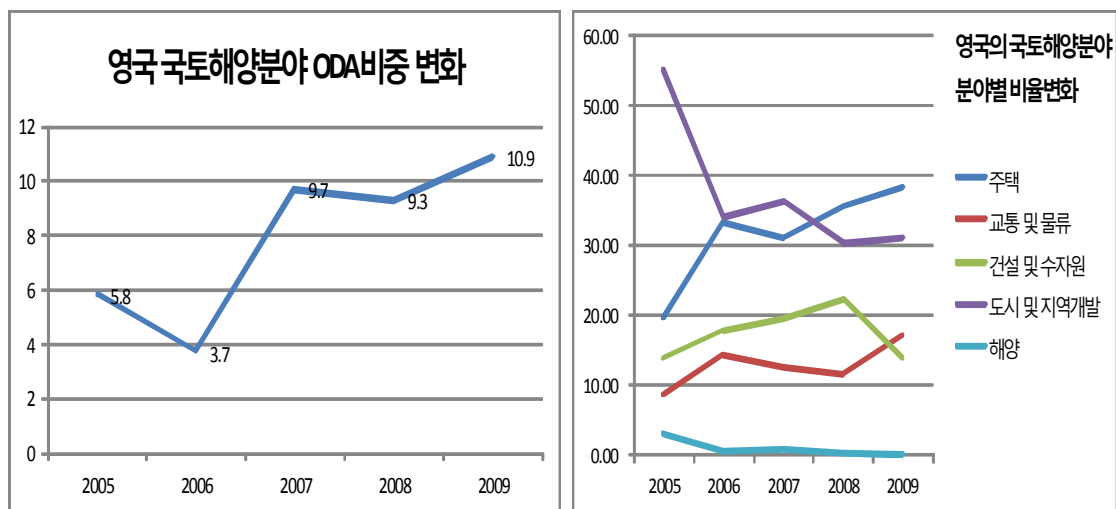
2 영국

<표 5> 영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95.73	19.45	113.8	33.30	221.7	31.10	256.96	35.52	318.06	38.25
교통 및 물류	42.43	8.62	48.55	14.20	88.9	12.47	83.77	11.58	140.98	16.96
건설 및 수자원	68	13.82	61.13	17.89	139.06	19.51	160.89	22.24	114.88	13.82
도시 및 지역개발	270.93	55.05	116.58	34.11	258.14	36.21	219.15	30.29	257.47	30.97
해양	15.03	3.05	1.73	0.51	5.01	0.70	2.65	0.37	0.09	0.01
ODA 총계(A)	8508.55	-	9291.51	-	7379.28	-	7799.93	-	7599.1	-
국토해양분 야 총계	492.12	100.00	341.79	100.00	712.81	100.00	723.42	100.00	831.48	100.00
(A)대비 비중	5.8	-	3.7	-	9.7	-	9.3	-	10.9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영국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까지는 5.8%, 2006년에는 3.7%를 기록하는 등 전체 OD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부터 10%전후로 상승, 2009년에는 10.9%를 기록했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점차 주택부문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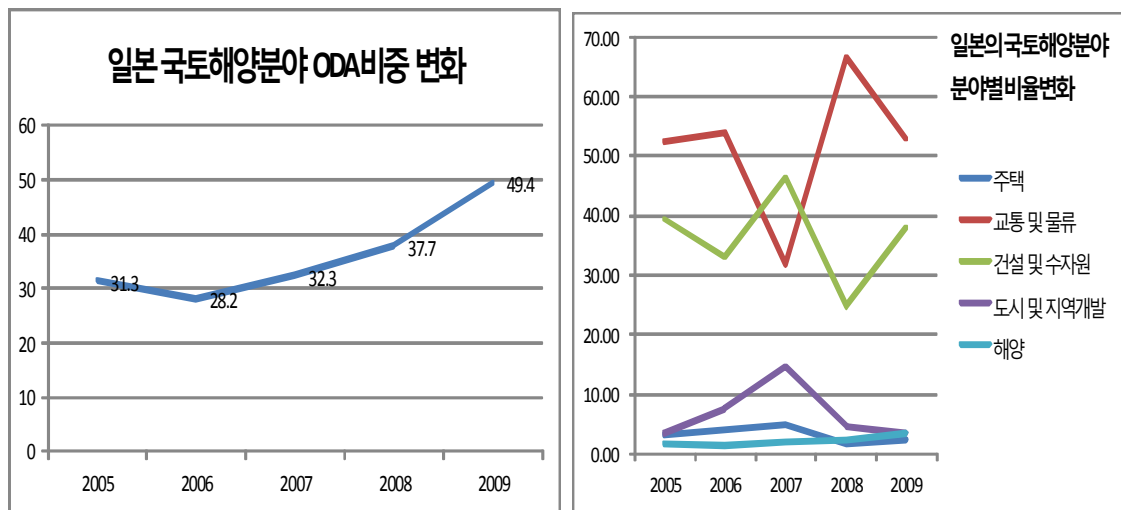
3 일본

<표 6> 일본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173.79	3.20	159.05	4.16	204.92	4.91	121.62	1.80	161.89	2.20
교통 및 물류	2847.85	52.44	2063.19	53.97	1330.98	31.91	4510.5	66.60	3888.71	52.85
건설 및 수자원	2133.05	39.28	1254.81	32.82	1938.38	46.47	1671.49	24.68	2796.01	38.00
도시 및 지역개발	181.91	3.35	287.1	7.51	608.75	14.59	317.49	4.69	261.43	3.55
해양	93.79	1.73	58.58	1.53	88.1	2.11	151.28	2.23	249.98	3.40
ODA 총계(A)	17337.8	-	13561.8	-	12912.3	-	17963.8	-	14887.9	-
국토해양분야 총계	5430.39	100.00	3822.73	100.00	4171.13	100.00	6772.38	100.00	7358.02	100.00
(A)대비 비중	31.3	-	28.2	-	32.3	-	37.7	-	49.4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일본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3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49.4%를 기록하는 등 전체 ODA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건설 및 수자원 부문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집행하고 특히 교통 및 물류부문은 2007년(31.91%)을 제외하면 50%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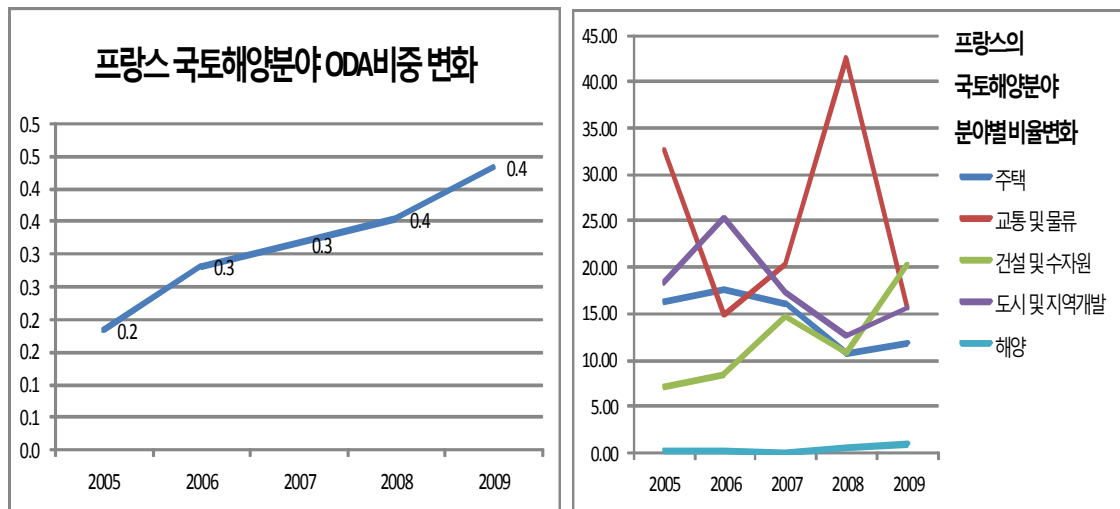
4 프랑스

<표 7> 프랑스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264.48	16.29	492.11	17.60	433.05	16.15	359.62	10.65	469.15	11.82
교통 및 물류	530.26	32.65	415.7	14.87	539.64	20.13	1432.25	42.41	622.79	15.69
건설 및 수자원	114.86	7.07	237.53	8.50	391.54	14.60	361.58	10.71	805.86	20.30
도시 및 지역개발	298.2	18.36	704.81	25.21	462.53	17.25	420.84	12.46	616.16	15.52
해양	3.06	0.19	3.21	0.11	0.26	0.01	20.4	0.60	33.71	0.85
ODA 총계(A)	8862.15	-	9944.17	-	8463.53	-	9537.04	-	9172.12	-
국토해양분 야 총계	1210.86	100.00	1853.36	100.00	1827.02	100.00	2594.69	100.00	2547.67	100.00
(A)대비 비중	0.2	-	0.3	-	0.3	-	0.4	-	0.4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프랑스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1%이하를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국토해양 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부문이 2008년에는 42.41%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해양분야를 제외하면 10~20%사이의 비율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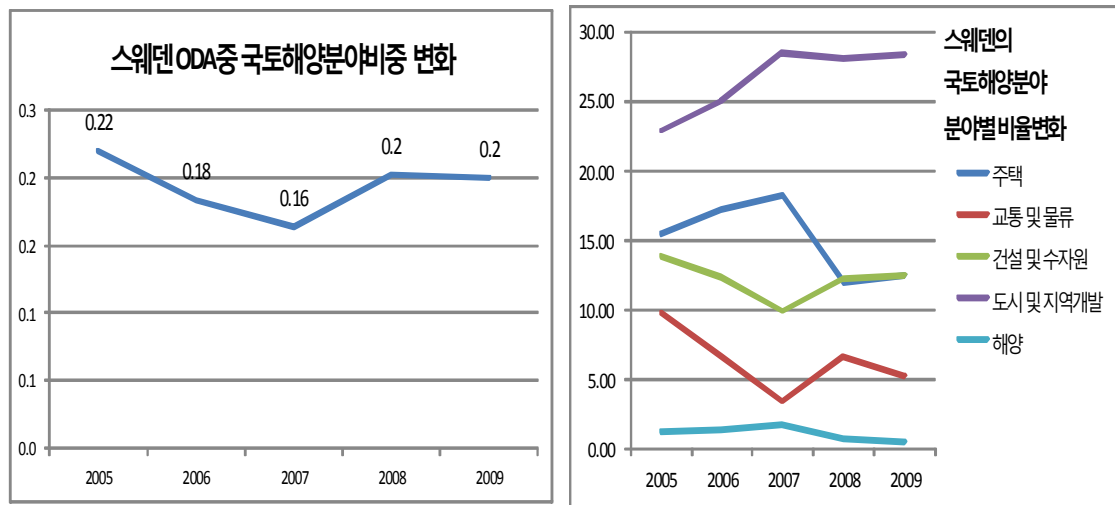
5 스웨덴

<표 8> 스웨덴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77.05	15.51	90.73	17.29	87.49	18.20	76.01	11.95	75.64	12.53
교통 및 물류	48.15	9.69	34.76	6.63	15.97	3.32	42.03	6.61	32.06	5.31
건설 및 수자원	68.73	13.84	64.84	12.36	47.4	9.86	77.85	12.24	75.57	12.52
도시 및 지역개발	113.76	22.90	131	24.97	137.16	28.53	178.85	28.11	170.92	28.32
해양	6.53	1.31	7.47	1.42	8.18	1.70	4.72	0.74	2.81	0.47
ODA 총계(A)	2255.87	-	2851.89	-	2932.22	-	3145.17	-	3014.28	-
국토해양 분야 총계	314.22	100.00	328.8	100.00	296.2	100.00	379.46	100.00	357	100.00
(A)대비 비중	0.22	-	0.18	-	0.16	-	0.2	-	0.2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스웨덴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0.2% 전후를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 건설 및 수자원 분야가 10%대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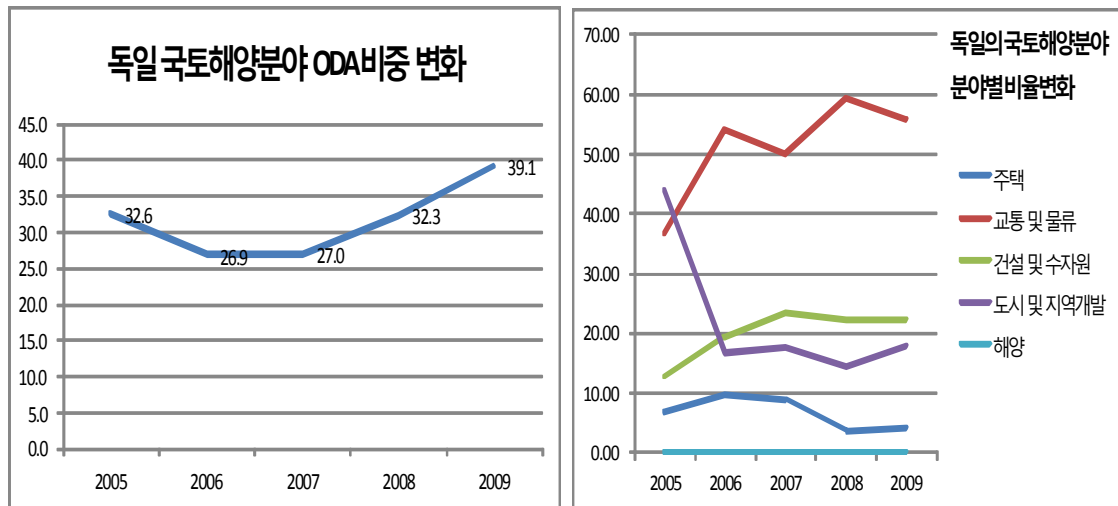
6 독일

<표 9> 독일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205.29	6.81	245.64	9.64	231.44	8.89	152.19	3.74	153.18	4.14
교통 및 물류	1105.29	36.66	1377.68	54.04	1302.59	50.04	2421.27	59.42	2063.36	55.79
건설 및 수자원	382.6	12.69	497.14	19.50	607.17	23.32	906.8	22.26	820.56	22.19
도시 및 지역개발	1319.1	43.75	426.42	16.73	457.99	17.59	592.77	14.55	658.57	17.81
해양	2.7	0.09	2.57	0.10	4.15	0.16	1.54	0.04	2.83	0.08
ODA 총계(A)	9236.49	-	9477.18	-	9644.36	-	12607	-	9452.6	-
국토해양분 야 총계	3014.98	100.00	2549.45	100.00	2603.34	100.00	4074.57	100.00	3698.5	100.00
(A)대비 비중	32.6	-	26.9	-	27.0	-	32.3	-	39.1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독일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26.9~39.1%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2005년을 제외(36.66%)하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 및 수자원,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20%, 10%대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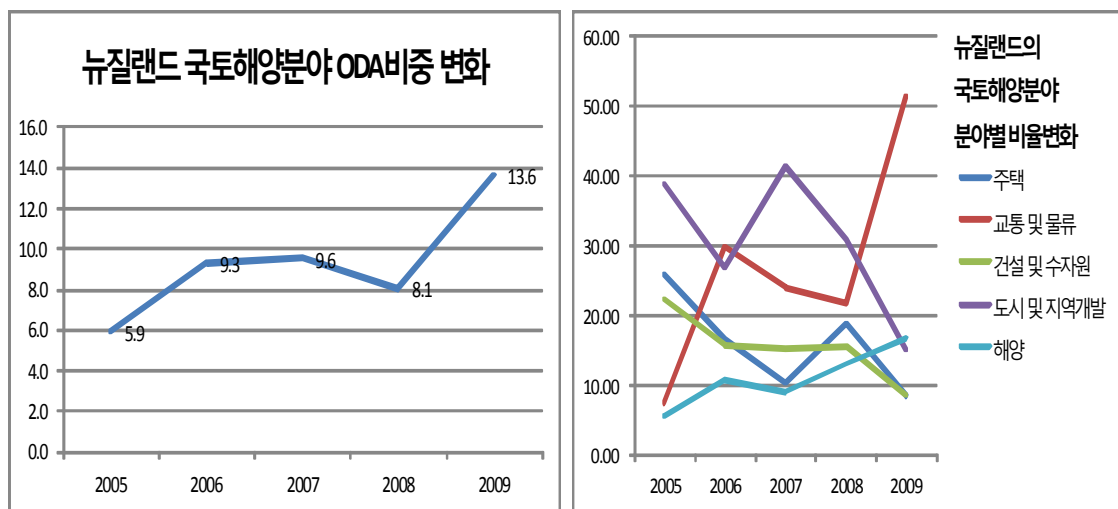
7 뉴질랜드

<표 10> 뉴질랜드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3.43	25.87	3.15	16.62	2.44	10.33	4.22	18.84	2.6	8.43
교통 및 물류	1	7.54	5.67	29.92	5.68	24.06	4.87	21.74	15.8	51.23
건설 및 수자원	2.97	22.40	3.01	15.88	3.61	15.29	3.5	15.63	2.63	8.53
도시 및 지역개발	5.14	38.76	5.07	26.75	9.75	41.30	6.9	30.80	4.65	15.08
해양	0.72	5.43	2.05	10.82	2.13	9.02	2.91	12.99	5.16	16.73
ODA 총계(A)	223.79	-	202.8	-	247.08	-	277.79	-	225.98	-
국토해양분 야 총계	13.26	100.00	18.95	100.00	23.61	100.00	22.4	100.00	30.84	100.00
(A)대비 비중	5.9	-	9.3	-	9.6	-	8.1	-	13.6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뉴질랜드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0%이하였으나 2009년부터 10%선을 돌파 (13.6%) 했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세부 분야들 간의 비중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었는데 30%이하를 유지하던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009년 들어 51.23%를 기록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택, 건설 및 수자원 분야가 10%대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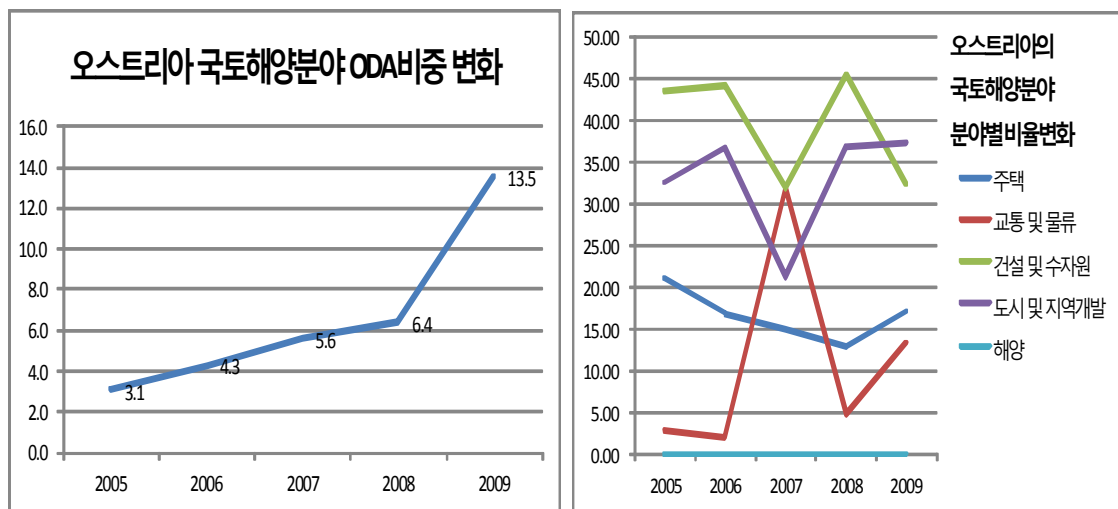
8 오스트리아

<표 11> 오스트리아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8.11	21.10	7.82	16.97	11.3	14.94	10.46	12.96	12.39	17.04
교통 및 물류	1.1	2.86	1	2.17	24.18	31.96	3.92	4.86	9.74	13.40
건설 및 수자원	16.77	43.63	20.4	44.26	24.15	31.92	36.58	45.32	23.44	32.24
도시 및 지역개발	12.46	32.41	16.87	36.60	16.03	21.19	29.76	36.87	27.13	37.32
해양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ODA 총계(A)	1252.72	-	1078.69	-	1358.77	-	1265.79	-	537.46	-
국토해양 분야 총계	38.44	100.00	46.09	100.00	75.66	100.00	80.72	100.00	72.7	100.00
(A)대비 비중	3.1	-	4.3	-	5.6	-	6.4	-	13.5	-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오스트리아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3.1%에서 13.5%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건설 및 수자원 분야와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 2007년에는 교통 및 물류부문이 두 분야를 추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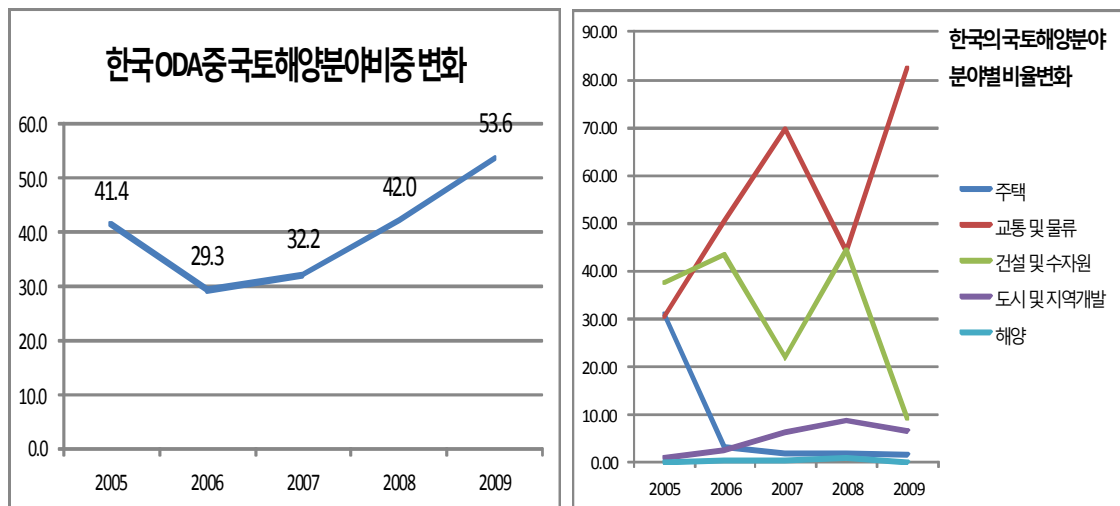
9 한국

<표 12> 한국의 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	84.25	30.93	6.51	3.29	6.44	1.90	12	1.96	13.15	1.69
교통 및 물류	82.92	30.44	99.54	50.33	235.89	69.54	268.33	43.92	641.19	82.44
건설 및 수자원	102.27	37.55	86.09	43.53	74.52	21.97	270	44.20	70.86	9.11
도시 및 지역개발	2.39	0.88	5.16	2.61	21.28	6.27	53.93	8.83	51.08	6.57
해양	0.55	0.20	0.48	0.24	1.08	0.32	6.65	1.09	1.44	0.19
ODA 총계(A)	657.79	-	675.5	-	1053.26	-	1454.95	-	1450.15	-
국토해양분야총계	272.38	100.00	197.78	100.00	339.21	100.00	610.91	100.00	777.72	100.00
(A)대비 비중	41.4	-	29.3	-	32.2	-	42.0	-	5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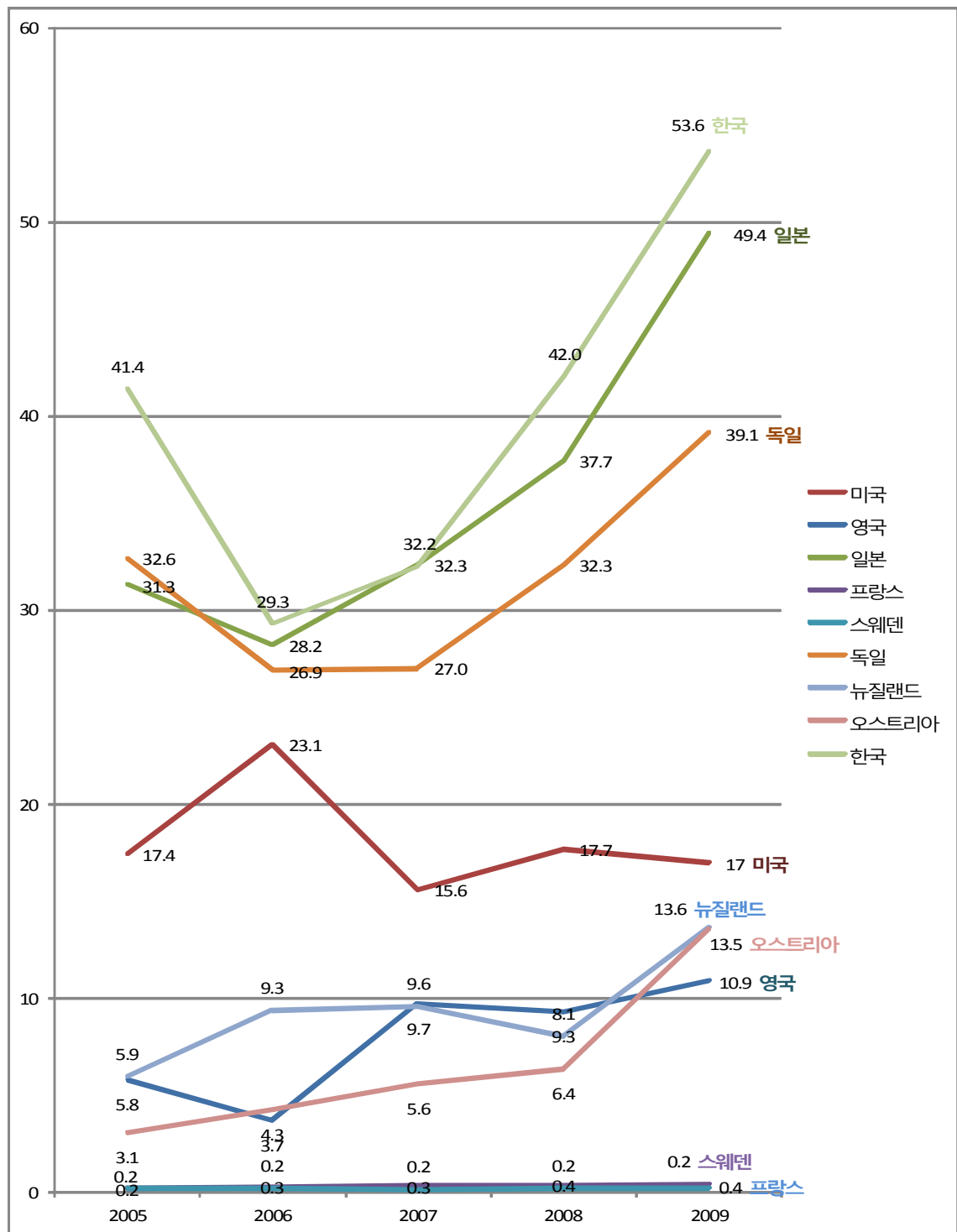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istics 2011년 11월 자료 재구성



한국의 ODA에서 국토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최저 29.3%(2006년)에서 최고 53.6%로 타국 대비 높은 편이다.

국토해양 부문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건설 및 수자원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 2009년에는 교통 및 물류부문이 82.2%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10 검토대상 국가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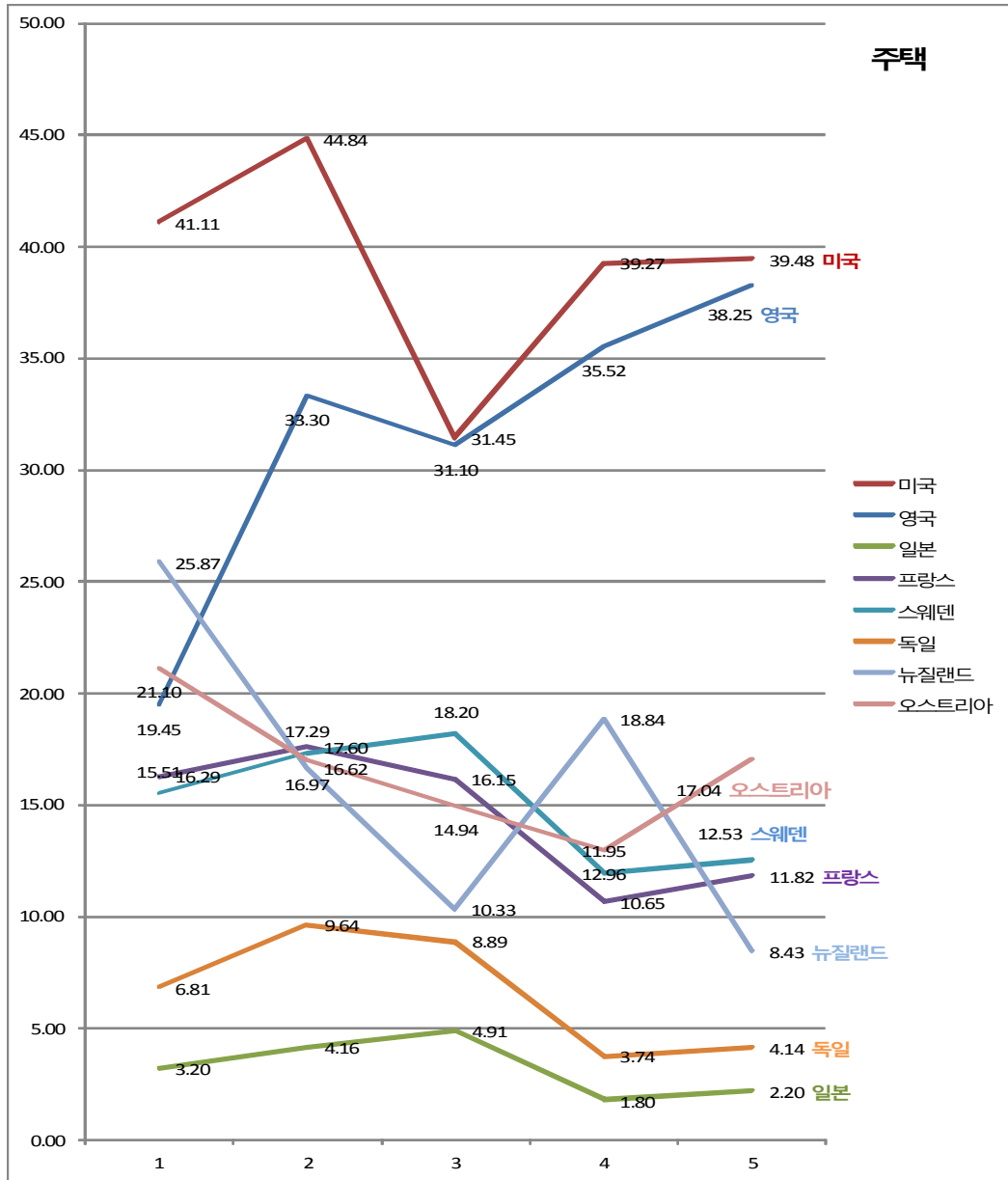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은 국토해양분야 ODA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을 형성,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다.

미국은 20%전후에서 등락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는 약 하향세를 보이고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은 모두 10%이하의 비율을 유지해왔지만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국토해양분야 ODA의 비중이 전체 ODA의 1%이하를 유지한다.

검토 대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분야ODA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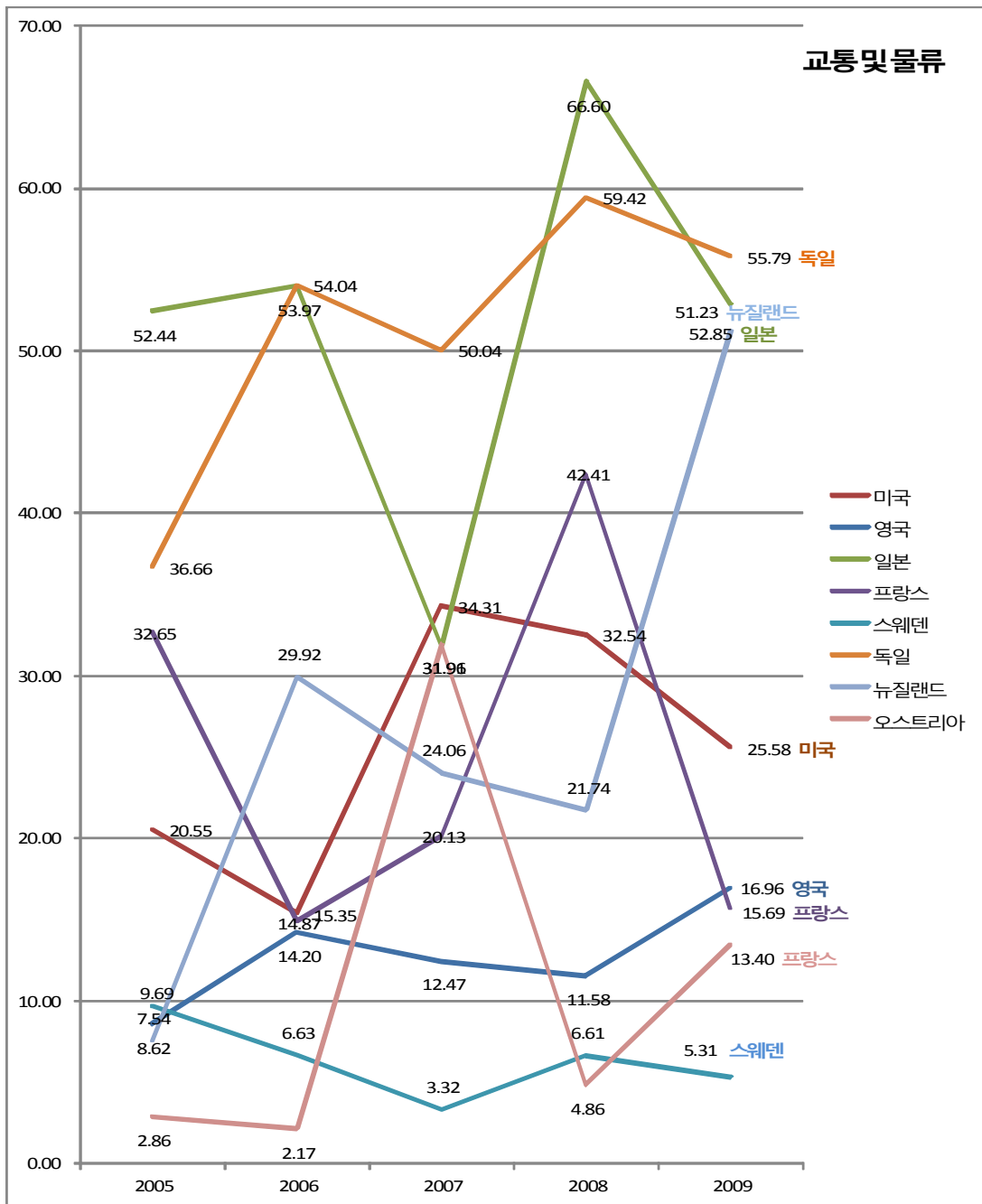
11 국토해양분야 분야별 국가간 비교

1)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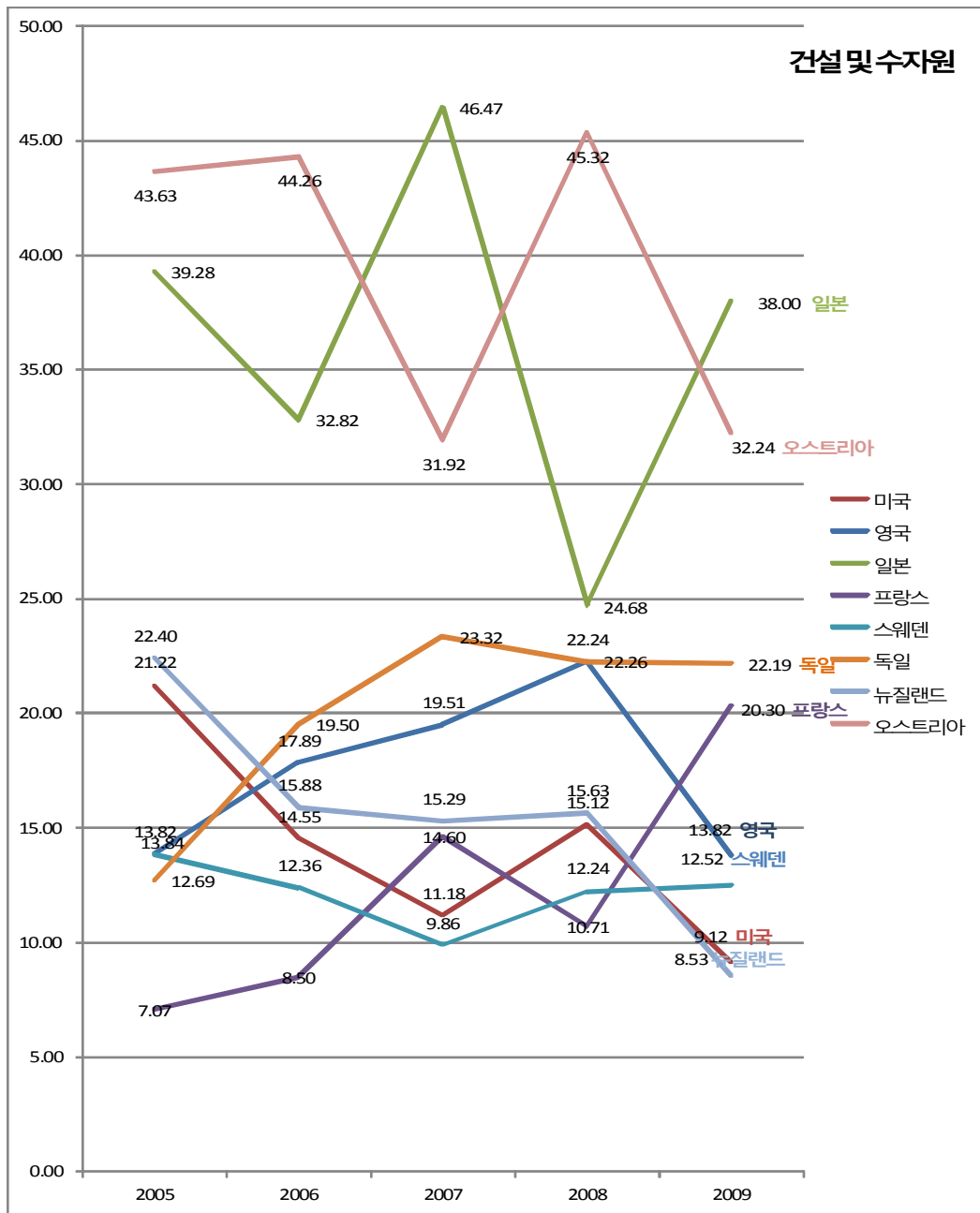
주택부문 ODA에서는 미국이 수위 최저 31.45%(2007), 최고 44.84%(20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 뒤를 가파른 추세로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가 10%에서 20%사이의 비중으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독일과 일본은 10% 미만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교통 및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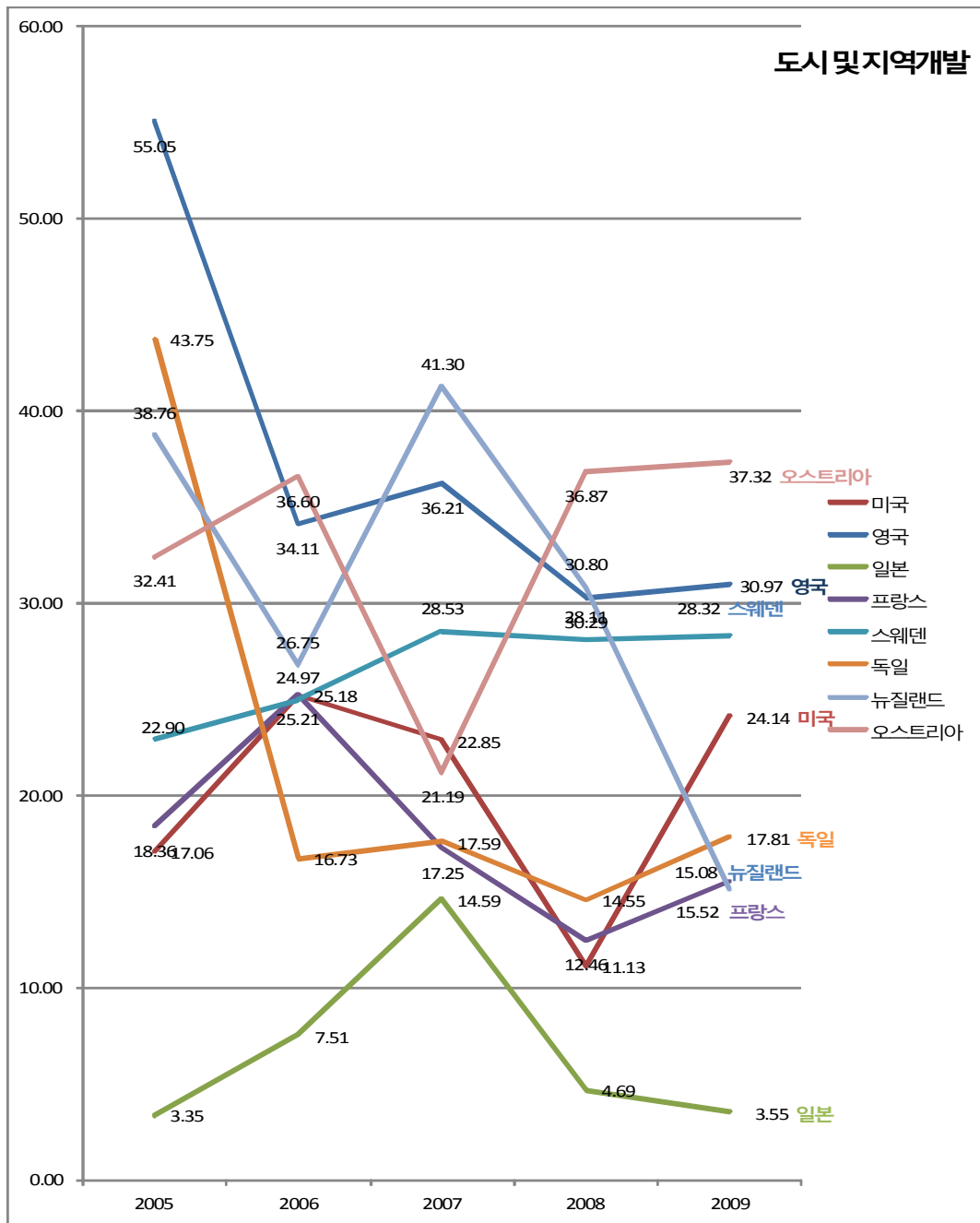
교통 및 물류부문 ODA에서는 독일(최저 50.04%(2007년), 최고 59.42(2008년))과 일본(최저 31.95%(2007년), 최고 66.6%)이 서로 번갈아 가며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에는 뉴질랜드가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10~20%범위에서, 스웨덴은 10%이하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3) 건설 및 수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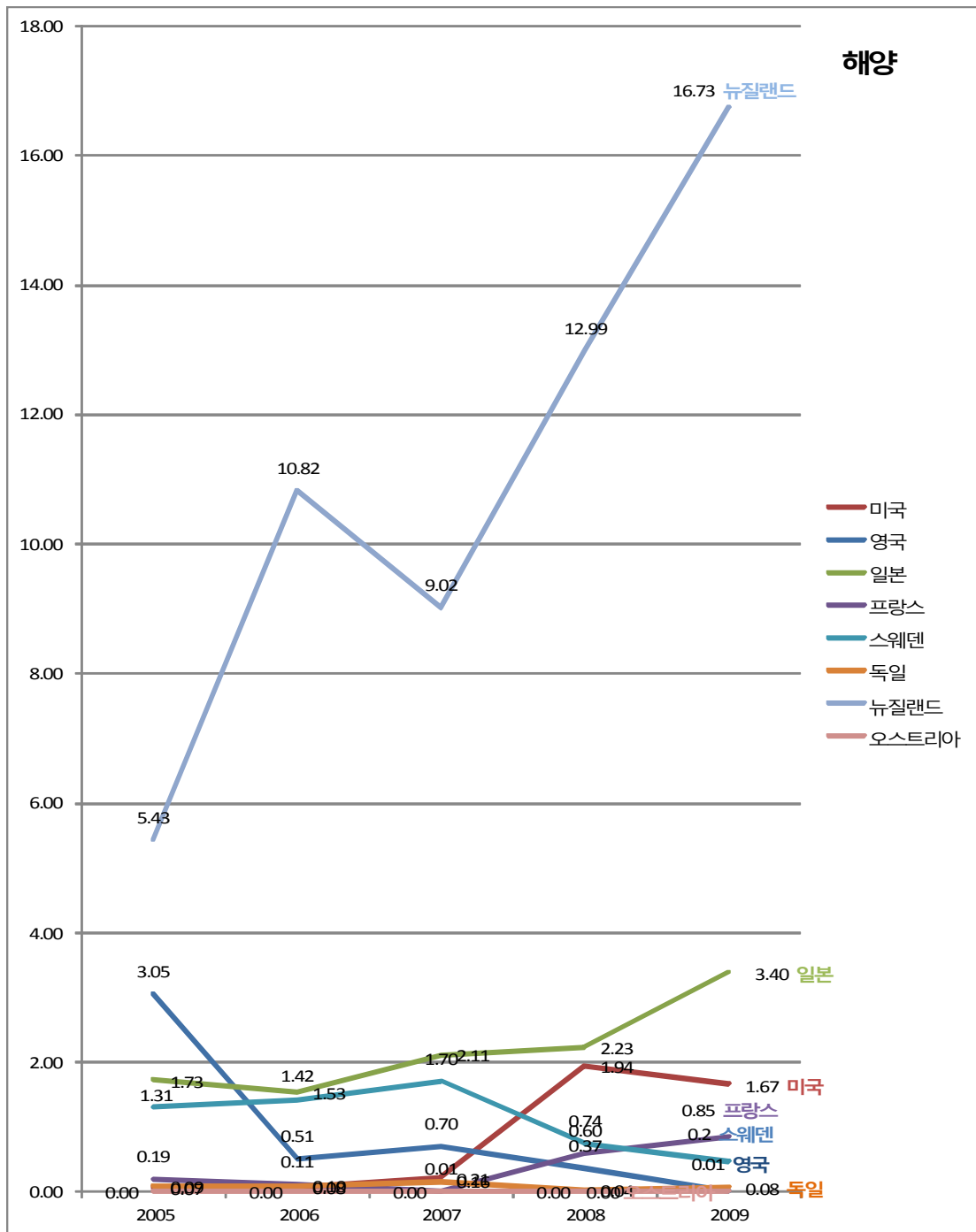
건설 및 수자원부문 ODA에서는 일본과 오스트리아가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저 24.68%(2008년) 최고 46.47%(2007년)을 기록하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최저 31.92%(2007년) 최고 45.32%(2008년)을 기록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이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와 미국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4) 도시 및 지역개발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는 영국이 초기(2005년)에 55.05% 이상을 기록하여 수위를 차지하다가 점차 30%대로 낮아졌고 독일도 2005년도에는 43.75%를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계속 20%대로 낮아졌다. 뉴질랜드는 40%대에서 10%대까지, 오스트리아는 20%~3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5) 해양



해양분야 ODA의 경우 뉴질랜드(2005년 5.43%~2009년 16.73%)를 제외하면 검토대상 국가 모두가 4%이하를 기록했다.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면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